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6월항쟁, 촛불혁명, 한국 민주주의 30년의 넘나듦과 나아감

- 일시 2017. 6. 7.(수)~6. 8.(목)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민주화 30년,
6월항쟁과
촛불혁명

-
2017. 6. 7.(수)
오후 13:30~18:30

• 주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Korea Democracy Foundation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6월항쟁, 촛불혁명, 한국 민주주의 30년의 넘나듦과 나아감

- 일시 2017. 6. 7.(수)~6. 8.(목)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DAY
1

민주화 30년,
6월항쟁과
촛불혁명

-
2017. 6. 7.(수)
오후 13:30~18:30

행사일정표



민주화 30년,
6월항쟁과 촛불혁명

2017. 6. 7.(수)
오후 13:30~18:30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13:30~13:45

•개회식

13:45~15:45

제1부 6월항쟁과 민주화의 의미, 주체, 쟁점 (사회_정해구, 성공회대)

- 발표 5공화국 헌법과 6·29선언 정일준(고려대)
6월항쟁과 시민운동의 태동 정상호(서원대)
'87 노동자대투쟁 30주년, 노동운동의 현주소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토론 이명식(폴리뉴스), 조영재(명지대), 노중기(한신대)

15:45~16:00

•휴식

16:00~18:00

제2부 6월항쟁의 역사적 좌표와 촛불혁명 (사회_정근식, 서울대)

- 발표 한국 근현대사 속의 6월민주항쟁: 3·1운동, 4월혁명과 비교 오제연(성균관대)
6월항쟁과 11월 촛불혁명: 반복과 차이 손호철(서강대)
- 토론 안진걸(참여연대), 박태균(서울대), 백승욱(중앙대)

18:10~18:30

제3부 출판기념식

행사일정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

2017. 6. 8.(목)
오전 10:00~18:00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10:00~10:30

• 개회식

10:30~12:30

제1부 민의가 반영되는 통합의 정치 (사회: 김수진, 이화여대)

- 발표 헌법과 권력구조 강원택(서울대)
정당과 선거: 개혁의 이슈와 과제들 박원호(서울대)
한국의 행정개혁: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치 강화 한정훈(서울대)
국회개혁 가상준(단국대)
정치참여 임성학(서울시립대)
- 토론 김영태(목포대), 서복경(서강대), 윤성이(경희대)

12:30~13:50

• 중식

13:50~15:50

제2부 혁신과 배려의 경제 (사회: 김태동, 성균관대)

- 발표 성장-분배 논쟁과 경제민주화 이정우(경북대)
사회혁신과 사회적 경제 정태인(칼플라니연구소)
한국의 노동, 진단과 과제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토론 박상인(서울대), 박종현(경남과기대), 김태현(민주노동 정책연구원)

15:50~16:00

• 휴식

16:00~18:00

제3부 공존과 살핍의 사회 (사회: 이삼열, 전 한국유네스코 사무총장)

- 발표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전망 이시재(전카톨릭대)
민주화의 맥락에서 본 한국 교육의 미래 이종태(21세기교육연구소)
글로벌시대의 한국여성과 미래 정현백(성균관대)
저널리즘 가치의 재발견과 민주적 소통 김서중(성공회대)
- 토론 신상숙(서울대 여성연구소), 강대인(대화문화아카데미), 신진욱(중앙대)

• 만찬



목 차

제1부 6월항쟁과 민주화의 의미, 주체, 쟁점 (사회_정해구, 성공회대)

- 07 5공화국 헌법과 6·29선언 정일준(고려대)
- 29 6월항쟁과 시민운동의 태동 정상호(서원대)
- 49 '87 노동자대투쟁 30주년, 노동운동의 현주소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2부 6월항쟁의 역사적 좌표와 촛불혁명 (사회_정근식, 서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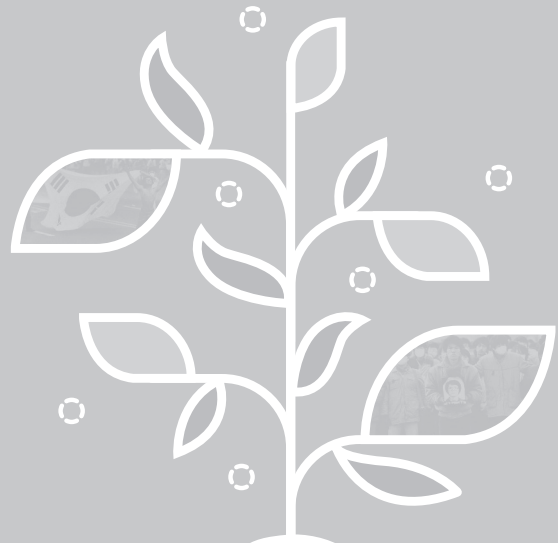
- 61 한국 근현대사 속의 6월민주항쟁: 3·1운동, 4월혁명과 비교 오제연(성균관대)
- 81 6월항쟁과 11월 촛불혁명: 반복과 차이 손호철(서강대)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6월항쟁, 촛불혁명, 한국 민주주의 30년의 넘나듦과 나아감



민주화 30년,
6월항쟁과
촛불혁명



제1부

6월항쟁과 민주화의 의미, 주체, 쟁점

1-1. 5공화국 헌법과 6·29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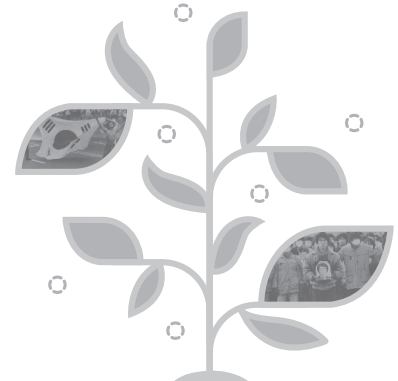
정일준(고려대)

1-2. 6월항쟁과 시민운동

정상호(서원대)

1-3. 6월항쟁과 노동운동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주화 30년,
6월항쟁과 촛불혁명

1-1

5공화국 헌법과 6·29선언

정일준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1. 머리말:

6·29선언을 둘러싼 논란

6월항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던 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이하 민정당)대선후보 노태우는 다음과 같은 <국민화합과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특별선언>(이하 6·29선언)8개항을 발표했다(조갑제, 2007: 162 강조 필자).

1.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19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시한다.
2. 직선제 개헌뿐만 아니라 민주적 실천을 위해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한다.
3. 국민적 화해를 위해 김대중 씨 등을 사면복권하고 시국 관련 사법들을 석방한다.
4.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신장시키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며 인권침해 사례의 즉각적 시정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다.
5. 언론 자유의 창달을 위해 관련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6.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한다. 지방자치제와 대학의 자율화 및 교육자치제를 조속히 실현한다.
7.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풍토를 마련한다.

8. 밝고 맑은 사회의 건설을 위해 과감한 **사회정화조치**를 강구한다. 서민 생활 침해사범을 척결하고 고질적인 비리와 모순을 과감히 시정한다.

6·29선언은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파격적이었다. 먼저 야당이 줄곧 주장해왔지만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듯이 보였던 직선제 개헌을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가 전격 수용했다. 둘째, 정치규제에 묶여 있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의 대통령 출마 길을 열어주었다. 셋째, 전두환 대통령과 상의없이 노태우 후보 자신의 고독한 결단인 것처럼 보였다. 이 선언에 대해서 정치권인 여당과 야당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외국여론도 거의 모두 환영 일색이었다. 1987년 정초부터 6월까지 줄곧 한국 사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던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지는 고려대학교 정의과 최장집 교수의 말을 빌려서 6·29선언은 “노태우의 쿠데타”라고 보도했다(NYT, June 30, 1987). 여야 합의로 개헌을 통한 민주화의 문이 열린 것이다.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1971년 박정희-김대중 후보 대결 이후 16년 만에 대통령 직선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제5공화국 출범 당시 전두환과 쿠데타 동지였던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36.6%의 득표율로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독재타도를 위해 싸워온 범 민주진영은 대선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16년 만의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양김 씨가 동시에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선거결과는 달랐을지 모른다. 양김 씨는 대선패배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6·29선언은 시민사회의 도전에 전두환 정권이 완전 굴복한 것이 아니었다. 직선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집권당 대선 후보인 노태우를 주연으로 내세운 ‘대담한 도박’이었다.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배블록의 이런 노림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집권세력에게 한편으로는 도전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했던 6·29선언의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평가는 일면적일 수밖에 없었다.

학계에서의 기존 연구는 밑으로부터의 시각이 지배적이다(윤상철, 1997; 학술단체협의회, 1997; 김원, 200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서중석, 2011). 시민사회세력의 밑으로부터의 저항에 전두환 정권이 굴복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재야 정치세력 등 사회운동세력과 야당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입장을 ‘6·29 전통주의’라 부를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미 당시부터 언론계를 중심으로 지배블록 내부의 동향과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다(남찬순, 1987; 김충식, 1987; 변용식, 1987a, b; 이경재, 1987a, b; 이도성, 1987b; 조용택, 1987). 시간이 흐르면서 6월항쟁기 정권과 군부 그리고 미국의 동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기도 했다(김동현, 1989; 김대곤, 1991, 1992; 권영기, 1993; 박보균, 1994; 오병상, 1995). 그러다가 전두환, 노태우, 박철언 등의 회고록과 인터뷰가 발간되면서 기존 해석에 도전하는 입장이 나타났다(김성익, 1992; 박철언, 2005; 조갑제, 2007; 노태우, 2011; 전두환, 2017). 거칠게 ‘정권주도론’ 또는 ‘미국역할론’이라 명명할 수 있다. 시민사회로부터의 도전을 상대화시키고 정치사회와 국가권력 나아가 미국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을 ‘6·29 수정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6월항쟁 30주년을 맞는 올해는 기존의 6월항쟁에 대한 연구를 더 거시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이다. 시민사회(재야와 학생운동단체)와 야당(김영삼과 김대중)의 역할을 정권의 역할(전두환과 노태우), 미국의 역할(행정부와 의회 및 언론)과 균형 있게 재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가 확보되었다고 본다. 6월항쟁은 6·29선언과 여야간 합의개헌 그리고 집권당 노태우 후보의 당선으로 종결되었다. 이는 '타협에 의한 민주화'이다(Im, 1989; 윤상철, 1997; Cho, 2000). 집권세력은 애초에 5공화국 헌법이 기획한 절차대로 정권이양을 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정권재창출에 성공했다. 야당과 재야 그리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포함하는 시민세력은 정권의 양보를 통한 직선제를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다. 그렇지만 지배연합을 무너뜨리거나 단일대오를 이뤄서 선거에서 이기지는 못했다. 5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간접 선거라는 게임의 규칙을 직선제로 바꾸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대선이라는 게임에서는 졌다. 정권교체에 실패했다.

이 글에서는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재배치하고, 기존의 일면적 해석을 보완함으로써 '6·29 수정주의'를 비판하고자 한다. 이를 '탈 6·29 수정주의' 입장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른다. 민주주의로의 이행 30년이 지나도록 한국 민주주의는 공고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민주화 이행 경로(path)와 시퀀스(sequence)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6월항쟁이라는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과 이후의 경로의존(path dependence)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민주주의를 둘러싼 대내외 권력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 제5공화국 출범과 권력승계 구상(1981년 전반기~1983년 전반기): 부과된 정치질서, 급조된 정당체제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유신체제는 끝났다. 한국 시민 대다수는 18년간의 박정희 독재 정권이 끝나면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기대했다. 최규하 총리는 정권을 물려받고 정치범 석방, 긴급조치 해제, 유신헌법 개정 착수, 언론자유 회복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등 '3김' 대권주자들의 정권경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사후 6개월 정도에 걸친 '서울의 봄'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에 의해 좌절되었다. 신군부는 1979년 12·12쿠데타를 통해 군권을 장악했다. 이어 1980년 5·17계엄령 확대조치를 통해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장악하고자 했다(Chung, 2009). 신군부의 반동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광주민주화운동은 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세력과 신군부 세력의 전면 대결이었다. 신군부는 무력을 동원해 광주항쟁을 진압했다. 그들은 민주화운동세력에게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총격전까지 벌어지는 폭력적 대결 끝에 수많은 희생을 치렀다. 이 때문에 광주민주화운동은 5공화국 전두환 정권 내내 지속된 시민사회의 엄청난 저항에 결정적 선례(critical precedent)로 자리 잡았다. 광주학살과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광주진압으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주한 미군 그리고 주한 미국대사관의 역할에 대해 한국 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졌다. 이는 1980년대 내내 사회운동권의 격렬한 논쟁

의 초점이 되었다. 제4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미국 정부는 신군부의 행위를 묵인 내지 지지했다. 미국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보다 안보를 우선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미국 정부는 신군부의 강경노선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에 어긋나는 것은 틀림없지만 안보상의 공백보다는 덜 나쁜 것으로 인식했다(정일준, 2010).

‘12·12사건’이 국가 내부의 권력구조를 뒤바꾼 격변이었다면, 광주 학살과 뒤이은 광주민주화운동은 한국의 국가-시민사회 관계뿐 아니라 한미관계를 재구조화하는 전환점이었다.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미국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미국은 반공을 지향한다면 그 정권이 비록 독재 정권이라 할지라도 지원하는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노선을 드러냈다. 전두환 정권의 등장으로 자유와 민주라는 풍부한 가치동맹의 외양은 붕괴됐다. 한미관계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반공과 경제성장이라는 양상한 국익동맹뿐이었다. 미국이 신군부의 광주항쟁 강경진압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안보 차원에서 사태의 조속한 안정을 원했던 것은 사실이다. 신군부의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결과적으로 신군부의 정권장악을 도와준 셈이었다. 이는 군부와 야당세력의 대립과 각축에서 미국이 전자를 선택하고 후자를 포기한 결과였다(이삼성, 1993). 미국으로서는 야당 정치세력의 반발과 시민사회에서의 도전을 어떻게 무마할지가 중·장기적인 과제였다. 특히 야권 지도자인 김대중의 안위는 민감한 문제였다. 미국은 신군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김대중 석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고자했다. 5·17계엄 확대 조치에 이은 야당 지도부에 대한 전격적 체포와 구금에 대해 미국은 반발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김대중이 체포된 이튿날부터 강력한 항의를 담은 외교성명을 필두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군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그리고 김대중을 석방시키는 데 몰두했다. 미국의 김대중 석방 노력은 레이건의 대통령 당선으로 말미암아 복잡해졌다. 그렇지만 카터 행정부에서 레이건 행정부로 권력이양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입장은 신속히 정리되었다. 레이건의 공화당 정권은 카터의 민주당 정권과 대외정책에서 무척 달랐다. 신 냉전이 시작되었다. 한미관계는 다시 한 번 안보동맹을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두환 정권은 안정되어 갔다(오버도퍼, 2002).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 석방을 담보로 미국의 승인을 요구했다. 미국은 김대중에 대한 선고 대폭감형을 조건으로 레이건 대통령 취임 직후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를 수락했다. 1981년 1월 23일 전두환 대통령은 김대중을 무기로 감형했다. 1월 24일 456일 만에 비상계엄이 전면 해제되었다. 1월 28일 전두환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했다. 2월 3일 전두환과 레이건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계획 백지화 등 14개항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레이건이 전두환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환대하면서 한미동맹은 공고해졌다. 그렇지만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반미감정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민주화를 향한 불안정한 정세보다 확실한 대외, 대내안보를 보장할 권력 중심이 회복되기를 바랐다. 그 결과 1980년 광주항쟁을 전환점으로 반미의 불모지였던 한국에도 반미운동이 나타나게 되었다(심양섭, 2005, 2008; 이창언, 2008). 1982년 부산의 대학생들에 의한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1985년 대학생연합세력에 의한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1986년 NL계열의 서울대생 김세진, 이재호 분신사건 등 일련의 반미투쟁이 이어졌다.

전두환과 신군부는 권력 접수 시나리오대로 1980년 5·17쿠데타에 이어 국가비상기구로 ‘국가보

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를 설치했다. 5월 31일 전두환을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국보위가 발족했다. 국보위는 일종의 군사혁명위원회였다. 국보위가 발족한 31일 계엄사는 5월 22일 발표한 바와 같이 '광주사태'는 김대중이 배후조종해 발생 했다고 주장했다. 7월 4일 김대중과 문익환 등 36명이 유혈혁명 사태를 유발해 현 정부를 타도하려고 했다면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이송했다. 김대중은 9월 계엄보통군법회의, 11월 육군본부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981년 1월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학살을 묵인한 미국은 군부라는 제도와 시민의 마음 중에서 단기적으로는 전자를 선택했다. 그런데 미국은 전두환 정권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김대중 구하기에 나섰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사후 승인이 현찰이라면, 김대중 구명은 신용이었던 셈이다. 미국은 김대중을 석방시켜 야권세력을 무마하고, 광주시민들의 반미감정을 다독일 필요가 있었다.

국보위는 먼저 언론계와 출판계를 숙정했다. 6월 9일 당국의 '광주사태'에 대한 보도 강요에 이의를 제기했거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언론인들을 악성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구속했다. 7월 31일에는 《창작과비평》 등의 잡지를 포함해 정기간행물 172종을 폐간시켰다. 이어서 언론대책반은 298명의 언론인을 언론사에서 추방했다. 보안사는 언론사주로부터 TBC-TV, DBS 방송 등을 빼앗고, 언론사를 대규모로 통폐합했다. 다른 한편, 신군부는 시대적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사회자유화 조치를 시행했다. 1980년 12월부터 컬러 TV를 방영했고, 1982년 1 월에는 통행금지를 해제했다. 중고등학생 두발과 교복도 자유화했다. 신군부는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조치도 병행했다. 6월 18일 계엄사는 김종필, 이후락 등 권력형 부정축재자 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 축재액을 환수했다. 국보위는 7월 9일부터 공직자를 숙정했다. 국보위는 7월 30일 대학입시 본고사 폐지, 졸업정원제 실시, 과외 금지 등의 조치도 발표했다. 사회악을 일소한다고 하면서 6만여 명을 무차별 연행했다. 이 중 노동운동가, 농민운동가 등이 포함된 4만여 명을 군대에 보내 '삼청교육'을 받게 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했다.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 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인수 2,540명 중 투표자수 2,525명, 유효투표수 2,524표를 얻어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은 10월 22일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대통령은 5000명이 넘는 선거인단이 뽑게 되어 있었다. 대통령은 임기는 7년 단임이었고 비상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가졌다. 국회의원은 유신체제처럼 한 선거구에서 두 명씩 3분의 2를 뽑고, 3분의 1은 전국구로 뽑는데, 그중 제1당이 3분의 2를 가져가게 만들었다. 10월 27일에는 '국가보위 입법회의(이하 입법회의)'를 만들었다. 입법회의는 사회보호법, 언론 통제를 용이하게 한 언론기본법, 노동 통제를 훨씬 강화한 노동관계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11월에는 정치풍토쇄신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등 811명을 정치 활동 피규제자로 묶었다.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전두환은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1981년 1월 김대중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던 그날로 무기로 감형했다. 다음날 비상계엄령을 해제했다. 28일 전두환은 미국에 가서 레이건 대통령을 만났다. 김대중 석방을 둘러싼 한미 간의 줄다리기는 이후 한국정치의 자유화를 통한 미국의 전두환 정부 길들이기로 이어진다. 2월 11일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에서 선거인 수 5,277명, 투표자 수 5,271명, 유효투표 수 5,270표 중 전두환 후보가 4,755표를 득표하여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어서 3월 25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전두환과 신군부는 보안사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서 여당으로 민주정의당(이하 민정당)을 조직했을 뿐 아니라, 제1야당으로 민주한국당(이하 민한당), 제2야당으로 한국국민당(이하 국민당)을 만들게 했다. 또한 진보세력을 대변하는 민주사회당(이하 민사당)도 만들도록 했다. 선거 결과는 민정당 90석, 민한당 57석, 국민당 18석, 민사당 2석 등이었다. 민정당은 전국구 61석을 합쳐 151석으로 과반을 넘었다.

〈표 1〉 제1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정당			
	민정당	민한당	국민당	무소속
합계	35.6%	21.6%	13.2%	10.7%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과 다른 정책을 추진했다. 박정희 정권에서 계속 추진된 고성장 정책을 포기했다. 대신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한 안정정책으로 기조를 바꾸었다. 전두환 정권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물가 안정을 위해 예산을 전년 대비 동결시켰고 통화량도 엄격히 관리했다. 1980년대 중반에 불어 닥친 저 달러, 저금리, 저유가의 3저시대는 세계경제의 호황과 함께 한국경제에도 엄청난 호황을 가져왔다. 그 결과 1979년에 1,500달러 수준이었던 1인당 GNP는 1988년에는 3,700달러로 뛰어올랐고 198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를 기록 하였다. 1979년에는 수출 147억 달러, 수입 191억 달러로 경상수지 적자가 41억 달러를 넘었으나 1988년에는 수출 600억 달러, 수입 525억 달러로 경상수지도 138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1979년에 20%대에 달했던 도매물가상승률 역시 1980년대에는 연평균 2.7%를 기록했다. 이러한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중산층이 두텁게 성장했다. 1980년대 말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약 70%가 되었다. 경제호황과 중산층 확충은 전두환 정권이 자신감을 가지고 정치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시적 조건이 되었다.

그렇지만 전두환 정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은 정권 초기부터 나타났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 12월에 있었던 광주 미문화원 방화 사건을 은폐했다. 그런데 1982년 3월 18일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뿌려진 전단에서는 미국의 광주학살지원 책임을 묻고 반미투쟁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1982년 4월 22일 강원대생들은 반미 시위를 벌이며 성조기를 불태웠고, 1983년 9월에는 부산 미문화원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도 반미감정이 확산되는 현상을 우려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했다(Gleysteen, 1999; Wickham, 1999).

3. 자유화 조치와 권력승계 차질(1983년 하반기~1985.2.12):

자유화 조치의 의도치 않은 결과

전두환 정권은 집권 초기 국가안전기획부와 사회정화위원회 등을 통해 억압적으로 통치했다. 주요 야당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선별된 일부 정치인들만 관제야당을 할 수 있었다. 언론을 철저히 검열했다. 학생, 지식인,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운동세력들은 철저히 억압하고 감시했다. 1980년 5월부터 1983년 후반 유화국면이 시작되기까지 강권통치로 일관했다. 이 시기 반정부 시위로 투옥되거나 구속된 학생 수는 유신 때보다 많은 1,400여 명에 달했다. 이러한 정치적 암흑기는 1983년 하반기에 시작된 '유화국면'을 계기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유화국면이란 전두환 정권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을 말한다. 사실 7년 단임제 헌법 아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억압정책만으로 시종할 수는 없었다. 국내적으로는 1985년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게임을 유치해 놓고 있었다. 따라서 억압정책만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할 수는 없었다. 전두환 정권은 1983년 말부터 서서히 정치적, 사회적 유화조치들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민주화 이전 단계인 자유화(liberalization)조치에 해당한다(Cummings, 1989). 그런데 유화조치는 전두환 정권이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굴복하여 억압체제의 자유화에 양보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까지의 성공에 고무되어 정치공간을 어느 정도 열어준 것이었다. 전두환은 정치과정을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자유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유화조치로 정권에 도전하는 사회운동세력을 분할통치하고자 했다. 온건 반대세력은 매수하여 포섭하고, 급진적 학생운동, 노동운동세력은 철저히 분쇄하고자 했다. 정치인 해금조치를 통해 야당을 분열시킴으로써 패권적 지배 정당인 민정당과 다수의 무력한 소수 정당으로 구성된 다당제 구조 아래서 총선에 대비하자는 계산도 했다. 1984년 초 구속자를 일부 석방하고, 정치 피규제자 일부에 대해 사면 복권 등 해금을 단행했다. 또 학원상주 경찰을 철수시키고 제적생을 복교시키며, 해직 교수를 복직, 시위주도 학생의 구속을 유보하는 등 학원자율화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들로 두 차례에 걸쳐 200여 명의 정치 피규제자 해금이 이루어져 정치 사회가 활성화되었다. 또 학생운동 관련 제적생 1,300여 명의 복교가 허용되었고, 공안사범 300여 명이 사면, 복권되었다.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취한 유화조치는 잠재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정치적 저항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전두환 통치 초기 김영삼, 김대중을 비롯한 주요 야당 정치인의 강압적인 퇴출로 정치사회는 활력을 잃었다. 1983년 5월 광주항쟁 3주년을 맞아 당시 자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던 야당 지도자 김영삼이 정권반대 단식농성을 벌였다. 20여 일 동안 지속된 김영삼의 단식은 정치활동이 규제되어 있었던 과거의 야당세력들을 통합시켰다(김영삼, 2000). 이를 계기로 김대중과 김영삼 지지자들은 1년 뒤인 1984년 5월 18일 민주화추진협의회(이하 민주협)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민주화운동에 돌입했다. 민주협은 민주화운동의 두 지도자였던 김영삼과 김대중 지지자들을 한데 모은 유일한 조직이었다. 민주협을 모체로 하여 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둔 1985년 1월 18일 신한민주당(이하 신민당)이 창당되었다. 신민당은 당시 어용야당이라 불리고 있던 민한당과 국민당을 대신하여 진정한 야당을 내걸었

다. 민주개헌과 정권교체를 달성하려는 도전세력의 구심체를 자임했다. 아직 양김씨와 직계 정치인들은 해금되지 않았지만 그들을 지지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규제에 풀려 총선에 출마했다. 1985년 총선이 다가오자 사회운동세력들은 선거 전략을 둘러싸고 딜레마에 빠졌다. 선거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정치 공간을 이용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다. 사회운동 지도부는 대부분 선거 참여가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 지배를 정당화해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렇다고 선거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1984년 말 사회 운동권 내부에서 2·12총선 참여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전개된 결과 선거를 이용하기로 했다. 사회운동세력들은 신민당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당바람을 일으켰다. 당시에는 언론통제가 극심했다. 그렇지만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양김씨 지지자들과 대학생들이 합동연설회장으로 모여들고 일반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호응했다. 신당 돌풍이 일어났다.

5공화국 헌법 아래서 전두환 정권이 두 번째 치른 1985년 2월 12일의 총선은 집권세력의 권력승계 시나리오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왔다.

선거를 불과 며칠 앞 둔 2월 8일 김대중이 미국에서 귀국했다. 2·12총 선은 민정당 88석(전국구 포함 149석), 신한민주당 50석(67석), 민한당 26석(35석), 국민당 14석(19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집권 민정당은 제 1당의 자리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반면 1개월 전에 창당된 신민당은 대도시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압승을 거두고 제1야당이 되었다. 그러자 민심의 향방을 확인한 민한당과 국민당 소속의 당선자들마저 대거 신민당에 입당함으로써 신민당의 의석은 곧바로 100석을 넘기게 되었다.

〈표 2〉 제1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시도명	정당			
	민정당	신민당	민한당	국민당
합계	35.2%	29.3%	19.7%	9.2%

전두환 정권은 2·12 총선을 집권전반기 치적에 대한 평가기회로 보고 여당의 승리로 집권 후반기를 밀고 나가고자 했다. 그렇지만 선거결과 정권의 기대가 민심과 상반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특히 20대, 30대의 젊은 유권자층과 전문직 종사자 등 화이트칼라들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두환 정권에 대한 중산층의 반란이 시작되고 있었다. 선거 결과는 전두환 정권의 권력창출 과정에서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적지 않으며, 정치적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결과적으로 2·12총선을 전환점으로 전두환 정권은 권력 이양 시나리오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선거 결과 더욱 강력하고 선명한 야당이 정치사회의 상대방으로 등장했다. 이제 전두환 정권의 일방적인 정치일정 주도는 붕괴되었다.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2·12총선이 갖는 의미는 컸다(임혁백, 2014). 첫째, 무엇보다도 2·12총선으로 신민당이라는 강력한 자율적 야당이 출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치적 대안을 제시했다. 둘째, 제

도권 내의 강성 야당이 한국 민주화의 의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할 때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셋째, 신민당의 급부상은 선거를 통한 민주화전략이 실현 가능하다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다. 선거를 통한 민주화 전략은 가능한 최대다수의 형성이 지상과제였다. 따라서 민주화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지닌 중산층을 포섭하는 전략이 당위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민주화의 의제는 실질적 사회경제적 개혁에서 절차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며, 비폭력적인 온건한 수단을 선호하게 되었다. 끝으로, 2·12총선에서 신민당은 사회운동권의 도움을 받았다. 따라서 이후 신민당이 민주화 전략을 마련할 때 사회운동세력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2·12총선 결과 한국 시민들은 제도권 야당을 중심으로 제도개혁을 통한 민주화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얻었다. 제도개혁의 핵심 과제는 직선제 개헌이었다. 2·12총선 결과 신민당이라는 강력한 야당이 제도정치권 안에 등장함으로써 전두환 정권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집권 세력과 도전세력 사이에 밀고 당기는 공방이 시작되었다. 총선 결과 지배블럭 안에 야당과의 대화와 설득을 주장하는 온건파가 집권당을 중심으로 등장했다. 집권당인 민정당 운영에 대한 책임은 온건파가 지게 되었지만 군과 경찰 등 국가기구는 여전히 강경파의 수중에 놓여 있었다.

4. 권력승계 혼란(1985.2.12~1987.4.13): 호헌에서 개헌 가능, 그리고 다시 호헌으로

1985년 5월 18일 신민당과 국민당은 5·18광주민주화운동 5주년에 즈음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5월 23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등 5개 대학 학생 73명이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하고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5월 26일 대학생 73명은 미문화원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서울시경은 서울 미문화원 점거사건 관련 25명을 구속했다. 5월 30일 미국무부는, 미문화원에서 농성한 학생은 비폭력적이었으며 자진해산했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참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민당과 국민의 요구에 떠밀린 전두환 대통령은 1986년 1월 16일 국정 연설을 통해 개헌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기존 헌법으로 새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 헌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1988년 10월로 예정된 서울 올림픽 이후로 미룰 것을 천명했다. 이에 신민당은 1986년 2월 12일 기습적으로 '1천만인 개헌서명운동'을 선언했다. 직선제 개헌투쟁을 시작한 것이다(김철, 1986; 백화중, 1986; 이경재, 1986a). 개헌서명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개헌추진운동본부 현판식이라는 이름을 빌려 직접 대중동원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신민당은 사회운동세력들과 '민주화운동국민연합'(이하 민국련)이라는 연합조직을 결성했다. 신민당과 사회운동세력 간의 연합에 의한 대중동원은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여 전두환 정권은 여야가 합의하면 임기 말 이전에라도 개헌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양보를 했다. 이는 민주화 연합세력이 원하는 개헌에 양보한 것이 아니라 일단 개헌 협상 테이블을 여는 데 양보한 것이다. 그런데 1986년 4월 30일 정치사회에서의 여야합의는 제도권 야당과 사회운동권을 분열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5월 3일의 직선제 개헌 추진을 위한 인천대회는 4월 30일의 타협이 이뤄지기 전에 예정되었다. 여당과의 타협 이후 신민당은 대회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했다. 반면에 사회운동세력은 신민당과 정권 간의 타협 움직임에 썩기를 박고자 했다. 사회운동세력은 직선제 개헌 투쟁이라는 신민당 주도의 민주화를 거부했다. 전두환 정권타도와 민중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민중민주헌법의 제정을 요구했다. 신민당은 정부 여당과의 협상의 정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급진파에 대한 탄압을 묵인했다. 신민당은 정당 사이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화 전략에 몰두했다. 그 결과 여야 간에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 위원회가 발족하였다.

4월 28일 서울대학생 김세진과 이재호가 전방부대 입소거부 시위 도중 “반전반핵 양키 고함”을 외치며 분신했다. 4월 30일 전두환 대통령은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여야가 개헌에 합의하여 건의하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5월 21일 서울대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 투쟁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진 등 서울대·고려대생 21명이 부산 미문화원을 점거하고 농성했다. 5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이민우 신민당 총재와 6월 임시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8월 4일 신민당은 4년 중임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의결했다. 8월 18일 민정당은 내각책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 요강을 발표했다. 9월 16일 제임스 릴리(James R. Lilley)신임 주한미국 대사는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한정책은 한반도 긴장완화, 민주 발전, 미국의 경제이익 신장 등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전두환 정권은 야당과 학생운동을 분리시키고자 했다. 1986년 국회의 가을 회기 종료 이전에 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한다는 것으로 후퇴하고 2월에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허용했다. 그 결과 국회는 6월 24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9월에 들어서며 신민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합의를 촉구하면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다. 이로써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민정당과 집권세력은 내각제를 주장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단임정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려웠다. 전두환이 물러나더라도 내각제를 통해 민정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정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집권당이 내각책임제를 주장한 것은 그것이 선거경쟁을 통해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선거 공식이기 때문이었다. 1구 2인제의 선거제도하에서 현직의 프리미엄을 가진 여당이 낮은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유지하는 데 실패한 적이 없었다는 제도의 힘을 집권당은 믿었다. 반면에 대중 지지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믿는 신민당에게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유일한 승리 공식이었다. 반면 집권당으로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할 경우 김대중과 김영삼이라는 대중적 지도자들의 존재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전두환 정권은 1986년 10월부터 체제 수호를 위해 강경대응으로 나왔다. 10월 국회에서 신민당의 유성환 의원이 반공보다 통일이 국시라고 주장했다가 체포당했다. 유성환 의원은 국회 회기 중 원내 발언으로 구속당한 첫 번째 사례였다. 10월 28일 건국대에서 20여 대학 학생 2000여 명이 모여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을 결성할 때 경찰의 진입으로 학생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농성하자 당국은 단수·단전 조치를 취했다. 나흘째 되던 10월 31일에 경찰 8000여 명이 투입 되어 헬기에서 최루탄 등을 쏘고 쇠파이프 등으로 두들겨 패며 입체 진압작전을 펼쳤다. 학생 등 1,525명을

연행하여, 그중 1,290명 구속에 397명을 기소하는 초강경대응을 했다(10·28 건대항쟁계승사업회, 2016). 이 시기에 발생한 ‘금강산댐 소동’이나 ‘김일성 사망설’도 정권 수호를 위한 지배블럭의 기획이었다.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자 김대중은 공안 정치 부활의 저지와 민주화를 위하여 정권이 직선제를 받아들이면 본인은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이경제, 1986b). 한편 사회운동에서는 위장취업 중이던 권인숙이 1986년 6월 부친경찰서에 연행되어 경찰로 부터 성고문을 당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대되었다. 변호인단으로 조영래 등 166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학생·노동단체 외에도 인권·종교·여성단체 등이 합세했다. 전두환 정권은 1986년 하반기 이후 초강경정책으로 직선제개헌운동 등 민주화운동을 철저히 봉쇄하고자 했다.

제도권 야당의 협상의 정치, 운동권의 거리의 정치 모두 정권으로부터 민주화를 위한 양보를 얻어내기에는 불충분했다. 결국 신민당의 양김씨는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 사회운동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대중동 원을 통한 민주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11월 29일 인천사태 이후 처음으로 야당과 사회운동세력은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헌추구집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제도권 야당과 사회운동권 세력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다. 대중동원에 실패했다. 이는 8만 명에 달하는 경찰의 원천봉쇄 탓도 있었다. 그렇지만 대중동원 능력이 뛰어난 사회운동세력들이 신민당을 불신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후 신민당의 지도부는 사회운동세력 과의 연합전선 재건에 나섰다. 양김씨와 사회운동 지도자들은 1986년 12월 12일 야당과 사회운동세력 간의 연합전선을 재구축하기로 합의 했다.

야당이 다시 제도권 협상의 정치를 버리고 거리의 정치로 나서자, 정권은 야당분열 공작에 나섰다. 이런 맥락에서 ‘이민우 구상’이 나왔다. 1986년 12월 24일 신민당 이민우 총재는 외교구락부에서 가진 송년기자간담회에서 7개항의 민주화 조치가 선행되면 내각제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른바 ‘이민우 구상’을 발표했다. 이민우 총재가 제시한 7개항의 민주화 조치는 ① 지방자치제 실시, ② 언론 및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④ 2개 이상의 건전한 정당제도 확립보장, ⑤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법, ⑥ 용공분자를 제외한 구속자 석방, ⑦ 사면복권 등이었다. 이민우 구상은 이후 ‘민주화 7개 항’ 또는 ‘선(先)민주화론’이라고도 불렸다. 이민우 구상에 대해 민정당과 국민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김영삼 신한민주당 상임 고문과 김대중 민주협 공동의장은 대통령 직선제 당론은 어떠한 경우 에도 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민당의 두 지도자는 이민우 구상을 사실상의 내각제 개헌 수용으로 받아들였다.

1987년 1월 14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민주주의로의 이행국면에서 전환점이 었다(Cho, 2000). 박종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재야단체와 야권이 결성한 ‘고 박종철 군 국민추도회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추도식 집회가 2월 7일에 열렸다. 3월 3일에는 ‘고문추방 민주화국민평화대행진’이 열렸다. 이 시위에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했다. 거리에서 경찰에 대한 비난이나 항의 등의 형태로 시민들이 점차 시위에 참여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1987년 2월 13일 김영삼 상임고문과 김대중 공동의장은 공동기자회 견을 갖고 개헌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전두환 대통령에게 자신들과의 실세대화를 촉구했다. 다른 한편,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이른바 ‘선택적 국민투표’를 제의했다. 양김씨는 이민우 구상에 동조하는 여당에 협조적인 당내 분파를 숙청하기 위해 신민당을 해체하고 통일민주당이라는 신당을

조직했다(이종각, 1987). 그러나 이는 지배블록 안에서 강경파의 득세를 가져왔다. 미국이 배후에서 지원한 이민우 구상의 좌절은 집권세력과 협상 가능한 대안의 소멸을 의미했다(《국민일보》, 2016년 6월 16일 자). 그러자 전두환 정권은 협상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그리고 5공화국 헌법에 의해 대통령직을 후임자에게 승계하겠다는 4·13호헌 선언을 했다. 이는 당시 까지 진행되던 모든 개헌논의를 올림픽대회 이후까지 유보하고 연내에 현행 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이양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조치와 더불어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을 다시 가택연금하고, 야당 의원을 구속하는 한편,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5. 권력승계 전환(1985.4.13~1987.6.29): 호헌에서 직선제 개헌으로

1987년 1월 1일 전두환 대통령은 1988년 평화적 정부이양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평화와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월 14일 서울대학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에 연행되어 조사 중 고문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월 20일 전두환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 유감을 표시하고 김종호 내무부장과 강민창 치안본부장을 경질했다. 1월 23일 릴리 주한미국대사는 고문행위를 절대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2월 6일 개스턴 시거(Gaston J. Sigur)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이행기의 한국정치>라는 연설을 통해 한국 개헌에 여야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영속할 수 있는 헌법은 “폭력이나 물리적 힘 또는 대결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타협과 합의에 의해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야심이나 상대에 대한 비난, 불만 등은 접어두고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이 직면한 “끊임없이 정치를 ‘문민화(civilianizing)’할 도전”을 언급한 시거는, 미국이 한국의 개헌 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으로 내정간섭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positive support, not interference)이라고 밝혔다. “첫째, 미국은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한국 군부와 계속 협력한다. 동시에 남한의 북한과의 긴장완화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둘째, 개방적인 국제경제체제를 계속 지원할 것이다. 셋째, 미국은 한국의 모든 정파들이 새로운 정치제도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고 일하도록 계속 격려할 것이다.” 이 연설은 한국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릴리 대사는 2월 9일 이민우 신민당 총재와 만난 데 이어, 2월 10일에는 김영삼 신민당 고문과도 만나서 정치현안을 논의했다. 주한미국대사의 이러한 행보는 전임 워커 대사 때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미국이 한국 민주화 과정에 공개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3월 3일 경찰은 박종철 49재와 ‘고문추방 민주화 국민평화대행진’을 원천봉쇄하고 전국적으로 439명을 연행했다. 3월 4일 미 국무부는 3·3평화대행진을 저지한 한국 정부의 처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3월 13일 이민우 신민당 총재는 릴리 대사와 개헌정국 문제를 논의했다. 3월 24일 머코스키(Frank Murkowski)미 상원의원은 미 의회에 “한국 민주화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4월 8일 김영삼과 김대중 두 야당지도자가 신당 창당을 선언하자 신한민주당 의원 73명이 탈당했다.

이러한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4·13호헌조치'가 발표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대한변협·개신교·민통련 등이 호헌반대선언을 하고, 정의 구현사제단과 천주교신자들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각 대학교수, 문인, 전·현직 의원, 변호사, 교사, 대학원생,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영화인, 연극인, 미술인, 대중연예인 등 각계에서 4·13호헌조치 반대 성명서가 나오고 기자들은 자유언론쟁취운동을 벌였다(김철, 1987; 문명호, 1987). 4·13호헌조치가 범국민적인 개헌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촉발시켰다. 미국무부는 개헌논의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4월 19일 솔라즈 미 하원의원은 여야 간 조속한 대화로 국민합의를 달성할 것을 강조했다. 5월 12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4·13조치의 재고를 촉구하는 대한결의안"이 통과되었다. 5월 14일 조지 쉘츠(George Shultz)미 국무부장은 한국 여야에 대화를 촉구했다. 이런 와중에 5월 18일 정의구현사제단의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범인이 조작되었다고 폭로했다. 전두환 정권은 박치원 치안감 등 경찰 간부를 구속했다. 이어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이한기를 국무총리에 임명하고 국가안전기획부장과 내무장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을 바꾸었다. 이를 통해 지배블록 안의 강경파 입지가 크게 축소되었다. 5월 27일 야당이 포함된 각계 인사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해 6월 10일 '박종철 군 고문살인조작 범국민규탄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5·3 인천대회 이후 야당과 결별했던 학생운동은 민주대연합을 추진했다. 5월 18일 각 대학에서 수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항쟁추모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5월 29일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서대협)'가 결성되었다. 각 대학 특위 및 투위연합체로 '호헌철폐와 민주개헌쟁취를 위한 서울지역학생협의회(이하 서학협)'를 출범시켜 6월 9일과 10일에 총궐기할 것을 다짐했다. 6월 9일 연세대 시위에서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6월 10일 잠실체육관에서는 민정당 대통령후보 지명대회가 열려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로 선정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는 국본의 방침에 따라 '박종철 군 고문치사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가 열렸다. 오전부터 각종 시위가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오후 6시 대한성공회 성당 종이 울리는 것을 신호로 성당 구내 차량들이 경적을 울렸고, 거리의 차량도 경적을 울렸다. 6월 민주 대항쟁이 시작되었다. 야당 의원들과 학생들도 서울 도심지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호헌 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은 오후 7시 30분경 신세계 앞 광장을 점거해 퇴계로 일대의 교통을 마비시켰다. 시민들은 버스 속에서 손수건을 흔들거나 박수를 쳤다. 전국 각지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집회를 열었다. 이날 22개 지역에서 수십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은 전국에서 3,800여 명을 연행했고 국본 간부를 포함해 220명을 구속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시위사태에 대해 논평하며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다.

6월 10일의 시위는 하루로 그치지 않았다. 시위하던 학생과 시민 수천 명이 명동성당에 들어가 농성했다. 서대협은 명동성당투쟁지원투쟁을 벌였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원 등 '넥타이부대'가 명동 일대를 메우며 시위를 지원했다. 상인 등 일반 시민들은 격려금과 물품을 제공했다. 명동 일대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장이 되었다. 추기경과 정의구현사제단은 경찰의 강제연행을 몸으로 막았다. 6월 15일에 농성은 평화적으로 끝났다. 5일간의 명동성당 농성은 시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구심점이 되었다. 지방에서도 12일부터 시위가 다시 일어났다. 6월 15일부터 시위는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다. 국본은 6월 18일에 최루탄추방대회를 전국 각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국본집계에 따르면 6월 18일 시위에 16개 도시에서 약 150만 명이 참가했다. 경찰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위규모였다. 6월 18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여야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한국결의문을 채택했다. 시거 미 국무부 차관보는 한국 사태에 군부 개입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천명했다. 미 국무부는, 군의 개입은 한국 국익에 심각한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월 23일 치안본부는 6·10대회 이후 연인원 70만여 명이 시위에 참가해 12,686명이 연행되고, 21일 현재 336명이 구속되었다는 집계를 발표했다. 같은 날 시거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했다. 이 무렵부터 군이 다시 정치에 개입한다는 설이 나돌았다. 6월 19일 전두환 정권의 정부·여당이 긴급 고위비상시국 대책회의를 열었다. 최루탄추방대회와 부산시위의 영향을 받으며 지방에서 연일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19일에도 전국 79개 대학이 시위를 벌였다. 20일에는 전국적으로 시위규모가 더욱 커졌다. 이날 전두환 대통령은 군 고위지휘관회의를 소집해서 비상조치를 전제로 한 병력파견 계획을 시달렸다. 이 지시에 따라 20일 새벽 4시까지 전국 주요 도시와 대학, 언론사를 장악하기 위한 병력출동 작전이 시위진압 부대인 충정부대에서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군 병력은 출동하지 않았다.

군의 개입을 막는 데 미국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 19일 오후 릴리 주한 미국대사가 전두환 대통령을 면담하여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군 출동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연이어 방한한 더윈스키(Edward J. Derwinsski)미 국무차관이나 시거(Gaston J. Sigur, Jr.)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차관보 등도 군부 개입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며 백악관과 국무부는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공개적인 직접 개입을 마다하지 않았다. 미국이 한국군의 출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데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영향이 컸다. 한미동맹의 밑으로부터의 균열을 가져올지도 모를 한국 시민사회에서의 급속한 반미감정 확산을 미국은 두고 볼 수 없었다. 이후 전두환 정권은 온건론으로 선회하여 통일민주당이 제의한 여야영수회담을 수용하는 등 야당 정치세력과의 협상에 치중하게 되었다.

최루탄추방대회를 전후해 국본에 참여한 정당세력과 운동권 세력의 견해는 갈라졌다. 김영삼·김대중 등 정치인들은 전두환 정권과의 정치 협상을 주장했다. 운동권은 시위를 계속할 것을 주장했다. 국본은 26일 평화대행진을 연다고 발표했다. 이날 연세대에서 25개 대학 2만여 학생이 모인 가운데 서대협이 평화대행진 참가 결의대회가 열렸다. 민주대연합을 위해 “직선제쟁취”가 “호헌철폐”, “독재타도”와 함께 핵심 구호로 채택되었다. 24일 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의 영수회담에서 전 대통령이 4·13조치의 철회를 선언하였을 뿐 직선제 개헌, 선택적 국민투표 등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없자 통일민주당과 국민운동본부는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국본은 영수회담으로 두 차례 연기한 평화 대행진을 26일부터 개최하기로 하였다.

6월 26일 ‘민주헌법쟁취 국민평화대행진’이 33개 도시와 4개 군·읍 등에서 열렸다. 전두환 정권은 서울에 2만 5000명을 배치하는 등 전국 34개 지역에 6만여 명의 전투경찰을 배치했다. 서울의 경우 곳곳에서 연인원 수십만 명이 참여한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백만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사상 최대의 전국 동시다발 시위였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 등 대도시는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최루탄과 화염병 투척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곳곳에서 전투경찰이 무장해제를 당했다. 6·26시위는 전두환 정권이 경찰력만으로는 시위에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국 흐름 속에서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대표가 8개항의 특별선언, 즉 '6·29선언'을 발표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화를 위한 거의 모든 조치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대통령 직선제의 수용은 가장 핵심적이고도 가시적인 타협안이었다. 국본과 양김 등 사회각계는 즉시 6·29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음날 전두환 대통령은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8개항을 전폭 수용하는 특별담화를 발표함으로써 6월항쟁은 일단 종결되었다.

7월 3일 이한열이 사망해 7월 9일 장례식이 있었다. 서울에서만 100 만 명 가까운 인파가 신촌에서 시청 앞까지 가득 메웠다. 광주에서 약 50만 명, 부산에서 약 30만 명이 모여 추모했다. 이한열의 시신은 광주 항쟁 사망자들이 묻힌 광주 망월동 묘역에 안장되었다.

6·29선언과 함께 한국정치는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시작했다. 정치 지형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통일민주당 등 정치세력은 정치 활동으로 복귀하여 개헌과 대통령 선거를 준비했다. 도시의 중산층은 일상생활로 복귀했다. 사회운동세력은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했다. 6월항쟁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조직되고 대표되지 못한 노동운동세력은 민주주의로의 이행 공간에서 새로운 요구를 쏟아냈다.

개헌정국 하에서 침예하게 대립했던 여야 정치세력은 6·29선언으로 긴장이 해소되자 일단 제자리로 돌아갔다. 전두환 정권은 7월 9일 김대중을 포함한 2,335명의 시국사범을 사면 복권시켰다. 김대중은 7년 만에 정치인으로 돌아왔다. 전두환은 7월 10일 민정당 총재직을 사퇴 했다. 13일에는 국무총리 등 일부 부처의 개각을 단행하여 거국내각을 구성했다.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후보는 9월 13일 미국을 방문하여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 대선 과정에서 미국의 지지를 얻는 데 주력했다. 야당은 통일민주당을 맡고 있는 김영삼을 대선후보로 미는 당권파와 복권된 김대중을 대선후보로 미는 비당권파 사이에 대립이 나타났다. 민정당과 통일민주당은 개헌협상을 위한 8인 회담을 가동시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서둘러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헌안은 10월 27일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78% 투표율에 93%의 찬성을 얻어 헌법으로 확정 되었다.

그러나 6월항쟁은 6·29선언에 의해 갑작스럽게 종결됨으로써 이후의 민주화가 '불완전한 민주화'로 귀결되는 한계를 안게 되었다. 민주화 과정이 구지배세력과의 타협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 정치적 민주화에 몰두해 사회경제적 민주화라는 과제를 소홀히 했다. 6·29 선언은 집권세력이 야당과 중산층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타협적 방식을 선택한 것이었다. 따라서 6월항쟁은 비민주적 잔재를 일소하지 못하고 구지배세력을 그대로 존속시킨 상태에서 권력의 극히 일부만 민주화세력이 차지하는 형태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타협안은 물론 민주화를 요구한 국민의 참여와 요구에 밀려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한된 민주화를 통해 집권세력의 지배를 지속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민주주의 절차를 보장하여 국민저항을 약화시키고 저항세력을 분열시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었다. 특히 이는 김대중과 김영삼의 뿌리 깊은 경쟁과 정부, 여당의 막강한 조직, 자금으로 대통령 직선 경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이로써 거리의 정치는 제도권으로 들어갔다. 민주화를 향한 권력투쟁은 이제 제도권 안에서의 선거경쟁으로 변화했다.

6. 6·29선언 재평가:

미국-전두환 정권-야당-운동권 복합 국면 분석

6·29선언이 6월항쟁의 결과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개헌과 대통령 선거 결과 항복한 지배블록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6·29선언에서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사후적인 해석이 덧붙여지고 있을 따름이다. 먼저 전두환 측근을 중심으로 노태우 주도 설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다(김성익, 1992). 둘째, 노태우 측근들이 서로 자신의 기여를 강조하고 나섰다(박철언, 2005). 셋째,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한 미국 관리들이 6·29선언을 전후한 미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증언하고 나섰다(Lilley & Lilley, 2004). 최근에는 전두환 자신이 회고록을 통해 노태우에게 직선제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했음을 밝혔다(전두 환, 2017: 629~643). 그런데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지배블록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인 데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다. 직선제를 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박정희의 유신체제 아래서 집권당이었던 민주공화당과 비교할 때 전두환의 5공화국에서 민주정의당은 상대적으로 잘 조직되었다. 박정희가 ‘민주주의 없는 국가안보’를 추구한 데 비해 전두환은 어쨌든 ‘민주주의를 무시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추구해야 했다(정일준, 2006). 박정희는 국회의원 3분의 1을 직접 지명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를 통해 사실상 종신 대통령이 보장되었다. 이에 비해 전두환은 국회에서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안정적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는 있었지만, 5공화국 헌법은 7년 단임제였다. 5공화국도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결정적 차이점도 있었다. 아무튼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는 집권당을 강화하도록 만드는 정치조건이었다. 박정희는 집권기간 내내 집권당인 공화당을 약화시키면서 후계자가 대두할 가능성을 원천봉쇄했다. 전두환은 달랐다. 쿠데타 동지인 노태우를 일찌감치 전역시켜 다양한 공직을 섭렵하면서 후계자 수업을 시켰다. 나름대로 문민화(civilianizing)의 수순을 밟은 셈이다. 노태우는 꾸준히 경력관리를 받았다. 정무 제2장관, 체육부장관, 내무부장관 그리고 서울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조직위원장 등을 거쳤다. 2·12총선 이후에는 전국구 의원으로서 민정당 대표를 맡았다. 이를 전두환 정권의 후계구상과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전두환 정권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직선제를 하면 야당이 이길 것이라 대부분 전망했다. 그런데 6·29선언을 통해 노태우는 자신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를 쇄신했다. 이전에 그는 전두환의 쿠데타 동지인 장군 출신 정치인에 불과했다. 6·29선언을 통해 그는 ‘노련한 정치인’ 또는 ‘민주주의자’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하여 한국 시민들로 하여금 아직 검증된 바 없는 야당에게 국가경영을 넘길지 여부를 심사숙고하게 만들었다(NYT, July 5, 1987).

또한 미국이 구상하는 한국정치발전이 있었다. 한미관계는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로 많은 도전을 받았다. 이미 광주민주화운동 직후부터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1980년 12월 광주 미문화원 방화를 시작으로 1982년 3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이 일어났다. 또 1985년 5월에는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이 벌어졌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국가 간 한미관계의 전환점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대중의 정서와 의식 수준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Drennan, 2005). 1980년 광주항쟁을 기점으로 하여 반미 감정과 반미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반미운동이 싹텃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전국적인 6월항쟁의 복합 국면에서 한미관계가 재구조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결정적 국면으로서 이후의 역사에 경로의존성을 부과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전두환 정권에 대한 지지는 애초부터 조건부였다. 미국은 비록 상황변화에 떠밀려 전두환 정권을 승인하기는 했지만 통치스타일까지 무조건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신군부는 구정치질서와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구정치인, 그리고 학생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세력을 정치불안의 원천으로 지목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권한 뒤에는 달랐다. 더 이상 남탓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박정희 정부의 군부 개입은 전두환 정부의 그것과 달랐다. 전자가 제도로서의 군부(military as institution)가 민간정치에 개입한 것이었다면, 후자는 하나회를 핵으로 하는 파당으로서의 군부(military as clique)가 그러한 것이었다(Chung, 2009). 12·12군사반란을 통해 운명공동체가 된 전두환과 노태우는 권력을 분점하는 대신, 승계하는 데 합의했다. 전두환·노태우의 역할 분담은 박정희·김종필의 역할 분담과 달랐다. 박정희는 유신체제 수립과 유정회를 통해 정당정치를 부정하고 집권여당인 공화당을 약화시켰다. 이에 반해 전두환은 민정당을 창당하고 끊임없이 강화시켰다. 이는 7년 임기를 채운 뒤 물러날 수밖에 없는 헌정질서 속에서 전두환과 파당으로서의 신군부가 행한 합리적 선택이었다. 전두환은 집권기간 내내 '단임 정신'을 강조하면서 후계자의 경력 관리를 하는 한편 정치기구로서 당을 확장했다.

한국의 군사 정권을 가장 먼저 승인한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민주주의 증진(promoting democracy)'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제3세계 국가들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 개입한 바 있다. 1980년 5월 광주학살 이후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국가안전기획부, 사회정화위원회 등을 통해 억압통치를 행했다. 주요 야당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했고 일부 온건한 인사들에게만 어용야당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허용했다. 언론은 철저히 검열 당했고 학생과 지식인, 노동자와 사회운동세력은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치적 암흑기는 1983년 하반기에 시작된 '유화국면'을 계기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전두환 정권이 반대파에 대해 유화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일련의 미국의 공개 개입과 시민사회의 지속적 압박을 받으며 퇴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6·29선언이 나왔다. 이는 "일종의 기획 상품이며 각본과 감독에 전두환, 주연은 노태우였다. 노 대표는 발표만 했을 뿐이지만 모든 공은 노 대표에게 돌아가게 만들었다. 전 정권의 치밀한 각본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는 6월 민주항쟁으로 얻어낸 귀한 결과물이다"(김대중, 2010: 521). 7월 1일 전두환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미 하원은 노태우의 6·29시국수습방안을 지지하는 한국결의안을 통과시켰다. 7월 2일 노태우는 김영삼 야당총재와의 첫 공식회동에서 개헌협상 재개 방향 등 의견을 교환했다. 7월 8일 법무부는 김대중 등 2,335명을 사면 복권하고, 시국관련 사범 357명을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석방했다. 10월 27일 대통령 직선제의 새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 93.1%로 확정되었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나란히 대선에 출마했다. 11월 29일 대한항공 여객기가 승객 등 115명을 태우고 바그다드

에서 서울로 오던 중 미얀마 안다만해 상공에서 폭발해 추락했다. 12월 15일 정부는 대한항공기 폭파 혐의자 김현희를 바레인에서 서울로 이송했다.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12월 17일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양당은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규정하고 선거무효화투쟁을 결정했다. 12월 19일 레이건 대통령은 한국의 야당에게 국민화합과 정치안정을 위해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1987년 6월항쟁을 전후한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미국은 정권 압박, 야당 회유, 선거 감시라는 세 가지 역할을 수행했다(정영태, 2006). 먼저 미국은 전두환 대통령으로 하여금 평화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이양하도록 회유하고 압력을 가했다. 야당의 개헌투쟁이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자 야당과의 협상을 통한 개헌을 한국 정부에 종용했다. 그러나 전두환의 4·13호헌조치가 나오고 6월항쟁이 시작되자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는 야당으로 지지를 전환했다. 시민사회에서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반미감정이 확산되는 기미가 나타나자 공개개입으로 자세를 전환한 것이다. 시민사회의 도전이 거세지고 한국의 정치상황이 파국적 균형에 이르자 미국은 정권보다 시민을 선택했다. 미국은 4·13호헌조치의 철회와 획기적인 민주화 조치를 요구했다. 5월 12일에는 미상원 외교위원회가 「4·13조치의 재고를 촉구하는 대한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솔츠 미 국무장관은 5월 14일 스탠포드대학 연설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타협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대화를 진지하게 해나갈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공개발언을 통해서 미국 정부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군부 정권을 민간화하도록 전두환 정부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1987년 6월 10일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및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모인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도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릴리 대사는 민정당 전당대회에 참석하여 노태우 후보가 후계자로 지명 받는 장면을 지켜봤다. 그 와중에도 그는 시위대에 대한 강제진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다.

미국이 6월항쟁 국면에서 전두환 정부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군의 정치개입을 차단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군부가 다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정치의 민간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시위대 진압을 위해 군부대의 이동 명령을 내릴 기미가 보이자, 미국 정부는 군의 서울 진입을 막도록 조치했다. 다른 한편, 릴리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군의 정치개입 반대 입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추가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레이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릴리 대사는 6월 19일 90분 동안 이루어진 전두환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나는 그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얘기해주면서 계엄선포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확고하고 분명하게 전달했다”면서 “만일 총리가 계엄선포가 임박했음을 발표한다면 그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1980년 광주 재난적 사건의 재발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면담이 끝난 직후 최광수 외무장관이 전화해서 “전 대통령이 나를 만난 직후 계엄을 선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다(Lilley & Lilley, 2004).

〈표 3〉 제3·4·5공화국 권위주의정권 시기 거시경제지표

	GNP변동 (%)	1인당 GNP		수출규모 (미국 달러)	실질임금 변동(%)	절대실업 (%)	소비자물가 지수 변동(%)
		양(미국달러)	변동 (%)				
1963	9.1	100	6.4	87	-7.9	8.1	20.7
1964	9.6	103	3.0	119	-6.5	7.7	29.5
1965	5.8	105	19.0	175	0.8	7.4	13.6
1966	12.7	125	19.0	250	10.9	7.1	11.3
1967	6.6	152	21.6	320	10.9	6.2	10.6
1968	11.3	184	21.1	455	14.1	5.1	10.9
1969	13.8	224	21.7	623	19.3	4.8	12.5
1970	7.6	265	18.3	835	9.3	4.5	16.0
1971	9.1	276	4.2	1,068	1.7	4.5	13.5
1972	5.3	304	10.1	1,624	5.2	4.5	11.7
1973	14.0	377	24.0	3,225	8.0	4.0	3.2
1974	8.5	484	28.4	4,460	6.1	4.1	24.3
1975	6.8	574	18.6	5,081	3.3	4.1	25.3
1976	13.4	757	31.9	7,715	17.5	3.9	15.3
1977	10.7	950	25.5	10,047	19.9	3.8	10.1
1978	11.0	1,285	35.3	12,711	18.0	3.2	14.4
1979	7.0	1,616	25.8	15,056	8.4	3.8	18.3
1980	-4.8	1,528	-5.4	17,505	-4.1	5.2	28.7
1981	6.6	1,719	12.5	21,254	-0.5	4.5	21.6
1982	5.4	1,773	3.1	21,853	7.9	4.4	7.1
1983	11.9	1,914	8.0	24,445	7.4	4.1	3.4
1984	8.4	2,044	6.8	29,245	6.3	3.8	2.3
1985	5.4	2,047	0.1	30,283	5.6	4.0	2.5
1986	12.3	2,300	12.4	34,715	5.4	3.8	2.8
1987	12.0	2,826	22.9	47,281	7.1	3.1	3.0
평균	8.8		14.3				

미국의 그러한 조치로 전두환 정부는 호헌조치를 관철할 수 있는 군대동원이라는 결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직선제 개헌과 선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정부는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군대사용을 경고하는 것과 동시에 야당과 시위대의 폭력사용도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대화와 협상을 강조 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제도권 야당과 재야세력, 나아가 사회운동권과의 연대를 해체시키고자 했다. 그 결과 야당이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고 1987년 15년 만에 대통령직접선거가 가능해졌다.

19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은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났다. 그렇지만 1987년의 6월항

쟁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훨씬 대규모로 시위가 벌어졌음에도 상대적으로 희생은 적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전기로 시민사회의 저항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또 지속적이고도 강도 높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이 직선제 개헌이라는 양보를 하게 된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임혁백, 2014). 첫째로 경찰력만으로 시위를 진압할 수 없게 된 상황 아래서 군대의 동원에 실패했다. 1980년 광주학살의 경험이 다수의 군부 지도자들로 하여금 또다시 엄청난 인명의 희생을 가져올 군대에 의한 시위 진압을 회피하게 했다. 또한 한국 정부에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미국이 군사적 해결보다는 정치적 협상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력을 계속 넣고 있었다. 경찰력으로 동원된 대중을 진압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전두환 정권은 6·29선언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둘째로 직선제 개헌이라는 타협 공식은 집권당으로서 차악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 전두환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5공화국 헌법 아래서 노태우 후보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집권당 안에서의 권력승계는 6월항쟁으로 인해 불가능한 대안이 되고 말았다.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이 선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지지율은 1/3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6·29선언이 발표된 시점은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던 시기였다. 앞의 <표 3>은 박정희 정권기와 전두환 정권기 거시경제지표를 보여준다. 이러한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전두환 정권은 민주적 경쟁이 회복 되었을 때 중산층의 지지를 기대할 수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만약 현직의 이점이 유지된다면, 그리고 야당의 지도자인 김대중과 김영삼이 동시에 출마한다면 집권 여당이 누리고 있는 엄청난 프리미엄으로 분할된 민주화연합의 표를 누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이 가능했다. 6·29선언의 내용에 김대중의 사면 복권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전략적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제도권 야당이 6·29선언을 받아들인 이유는 제도권 야당과 사회운동세력이 공동으로 조직하고 동원한 6월항쟁이 전두환 정권으로 하여금 직선제라는 선거경쟁을 회복하게 동의하게 만드는 데는 충분할 정도로 강력했는지 모르나 정권을 타도하기에는 약했기 때문이다. 1987년의 6·29 민주화 대타협은 정권과 반대세력 간의 파멸적 균형(catastrophic balance)의 결과다. 민주화 연합세력은 제도 정치권 내의 조직적 기반에다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권위주의 정권을 전복시킬 만한 물리적 힘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했다.

한국 민주주의 이행은 1985년 2·12총선거를 계기로 정권과 시민사회 사이에 권력의 대칭관계가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신민당이라는 민주적 대안세력의 등장과 시민사회의 부활은 권위주의 정권을 몰아낼 정도는 아니었다.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장기적 대치상태가 지속되며 일 년이 지나갔다. 이런 교착상태를 깬 것은 전두환 정권의 4·13호헌선언이었다. 4·13선언이 발표된 후 항의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졌다. 미국도 이에 반대했다. 그 와중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은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종교계와 중산층이 대규모로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적극 가담하게 되었다. 이로써 야당, 사회운동세력, 학생, 중산층을 포함하는 최대 민주화 연합이 형성 되었다. 6월항쟁이라는 결정적 국면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긴 줄다리기를 끝에 6·29선언으로 상징되는 차선적인 타협점을 찾은 끝에 한국의 민주화의 물꼬가 트였던 것이다.

- 10·28 건대항쟁계승사업회. 2016. 『학생운동 1980』. 오월의봄.
- 권영기. 1993. 「비사 6·29전야의 권부」. 《월간조선》 6월호, 196~237쪽.
- 김대곤. 1991. 「6·29 미스터리」. 《新東亞》, 6월호, 180~192쪽.
- _____. 1992. 「'6·29'의 배후는 미국이었는데가」. 《新東亞》, 6월호, 242~251쪽.
- 김대중. 2010. 『김대중 자서전 1』. 삼인.
- 김동현. 1989. 「이하기 전 총리가 말하는 6·29전야 “군 출동명령 내려졌었다”」. 《월간조선》, 10월호, 302~309쪽.
- 김성익. 1992. 『전두환 육성기록』. 조선일보사.
- 김영삼. 2000. 『김영삼회고록 3』. 백산서당.
- 김원. 2009. 『87년 6월항쟁』. 책세상.
- 김철. 1986. 「개헌공방, 어떻게 풀릴 것인가」. 《新東亞》, 5월호, 162~168쪽.
- _____. 1987. 「'4·13 개헌유보결단'과 정국방향」. 《新東亞》, 5월호, 158~165쪽.
- 김충식. 1987. 「'6·29선언'과 미국의 막후 역할」. 《新東亞》, 8월호, 312~325쪽.
- 남찬순. 1987. 「미국의 대한시각, 4·30에서 4·13까지」. 《新東亞》, 7월호, 162~181쪽.
- 노태우. 2011. 『노태우 회고록 상권: 국가, 민주화 나의 운명』. 조선뉴스프레스.
- 문명호. 1987. 「개헌논의 재개를 주장하는 사람들」. 《新東亞》, 6월호, 320~338쪽.
- 민정기 엮음. 1987. 『전두환 대통령 어록: 영광의 새 역사를 국민과 함께』. 동화출판공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10.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 박보균. 1994. 『청와대비서실 3』. 중앙일보사.
- 박철언. 2005.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1』. 랜덤하우스중앙.
- 백화중. 1986. 「신민당의 '개헌강공'과 양김 씨의 신포석」. 《新東亞》, 6월호, 170~176쪽.
- 변용식. 1987a. 「4·13 이후 미국이 달라졌다」. 《월간 조선》, 6월호, 440~448쪽.
- _____. 1987b. 「6월 사태, 미국은 어떻게 움직였나」. 《월간 조선》, 8월호, 358~367쪽.
- 서중석. 2011. 『6월항쟁』. 돌베개.
- 심양섭. 2005. 『한국의 반미, 대안은 있는가』. 삼성경제연구소.
- _____. 2008. 『한국의 반미: 원인·사례·대응』. 한울.
- 오버도퍼(이종길)웁김. 2002. 『두 개의 한국』. 길산.
- 오병상. 1995. 『청와대비서실 4』. 중앙일보사.
- 윤상철. 1997.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이행과정』.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경재. 1986a. 「김영삼 신민당의 기습서명 드라마」. 《新東亞》, 3월호, 152~177쪽.
- _____. 1986b. 「김대중 불출마 선언과 신민 '직선제' 투쟁」. 《新東亞》, 12월호, 142~163쪽.
- _____. 1987a. 「88겨냥한 미국의 '강한 발언'과 파문」. 《新東亞》, 3월호, 162~181쪽.
- _____. 1987b. 「민중의 승리: 5·17에서 6·29까지」. 《新東亞》, 8월호, 170~203쪽.
- 이도성. 1987a. 「'고문'에 강타당한 불투명 정국」. 《新東亞》, 3월호, 138~143쪽.
- _____. 1987b. 「노태우체제 출항의 막전막후: '6·29선언'은 노태우의 '쿠데타'였다」. 《新東亞》, 8월호, 152~169쪽.
- 이상성. 1993.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의 민족주의: 광주항쟁·민족통일·한미관계』. 한길사.
- 이종각. 1987. 「야당분열과 사구라 시비」. 《新東亞》, 5월호, 200~219쪽.
- 이종률. 1991. 「4·13과 6·29, 전두환과 노태우」. 《新東亞》, 5월호, 342~387쪽.
- 이창언. 2008. 「한국 학생운동의 급진화에 관한 연구: 1980년대 급진이념의 형성과 분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임혁백. 2014. 『비동시성의 동시성』. 고려대학교출판부.
- 전두환. 2017. 『전두환회고록』. 자작나무숲.
- 정영태. 2006. 「1987년 민주화와 미국의 역할」. 한국산업사회학회 제9회 비평사회학대회 발표문.

- 정일준. 2006. 「유신체제의 모순과 한미갈등: 민주주의 없는 국가안보」.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제70집 3호. 149~178쪽.
- _____. 2010. 「전두환·노태우 정권과 한미관계」. 《역사비평》, 봄호, 296~332쪽.
- 조갑제. 2007. 『노태우 육성회고록』. 조갑제닷컴.
- 조용택. 1987. 「주한 미대사관의 여야접촉」. 《월간 조선》, 4월호, 234~245쪽.
-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1997. 『6월 민주항쟁과 한국 사회 10년, 1·2』. 당대.
- Cho, Jung-Kwan. 2000. "From Authoritarianism to Consolidated Democracy in South Korea." Ph. 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 Chung, Il Joon. 2009. "Demilitarizing Politics in South Korea: Toward A Positive Consolidation of Civilian Supremacy." Caforio, Giuseppe ed., Advances in Military Sociology: Essays in Honor of Charles C. Moskos, Part B, Emerald, pp. 527~555.
- Cumings, Bruce. 1989. "The Abortive Anertura: SOuth Korea in the Light of Latin American Experience." New Left Review, 173, pp. 5~32.
- _____. 2001.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창비.
- Drennan, William M. 2005. "The Tipping Point: Kwangju, May 1980." Steinberg, David I. ed., Korean Attitudes Toward the United States: Changing Dynamics, New York: M. E. Sharpe, pp. 280~306.
- Gleysteen, William H. Jr. 1999. Massive Entanglement, Marginal Influence: Carter and Korea in Crisis. Brookings Institution Press/윌리엄 글라이스틴. 1999. 『알려지지 않은 역사』. 황정일 옮김. 중앙M&B.
-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Asian and Pacific Affairs. 1987. Assessing the Prospects for Democratization in Korea. June.
- Im, Hyug Baeg. 1989. "Politics of Transition: Democratic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ule in South Kore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Lilley, James & Jeffrey Lilley. 2004. China Hands. Public Affairs/ 김준길 옮김. 2005. 『제임스 릴리의 아시아비망록』. 조선일보사.
- Sigur, Gaston J. Jr. 1987. "Korean politics in transition."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Gaston J. Sigur, Jr.'s address before the U.S. - Korea Society in New York City on February 6 (U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April, 1987).
- Wickham, John A., Jr. 1999. Korea on the Brink: From the "12/12 Incident" to the Kwangju Uprising. Washington D. C.: National Defense University/김영희 감수. 2000. 『12·12와 미국의 딜레마』. 중앙 M&B.
- New York Times.



민주화 30년,
6월항쟁과 촛불혁명

1-2

6월항쟁과 시민운동의 태동

정상호 |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1. 문제제기

6월항쟁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들의 주장은 대개 이러 하다.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1987년 6월항쟁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는 ‘시민운동(NGO)’의 존재 여부이다. 6월항쟁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회운동은 둘 중 하나였다. 하나는 해방 이후 면면히 이어져왔던 정부에 종속된 사회단체, 즉 관변단체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과거의 대표적인 관변단체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조직화된 동원형 민간조직이라 할 수 있다(정상호, 2013). 다른 하나는 변혁적 민주화운동이다. 1980년대 중반 올림픽 개최를 염두에 둔 권위주의 정부의 개량적 자유화 조치와 1985년의 2·12 총선을 계기로 노동운동을 비롯한 기층 민중운동이 현저하게 성장하였다. 이렇듯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조직화·대중화·의식화의 여러 측면에서 그 이전의 보수적 또는 소부르주아적 민주화운동과는 질적인 차이를 가진 민중 주도의 체제 변혁적 운동이라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견지에서 보았을 때 1980년대 중반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기인 동시에 체제변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시기로서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은 바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였던 투쟁이라고 할 수 있었다(조현연, 1997).

그렇지만 1987년 6월항쟁은 보수적 관변단체나 변혁적 민중·민주화 운동과도 다른 새로운 시민운동의 역사적 출현을 가져왔다. 여기에 기여한 가장 큰 원인은 6월항쟁 이후 개방된 정치공간 속에

서 급속히 제도화되어 나갔던 정당정치의 복원에 있었다. 한 연구자의 지적대로 “우리 운동이 합법공간의 확대, 더 명확히 말하면 제도정치권의 확립과 이를 지지하는 제도언론, 그리고 국민에 대한 이들의 강력한 일상적 영향력이라는 조건하에서 앞으로의 실천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정태인, 1991: 13). 구체적으로 민주주의 이행 이후의 정치상황을 틀 지우는 두 차례의 정초(定礎)선거, 즉 1987년 대선과 1988년 총선은 시민운동의 출현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였다. 하나는 선거의 결과 민주화를 담당할 새로운 엘리트 세력과 제도들을 출현 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주기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시민들의 학습효과이다. 정초선거의 성공적 진행은 모든 주요 행위자들이 권력을 획득하는 데 민주적 과정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며, 어떤 제도나 집단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책결정자들에 대해 거부권을 주장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도록 만든다(Mainwaring, O'Donnell & Valenzuela, 1992).

그 결과 정부 억압의 높은 수준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냈던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전략, 즉 급진적 이념지향성, 비공개·반(反)합법 운동조직의 난립, 폭력적 저항방식을 폐기하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운동방식을 채택한 새로운 시민운동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사례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의 창립(1989년 7월)이 자주 거론되어 왔다. 경실련의 등장은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변혁운동과 개량운동, 구사회운동과 신사회 운동, 진보노선과 개혁노선의 분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다(정상호, 2007). 필자 역시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분명 군사권위주의 정권과 맞서 간단(間斷)없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정치사회의 개방과 근대적 시민권(citizenship)을 가져온 민주화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시민운동은 6월항쟁의 결과”라는 주장(정해구·김혜진·정상호, 2005)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절론은 1980년대 중반 또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시민운동의 등장에 작용한 시민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운동의 기반을 간과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실제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노동과 농민운동을 비롯한 기층 민중운동뿐만 아니라 출판·문화운동, 청년 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등이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까지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런 점에서 1980년대 운동은 교회와 대학을 중심으로 야당과 명망 있는 재야인사들에 의존했던 1970년대 운동이 지닌 운동 영역의 제한성, 상층부 중심성, 정당세력 중심성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정철희, 2003). 그런 점에서 이 글은 1980년대 후반 경실련(1989), 환경운동연합(1993), 참여연대(1994)의 창립 등 시민운동의 뿌리를 6월항쟁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부문운동에 초점을 두고 해명하며, 시민운동의 싹을 틔웠던 이러한 단체들이 6월항쟁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2. 시민운동의 발아와 형성

1) 인권운동

(1) 인권운동의 전개 과정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유신부터 1987년 민주화 항쟁 이전까지는 소극적 저항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가 발족(1963.12)되어 그리스도교 정신에 입각한 사회정의운동이 시작되었다. 전태일의 분신사건(1970.11.13)은 한국에서 인권운동의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후 도시빈민선교회를 위한 수도권선교 위원회가 결성(1971.9)되었고, 한국교회는 NCC(National Christian Council)를 통해 인권선언을 채택한 데 이어 1974년 인권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박정희 정부 특히 유신체제하에서는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사회민주화운동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인간 권리의 측면을 주장하기보다는 공권력에 의한 물질적·정신적 폭력에 저항하는 성격이 강했다. 1970년대 초반의 국제엠네스티 한국 지부나 정의구현사제단, NCC 인권위원회는 모두 신체, 사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권력에 투쟁한 단체였다. 인권 개념에 따라 이 시기를 분류하자면, 주로 국제인권 조약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중심의 자유권적 인권운동 단계라 할 수 있다(이정은, 1999: 56~57).

1980년 5·18로 인권 말살이 정점에 이르렀다.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비인권적 행위는 인권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후 국가부문이 가하는 억압이 지속되면서 인권운동은 전문화되었다. 지속적인 국가폭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속자 가족들이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민가협)를 설립하고 변호사들이 민변을 조직화하는 등 전문 인권운동단체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기간의 인권운동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라는 소극적 측면이 여전히 강했다. 기본권 이외의 사회권과 환경권과 같은 차원의 인권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고 국가권력과 자본만을 인권 침해의 주체로 인식하였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주요 인물과 사건, 그리고 인권단체의 활동사항을 살펴보자.

(2) 주요 인물과 사건, 그리고 단체

1987년 6월항쟁 이전 인권운동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두 가지 사건은 김근태 고문 사건과 권인숙 성고문 사건이었다.

김근태 고문사건은 1985년 12월 19일 민청련 사건 첫 재판에서 김근태가 모두진술을 통해 고문의 진상을 폭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1985년 9월 한 달 동안 매일 5시간에 걸쳐 발가벗긴 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는 김근태의 모두진술은 충격적이었다. 사실 전두환 정권은 1985년부터 1987년 정권교체를 앞두고 장기집권의 걸림돌이 되는 민주화운동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삼민투로 대변되는 학생운동과 그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

를 맺고 있는 민청련이 1차 대상이었다. 물론 그 뒤를 이어 민통련과 민주협,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김대중까지도 잡아넣겠다는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였다(서중석, 2011). 독재 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었고, 민주화운동을 북한과 내통하여 공산혁명을 기도하는 세력으로 용공 조작하는 것이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이였다. 그리고 그러한 용공조작을 위해서는 이근안 같은 고문기술자를 동원해야 했다. 이러한 그들의 작전에 1차로 걸려든 것이 민청련이고, 김근태 의장이였다. 어쨌든 김근태의 충격적인 진술은 당시 민주진영을 아연 긴장시켰고, 신민당을 포함한 광범위한 세력들이 연합하여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고문공대위)’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이 고문공대위는 나중에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사망했을 때 광범위한 세력들이 힘을 합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결국 전두환 정권을 굴복시킨 ‘국민운동본부’의 모태가 되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2.12.13).

우리나라의 인권 및 여성운동에 미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권인숙 성고문 사건이었다. 1986년 인천 5·3항쟁 이후 민주화운동 진영은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종류의 헌법개정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정권안보 차원에서 경찰력을 동원하여 인천 5·3투쟁의 배후를 색출하는 데 주력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구속·수배·고문 등을 자행하였다. 서울대 의류학과 출신인 권인숙은 1985년 봄 부천의 한 가스배출기 제조업체에 ‘위장취업’하였다가 1986년 6월 4일 부천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조사관들은 권인숙에게 공문서 위조 혐의 외에 인천 5·3항쟁 관련 수배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천서의 문귀동 형사는 수갑을 채운 채 옷을 벗기는 등 성고문과 협박, 공갈을 자행했다. 이에 권인숙은 “여성으로서의 앞길을 희생해서라도 그러한 끔찍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고영구·조영래·박 원순 등 변호인단은 문귀동(부천경찰서 수사과형사), 옥봉환(부천경찰서 장), 성명미상 4인(부천경찰서 수사과장과 입회인)등 6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옷지 못 할 진풍경은 그때 벌어졌다. 검찰은 발표를 통해 성고문은 없었고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몇 차례 단순 구타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변명하였다. 또한, 문귀동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자신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며,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권인숙을 인천지검에 맞고소하였다. 두고두고 논란이 된 것은 소위 공안당국의 분석이라는 것과 이를 그대로 받아 적은 언론의 행태였다. 1986년 7월 17일 주요 신문의 10면에는 소위 ‘공안당국의 분석’이라는 것이 일제히 실렸다. 핵심 내용인즉 “용공좌경급진 학생운동세력은 혁명을 위해서는 성(性)도 도구화”하는데, “피해자 권양은 급진좌경 노선을 신봉하는 행동대원”이기 때문에, “권양의 성 모욕 주장은 사실이 아닌 조작”이라는 것이다(편집부, 1986.7: 33~34). 정권이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 등 무책임한 발뺌과 변명을 일삼자 사법사상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166명)된 변호인단은 재정신청을 하였다(편집부, 1986.9: 19). 또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과 신민당 그리고 여성단체들은 7월 19일 ‘성고문·용공조작 폭로 규탄 대회’를 개최하였다. 결국 6월항쟁 이후인 1988년 2월 9일이 되어서야 대법원은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고, 문귀동은 1988년 4월에 구속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3년 만의 일이었다. 한 여성의 희생적 결단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군사독재 정권의 부도덕성과 인권 유린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경찰뿐 아니라 사법부와 언론까지 독재 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음이 국내외에 밝혀졌다. 또한, 그동안 민주

화 진영에서도 소외되었던 여성인권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이제 1980년대 중반까지 활동하였던 주요 인권단체 들을 살펴볼 차례이다.¹⁾

① NCC 인권위원회(1974.4.11 창립)

국내 6개 개신교 교단(기독교장로회, 감리교, 예수교장로회통합측, 성공회, 대한복음교회, 구세군)이 가입된 NCC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및 인권운동의 방향타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NCC 인권위원회 산하 고문대책위원회는 김근태 고문사건(1985.12)을 계기로 기존의 인권 문제 중 고문문제를 더욱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도 하에 총회가 잠정적인 상설기구로 인정한 위원회이다.

집행부는 김상근 목사(위원장), 금영균 목사(서기, 시청료거부운동집행 위원장), 조승혁 목사(위원), 오충일 목사(위원), 이우정 교수(위원), 김재열 신부(위원)로 구성되어 있다. 고문대책위는 NCC 인권 위원회로부터 고문사건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거나 고문피해자로부터 진정을 받게 되면 이와 관련된 조사활동을 전개한다. 조사위원을 지정하여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항의, 조사보고서의 작성, 재판진행에 도움이 되게 하고 여론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고문반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각 교회에 고문 사실을 알리고 국내외 기자회견을 통한 홍보활동도 전개하여 왔다. 그밖에 엠네스티, 유엔인권위,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기독교협의회(EACC), 미국 NCC 등의 국제기구의 인권담당 부서와 연대하여 고문방지를 위한 연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인권소식》이란 인권위 기관지를 통한 고문사례 고발도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이다. 1981년 6월 ‘전국민주학생연맹’ 사건에 연루된 이태복에 대한 고문 사실을 6개 구단 공동명의로 작성하여 국무총리에 항의하기도 하였다. 1985년 10월17일 6개 교구단장 주최형식으로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②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1985.12.12 창립)

민가협은 기존의 6개 구속자 가족 모임(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 구속노동자협의회, 청년구속가족자협의회, 재야인사가족협의회, 구속장기수가족협의회,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다. 민가협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수호하고 가족 상호 간의 연대와 상호 부조 및 올바른 현실인식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며,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 보장, 자주적 민족통일을 위해 전진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민가협은 6개 구성단체의 상위기관이 아닌 공동사안에 연대하여 활동하는 협의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전국적으로 400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광주·청주·전주·부산 등에 지부를 두고 있다. 고문사건에 대한 지체 없는 관계기관 및 언론에 대한 고발과 유인물 배포, 연행 소재지 파악 및 가혹행위 근절에 대한 압력 활동에 주력하여 왔다. 민가협의 살림은 각 협의체의 회비와 인권단체, 개인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진다.

1) 이하 인권단체에 대한 내용은 윤일웅(1987)을 참조하였다.

지출의 주 용도는 회지 《민주가족》의 발행과 인쇄비, 상근 직원 두 명의 인건비, 일반 유인물대, 수감자 영치금 지원 등이다. 다른 인권 및 재야단체와 마찬가지로 재정 해결이 당면 과제이다. 회의는 보통 2주일에 한 번 종로구 연지동의 기독교회관 2층에서 갖는 것이 통례이다.

③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대한변협의 상설 기구로서 매주 월요일 12시 회의를 갖고 있다. 다른 단체와 달리 고문사례에 대한 진상조사, 가해자나 책임이 있는 상급자를 상대로 민·형사 고발을 취하고 고문 피해자의 재판을 직접 참관 하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각종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사직당국에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한다. 김근태 사건, 부천시 성고문 사건,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사건(1986.5)등에서 관련 경찰관을 고발하고 재정신청, 증거보전신청 등 법적 대응을 취해 왔다.

1985년부터 각종 인권관계 사건을 취합, 전후 과정을 객관성을 유지·정리하면서 판결을 내린 판사이름까지 수록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발간당시부터 지금(2015년 제30집)까지 『인권보고서』에 대한 내외의 관심이 지대하였는데, 1985년의 경우 총 발간 비용 1500만 원 가운데 미국 아시아 재단에서 800만 원을 지원받았다.

④ 신민당 인권옹호위원회 국회의원 겸 변호사 자격을 지닌 7명과 15명의 재야변호사를 합쳐 원내외 도합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위원장 박찬중 의원). 인권침해 사례를 직접 의정 단상에서 언급할 수 있어 문제제기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서울대 복학생 우종원, 인천 연안가스 근로자 신호수, 서울대생 김성수 군의 의문의 변사사건 재조사를 의정단상에서 신임 정호용 내무장관에게 촉구해 답변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1985년 12월에는 구속자 가족들에게 800만 원을 지원했고, 1986년 말에는 의원들이 세비에서 5만 원씩 각출하고 당의 예산지원을 얻어 1천만 원을 마련 구속자 가족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⑤ 민주협 인권위원회 1983년 민주협 창설 당시 산하부서로 설치되었다. 신민당 의원과 일반 변호사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야당과 민간단체라는 법률적인 차이 외에 신민당 인권옹호위원회와 큰 차이는 없다. 민주협 인권위원회는 재야와 연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원하는 업무가 주요 역할이다.

⑥ 가톨릭 정의평화위원회 교황청에서는 1970년에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가 조직되었고, 1976년 한국천주교에서도 정평위가 결성되었다. 정평위는 전국본부(회장은 구속된 이돈명 변호사, 윤공회 대주교가 담당주교직)와 함께 각교구본부가 있다. 가톨릭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이끌어가고 있으며 전국본부의 중앙위원 48명이 실무를 진행하며, 48명의 중앙위원들은 사제, 수녀, 사회사업가, 변호사, 신학자, 작가 등 각계각층의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마다 한두 차례의 헌금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구속자 가족의 생계보조, 영치금, 재판비용 지원, 석방자의 생업 알선 등을 주선한다. 세계 각국의 정평위에서 보내온 양심수 지원 성금의 배분 역할도 맡고 있다. 고문사건 발생시 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나 민간단체를 통해 조사와 진상공개, 여론조성, 시정 요구와 압력을 펼친다. 경

비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산하 공식기구로서 그해의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 있어 타 인권 단체보다 나은 편이다.

2) 언론·출판·문화·학술운동

(1) 언론·출판·문화·학술운동의 전개 과정

1980년대에 들어 문화예술운동은 민주화운동이 고조됨에 따라 이론 적으로 심화되고 조직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1970년대의 민족·민중적 지향 때문에 널리 유행되었던 탈춤운동으로부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이를 영상화할 수 있는 시와 문학, 노래로 주도 양식이 변화한다. 1980년대 문화예술운동의 두드러진 특징은 지배 적인 대중문화와 저항문화의 대립이 이념과 조직 수준에서 첨예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사실상 대학에서의 탈춤과 마당극 중심이었던 1970년대 문화운동과 달리 1980년대에 들어서는 예술영역 거의 모든 부분을 넘어 민중문화운동이 확산되었다. 이는 당시 문화운동의 노동계급 지향성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미 1980년대 중반에 들어 노동조합과 교회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 노동자 문화 공간이 설치되어 노동자 문화교실과 소규모 문화행사가 열렸다. 1987년 7·8월의 폭발적 노동쟁의와 함께 노동대중의 문화적 욕구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노래·연극·미술·영화 등 다양한 매체들이 요구되었으며, 전문 문화운동 집단의 활발한 창작이 이루어짐으로써 노동문화운동의 고양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김창남, 1989: 1339).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조직 차원에서 나타났다. 1984년 4월 ‘민중문화운동협의회’(민문협)가 창립되었다. 83년 5공 정권이 ‘자율화조치’를 선택함에 따라 도래한 ‘유화국면’에서 민중문화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체였다. 언론·출판·종교·교육 등 넓은 의미의 문화 범주와 문학·미술·연극 등의 예술분야에서 상층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연희단체를 비롯한 10여 개 안팎의 창작소집단들이 협의체 수준의 참가를 하였다. 그 후 한두 해 사이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 ‘한 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한출협),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 협), 그리고 ‘자유실천문인협의회’(자실협), ‘민족미술협의회’(민미협)등이 생겨남에 따라 ‘문화6단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 문화6단체들은 따로 조직적 구성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1987년 6월항쟁 전야까지 정치적 사안에 대한 공동성명서 발표 등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얼마 후 진보적 예술운동의 상징적 구심이자 예총에 맞설 수 있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의 결성(1988.12)으로 이어졌다.

(2) 주요 인물과 사건, 그리고 단체

이 시기에 소위 ‘문화6단체’의 출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보도지침’ 사건이었다. 1970년대의 해직 언론인 중심의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설립한 《월간 말》은 1986년 9월 특집호를 통해 소위 ‘보도지침’ 사건을 전면 게재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보도지침(홍보조정지침)은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하루도 빠짐없이 각 신문사에 은밀하게 시달하였던 보도통제 기

이드라인이었다. 알려진 대로 전두환 정권은 언론 통제법 조치(1980.11)에 이어 언론기본법을 제정(1980.12)함으로써 언론통제의 고삐를 바짝 쥔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그 주무부서가 홍보정책실이었다.

1985년 10월 19일부터 1986년 8월 8일까지 688개의 보도지침에 따르면, 홍보정책실은 뉴스의 비중이나 보도 가치와 상관없이 모든 신문의 보도 운명(가, 불가, 절대 불가)은 물론이고 보도의 내용과 형식마저 결정하였다. 실례로 검찰이 부친경찰서 성고문사건을 발표하였던 7월 17일의 보도지침을 보면 우선 “기사를 사회면에 신되, 기자들의 독자적인 취재 내용은 신지 말고 검찰의 발표내용만을 보도하고 사건의 명칭을 ‘성추행’이라 하지 말고 ‘성 모욕 행위’로 표현”하라고 지시한다. 또 공안당국의 배포자료에서 제목(‘혁명 위해 성까지 도구화’)을 뽑아주고 시중에 나도는 변호인단의 고발장 내용이나 NCC, 여성단체 등의 성명은 일체 보도하지 말라고 시달하였다(편집부, 1986.9: 3). 이 사건이 세상을 놀라게 한 이유는 지시내용이 매우 치밀하고 구체적이었다는 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요 신문과 방송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아무런 저항도 없이 보도지침을 충실히 따라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보도지침 사건이 알려지자 사회적 반향은 뜨거웠다. 독재 정권은 늘 하던 대로 이를 폭로한 김주연(한국일보 기자)과 김태홍(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그리고 신흥범(실행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이에 대해 정의구현사제단과 외국의 언론기관, 그리고 인권단체들이 이들의 석방과 언론의 독립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시위를 전개하였다.²⁾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화6단체’의 등장을 가속시킨 또 하나의 사건은 ‘KBS 시청료납부거부운동’이었다. 공영방송인 KBS는 전두환 정권 하에서 공익성을 상실하고 정부의 지침만을 충실히 전달하는 관제언론으로 전락했다. 이른바 ‘땡전뉴스’를 만드는 등 전두환 군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KBS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커져만 갔다. 이런 가운데 TV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이 1980년대 초·중반에 농민들부터 시작하여 재야와 종교단체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발단은 1984년 전주의 고산성당에서 “TV 시청료는 민정당과 정부만 내라”는 성명서 발표였다. 이 운동은 특히 종교단체와 여성단체가 초기부터 앞장섰다. 왜냐하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등 1970년대 이후 개신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던 교회 내 민주화 세력이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시청료를 내는 당사자가 주로 주부라는 점, 부친서 성고문 사건으로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이 그다음 선두에 서게 되었다(편집부, 1992.7). 어쨌든 1986년 1월 20일 ‘KBS-TV 시청료 거부 기독교 범국민운동본부’(본부장 김지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가 발족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2월 14일 운동본부는 “KBS-TV를 보지 않습니다”라는 문구의 스티커 5만 부와 홍보 유인물 1만 부를 제작·배포하면 서, “KBS-TV가 1985년의 2·12 국회의원 선거 보도의 경우에서처럼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홍보·선전매체로 전락하여 대중의 정치의식 잠재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2) 이들은 사건 발생 10년만인 1996년 12월 11일 대법원으로부터 “이들이 <<월간 말>>지를 통해 공개한 사항은 이미 외신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외교상 기밀누설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에 대해선 김주연(1996)을 참조.

시청료 거부운동에 대한 당시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는 매우 높았다. 3월 25일에는 ‘민주화추진협의회’에서 김대중·김영삼 공동의장 명의로 ‘회직자(會職者)에게 드리는 서신’을 통해 ‘정권의 여론 조작에 이용당하여 언론의 본질을 망각한 채 왜곡, 편파 보도를 일삼는 KBS, MBC TV를 규탄하며, TV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서신과 전화를 통한 캠페인의 전개’를 당부했다. 4월 8일에는 신민당 정무회의에서 ‘KBS 뉴스 안 보기’와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전두환 정부는 시청료 거부운동을 정권 안보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까지 인식하면서 ‘반체제적 공세’라고 규정하는 한편, 운동의 범국민적 지지를 의식하여 KBS 운영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³⁾ 하지만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었고, 시청료 거부운동에 대한 김수환 추기경의 공개적 지지 발언 이후 이 운동은 더욱 확산되어 갔다. 5월 15일 김 추기경은 기독교방송과의 대담에서 “언론의 자유를 떼어놓고는 신앙의 자유를 비롯해 모든 다른 자유도 완전할 수 없다”며 “현 정부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보도태도 때문에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 했다. 7월 11일에는 운동본부 임원단을 중심으로 가두 홍보 캠페인까지 전개했다. 이러한 활동들의 결과 9월 29일 ‘시청료 거부 및 언론자유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이 결의되었다. 여기에는 기독교 범국민운동 본부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천주교 정의평화 위원회, KBS시청료폐지운동 여성단체연합 외에 신한민주당과 민주협 까지 참여하였다. 이들은 “KBS는 공영방송임을 자처하며, 국민의 시청료와 방대한 독점적 광고료 수입으로 운영하면서도 계속하여 현 정권의 하수인으로 왜곡·편향보도를 일삼는 등 공정한 보도와 건강한 공영 방송으로서의 회귀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청료는 공정보도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다는 국민과의 계약이며 의무로서 KBS가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 시청료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정당한 국민적 권리’임을 확인하면서 시민불복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⁴⁾ 그 결과 1984년 1,148억 원이었던 시청료 징수액이 계속 떨어져 1988년에는 785억 원으로 급감하였다. 이 운동은 국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았고 6월항쟁의 기반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과정을 배경으로 탄생하였던 소위 ‘문화6단체’의 주요 활동과 참여 인사는 다음과 같다.

① 민중문화운동협의회(민문협)

‘민문협’은 “오늘의 반민중적문화를 극복하고 민중의 적절한 자기훈련으로서의 주체적이고 생명력

-
- 3) 정부는 시청료 거부운동의 확산을 막고자 1985년 12월 「한국방송사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한국방송공사를 법인으로 하고(제2조),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종래의 10%에서 5%로 낮추고(제12조 2항), 시청료 가산금 및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을 경우 문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4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 4) 불공정한 보도와 더불어 방만하고 폐쇄적인 운영 역시 시민들의 시청료 거부운동 동참을 이끌어낸 요인이었다. 1985년 정기국회에서의 이철 의원의 질의에 의하면 KBS는 광고수익과 시청료 수입 합계 254억 6200만 원의 불법 유출을 확인하였다. 이런 이익금으로 KBS는 MBC의 주식 70%, 연합통신 주식 30%, 데이터통신 주식 25%를 사들여 전파매체의 독점을 피하는 한편 전체 국민을 위한 공공사업과는 거리가 먼 언론인 해외시찰, 언론인 자녀 장학 금, 프레스센터 건립(200억 원), 양평수련원 건립(50억 원), 예술의 전당 건립(800억 원)골프장 건설회사 출자(10억 원)하는 등 방대한 자금을 국민의 규제와 감독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남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박인혜(1985: 80-81)를 참조.

이 넘치는 생명의 문화를 창조하고자 결성”되었다고 창립(1984.4.17)발기문에서 밝히고 있다.⁵⁾ ‘민문협’은 문화 운동의 전개를 위한 기초적 작업의 일환으로 기관지 《민중문화》를 발간하였으며 연 2~3회에 걸쳐 ‘민중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임원진으로는 ▲ 공동대표: 송기숙, 김종철, 황석영, 여익구, 허병섭, 호인수, 원동석, ▲ 사무국장: 박인배, ▲ 실무(유인택), 기획(김봉준), 홍보 조사연구(김영철), 연구(정희섭), 제작(장진영)등이다. ‘민문협’은 재야단체 중 가장 활발한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재정문제가 가장 큰 부담이었다. 재정의 대부분은 자료와 회보의 제공 정도에 따라 3단계 회비(연 1만 원: 회보회원, 3만 원: 자료회원, 5만 원: 특별회원)로 충당되고 있다.

②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

1984년 12월 19일 1970년대 중반의 양대 일간지 해직 언론인과 1980년도 해직언론인협의회 회원 및 출판계 인사로 구성된 27명의 발기인 그리고 회원 등 70여 명이 모여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단체의 성격을 “어떠한 정치단체도 아니며 기성의 여당이니 야당이니 하는 개념과도 무관하게 자주독립을 표방”하는 ‘재야언론인의 모임’ 또는 ‘재야언론인과 출판인들의 새로운 인식과 자각에서 발족하게 된 순수한 자주적 문화단체’로 규정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과제를 ‘민주민족 언론의 창조 및 언론민주화운동과 사회민주화운동과의 연대’로 설정하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규약을 만장일치로 채택 하고 대표위원 5명과 실행위원 8명, 감사 2명의 임원을 뽑았다. 선출방식은 회원들의 추천과 찬동에 따라 1970년대 해직 언론인, 1980년 해직 언론인 그리고 출판계인사 등에 각각 안배형식으로 2명씩을 선임했다. ‘민언협’의 재정은 150여 명 회원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며, 회지이자 진보적 대중잡지인 《월간 말》을 발행(창간호, 1985.6.15)해왔다.

임원진으로는 ▲ 의장(대표위원겸임): 송건호, ▲ 대표위원: 김인한, 최장학, 김태홍, 김승균, ▲ 실행위원: 윤활식, 이부영, 신흥범, 성한표, 노향기, 방우정, 이호웅, 김도연, ▲ 감사: 이경일, 나병식, ▲ 사무국장: 성유보 등이 있다(윤재결, 1985).

③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문화6단체’ 중 가장 오래된 단체이다. 문학인의 실천적 현실참여를 표방하는 ‘자유실천문인협의회’는 유신치하에서 개헌서명지지와 표현의 자유를 내걸고 집단적 공동보조를 취하던 문인들에 의해 1974년 11월 18일 결성되었다. 이날 고은, 백낙청, 신경림, 조태일, 박태순 등 문인들은 ‘자실’을 결성하고 대표 간사(고은)를 선출하고 이른바 ‘자유실천문인협의회 101인 선언’을 발표하고 곧바로 데모에 돌입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후 ‘자실’은 1970년대 후반까지 ‘민족문학의 밤’, ‘구속문인을 위한 문학의 밤’ 등을 개최하며 꾸준히 활동을 전개했다.

‘자실’이 재출발을 한 것은 1984년 12월 19일 서울 동숭동 소재 흥사단 강당에서 ‘자유실천문인협

5) 민문협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대표위원을 선임할 11명의 실행위원을 선출했다. 이날 선임된 실행위원은 송기숙·황석영(이상 작가), 허병섭(목사)·호인수(신부)·김종철·채광석(이상 문학평론가), 여익구(전불교사회문제연구소장)·채희완·박인배(이상 연극인), 최민화(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 간사)·김학민(출판인)등이었다. <중앙일보>(1984.4.17).

의회 84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정관과 임원진을 구성하면서부터이다. 정관에서는 회원의 확대를 꾀하여 기성 문인이 아닌 문학 독자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무크지 《실천문학》 등을 펴냈다. 1984년 재창립 당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고문: 김정한, 김병걸, 고은, 이호철, 백낙청, 문병란, 김규동, 천승세, 문영, ▲대표: 이호철, ▲집행위원: 이호철, 김규동, 천승세, 박태순, 이문구, 조태일, 황석영, 양성우, 채광석, 이시영, 김정한, ▲사무국: 채광석(총무 및 수석간사), 김정환(재정), 임정남(홍보), 이시영(섭외), 송기원(복지), 이은봉(연구), 김진경(교육), 나종영(지방)등이다(윤재걸, 1985).

④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1987년에 들어 직선제 개헌을 둘러싼 민주화운동이 고양되면서 교수들의 학교별 시국선언문이 1986년에 이어 다시 발표되었다. 그 과정에서 학원 및 사회 민주화를 위해 교수들의 조직화된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다 널리 확산·정착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복직 교수·소장 교수·사회과학 분야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조직화의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것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창립으로 수렴되었다. 본래 6월 26일 평창동에서 창립대회를 치르려고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연기되어 7월 21일 정식으로 창립되었다. 민교협은 이날 채택한 규약에서 "대학과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 다고 설립 목적을 밝혔다. 민교협의 주요 활동은 크게 교육민주화운동과 사회민주화운동으로 나뉜다. 민교협의 첫 번째 사업은 교육관계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는 일이었다. 1987년 11월 5일에는 교육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을 촉구하였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지지하고 여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사회민주화운동 중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민교협은 1988년 서관모 교수의 논문 관련 검찰 소환, 조국 교수의 '사노맹 사건' 관련 직위 해제 등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적극 대응하였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⑤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한출협)

'한출협'의 창립은 출판문화업계가 당면한 두 과제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 대한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는 당연히 정부의 억압적 금서 정책과 판금도서 유통 단속, 출판사 탄압에 대한 공동 대응의 요구였다. 당시 출판계는 문화서적과 잡지 등을 출판하면서 은유와 풍자로 정부를 매섭게 비판하여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한출협'에서 발행한 『출판탄압백서』(1987)에 따르면 5·6공화국에서 구속된 출판인이 무려 110명, 판매 압수된 출판서적이 1,300여 종 300만 권에 이르렀다.

또 하나의 시급한 현안은 당시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지적재산권의 보호' 문제였다. 외국인 저작권 보호문제는 1984년 2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경제협의회에서 우리 정부가 외국인의 저작권을 적극 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론화되었고, 85년 7월 초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한미경제협의회에서 미국 측은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보호조치가 없으면 보복조치도 불사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985년 10월 16일, 드디어 미국은 통상법 3조를 적용하여, 한국 안에서 지적재산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조사를 선언하였다. 주요 내용은 이듬해 4월까지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1987년부터 시행하며, 1988

년에는 국제저작권조약에 가입하라는 요구였다. 당시 국내 출판시장은 연간 4,230억 원 정도로 추산되었는데, 외국인의 저작물은 금액에서 7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미국의 요구를 따른다면, 번역 및 복제 사용료만 연간 최소 470억 원에서 최대 940억 원까지 외국에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대한출판문화협회, 1998: 115~120).

이러한 문제의식을 안고 출범한 ‘한출협’은 창립총회에서 정동익(아침출판사 발행인)과 최영희(석탑출판사 발행인)를 공동회장으로 선출하고, 의결과 집행기관으로 실행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실행위에는 공동 회장, 출판사의 발행인과 편집자, 영업자들이 모두 참여했으며, 제1기 사무국장으로는 유대기(거름출판사)가 선임되었다.

⑥ 민족미술협의회(민미협)

1985년 당시 이원홍 문화공보부장관의 불순한 문화예술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는 7월 20일 경주발언 직후 종로 경찰서는 아랍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20대의 힘’ 전시장에 난입하여 36점의 작품을 강제 철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작가 19명을 연행했다. 5명의 작가를 입건한 후 의외로 이 문제가 확대되어 공안당국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게 된다. 이 사태 이후 미술가들은 미술운동을 위한 미술가 대중조직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1985년 11월 22일 ‘민족미술협의회’(민미협)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민족미술의 창조적 발전을 향한 다양하고 통일적인 이론과 실천”의 지향을 통해 “민족분단의 현실과 삶을 갈라놓은 제도적 억압 장치와 방해공작으로부터 벗어난 공동체적 삶, 통일의 삶”을 모색하며,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권익옹호, 복지향상”을 실천할 것을 천명하였다.

손장섭 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홍선웅 총무로 임원진을 갖춘 ‘민미협’은 곧이어 붙어 닦친 ‘깁순이 작가 이원홍 구속사건’, ‘신촌벽화 및 정릉벽화 파괴사건’에 대항하고 기관지 《민족미술》을 창간하여 민중 미술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한편, 전문 전시 공간 ‘그림마당 민’을 개관(1986년)하여 이후 민중미술의 전시와 집회, 교육의 장으로 무수히 활용함으로써 민중미술 진영의 저항 거점을 형성하였다.⁶⁾

3) 여성운동⁷⁾

(1) 여성운동의 전개 과정

1980년대 여성운동의 특징은 해방 이후 줄곧 지녀왔던 소비자운동에서 벗어나 민주화운동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즉 1980년대는 한국 여성운동이 민족·민주·통일운동과 접목되어 여성문제의 해결을 사회의 민주화와 사회변혁에서 찾았던 시기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진보적 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한 여성운동이 생기면서 이전 시기와 질적 차별성을 갖는 여성단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으

6) · 이상의 내용은 민족미술인협회 홈페이지(<http://www.minart.org/new/sub1.html>)를 참조.

7) ·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의 일부 내용은 정상호(2017)를 참조.

며, 여성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은 대중조직으로 성장했다. 이 시기에 여성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여성운동단체들은 정부에 순응적이고 보수적 이었던 과거의 여성단체와는 달리, 가부장제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과 민족민주운동에 동참하는 여성운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아울러 여성운동 내부에서는 합법적인 법 개정이나 정책을 요구하는 운동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졌으며 이러한 단초는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이다. 1980년대에는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구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1970년대까지 여성 관련 정부부서는 보건사회부산하 부녀국과 가정복지국이 유일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여성정책에 남녀평등이나 차별철폐와 같은 새로운 정책 의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여성개발원(1983)이 설치되었다. 또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1983), 정무장관실(1988) 등이 설립되어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구의 위상이 높아졌다.

정리하자면 1980년대 중반의 여성운동은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이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모순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민주화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의 전개는 당시 여성들의 현실을 규정했던 한국 사회의 역사적·시대적 요구에 충실하게 부응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단 이후 한국여성운동이 기여한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계 역시 분명하게 노정하였다. 무엇보다도 1970년대와 1980년대 전반기의 여성지위향상운동은 과거에 비해 서구의 자유주의 여권운동방식에 근접하여 갔지만, 비참한 현실과 동일한 시기에 진행되었던 여성노동자의 치열한 노동투쟁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한편으로는 한국 중산층의 허약성과 밀접히 연계된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군부 독재 아래에서 여성운동이 지닐 수밖에 없는 한계를 노정한 것이기도 하다(정현백, 2006: 17).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여성운동은 소수 진보적인 여성들의 활동이 지배적이었다. 여전히 여성운동은 조직의 대중적 기반이 약하였고,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여성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서 일정 정도 한계를 지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1987년 민주화와 개방화라는 역사적 계기가 필요 했다(박채복, 2005: 240).

(2) 주요 인물과 사건, 그리고 단체

198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지식인 중심의 여성단체들이 잇달아 창립되는데 여신학자협의회(1980), 여성평우회(1983, 여성민우회로 개칭), 또 하나의 문화(1984), 기독교여민회(1986) 등이 그것이다.⁸⁾ 또한 여성의 전화(1984)는 아내 구타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사업을 전개했으며, 1987년에는 독자적인 여성노동단체로서 여성노동자회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980년대 여성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과는 달리, 주도적으로 여성정책 의제들을 제기하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가족법 개정과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1984년 7월

8) '여성평우회(여평)'는 1983년 6월 18일 '여성의 평등, 발전, 평화'를 목표 이념으로 삼고 '가부장적 성차별 문화의 개혁, 남녀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 건설, 민주통일사회 건설'을 활동지침으로 삼고 창립하였다. 분단 이후 여성운동 이념을 바탕으로 운동 목적을 사회, 정치적인 문제와 결합하여 실천 지침을 제시한 최초의 단체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유영신(2003.9.1)을 참조.

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41개 여성단체가 발기하여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단체연합’을 결성하고 가족법 개정을 제13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1958년에 제정된 가족법이 30여년 동안 여성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개정됨으로써 가부장적 조항들이 상당히 개선되었다.⁹⁾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운동으로 전개하면서 여성운동은 여성의 성희롱과 성폭력문제를 사회문제로 공론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동안 여성에 대한 강간이 라든가 폭력에 관한 이슈는 여성단체들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했다. 그러나 전문여성단체, 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족되면서 인간중심적인 성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폭로되면서 ‘성고문 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KBS 시청로거부여성연합’ 등의 활동을 통해 여성운동은 국민운동의 차원으로 폭을 넓혀가게 되었다. 결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각 계층별, 지역별로 확산되고 성장한 진보적인 여성운동은 1987년 2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의 결성으로 그 정점을 이루게 되었다.

4) 환경운동

(1) 환경운동의 전개 과정

1980년대 이후의 환경운동은 두 가지 점에서 이전까지의 자연보호 운동과 분명한 차이를 지녔다. 첫 번째 차이는 관 주도의 자연보호 운동을 넘어서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운동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이전의 환경운동은 각종 결의대회와 현장 제정 등 관주도 자연보호운동의 성격이 강했다. 정부의 공식 문서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자연보호운동의 맹아로서 새마을운동을 지목하고 있다(내무부, 1980: 44). 새마을운동의 마을진입로, 소하천, 소유지(小溜池)의 주변정비와 이제껏 버려진 폐경지에 마을동산을 만들어 주민의 정서를 정화 시키는 ‘국토 가꾸기와 자연보호’ 사업이 자연보호운동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차이는 1960~1970년대의 환경운동이 재산피해의 경제적 보상에 집중된 발아기에 해당되었다면, 1980년대는 이주나 건강피해에 대한 대책 등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화하는 양상을 보인 성숙기로의 진입 시기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반공해 주민운동이 최초로 등장하였다. 울산지역에서 1967~1969년의 한국알루미늄, 한국비료 등 공장건설이 본격 가동되면서 공해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울산 인근 삼산평야의 벼 피해에 대한 주민운동이 최초로 발발하였다. 하지만 운동 형태는 물론 조직에서도 뚜렷한 중심세력이 없어 조직형태를 갖추지 못했고 지역유지를 중심으로 공장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제 투쟁의 성격에 그쳤다.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로는 첫째, 주민들 자신이 공해에 대한 낮은 인식과 피해의 지속성과 입증방법을 알지 못했다.

9) 요컨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가족법 제정 및 개정사는 가족법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반하는 전근대적인 요소, 즉 성차별적 규정, 개인의 인격에 반하는 규정,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규정을 배제시키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법 개정사는 여성인권운동의 역사’였다(안경희, 2014: 124).

둘째, 집단적인 대응방법, 여론형성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은 물론이고 학계와 전문가단체의 해결 역량도 부재하였기 때문이었다(환경과 공해연구회, 1991: 270~272). 하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 환경운동은 전문가의 역량과 지역의 심각한 현안이 결합하면서 단기간에 급성장하게 되었다.

(2) 주요 인물과 사건, 그리고 단체

1980년대 환경운동은 온산·여천의 주민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다. 1979년 12월 5일 온산 비철금속단지에서 동 제련 시험가동 중 심각한 악취와 매연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보상투쟁이 전개되었는데, 6차례의 협의와 3차례의 시위 및 중재(지역 국회의원)를 걸쳐 보상요구액의 50%에 달하는 1억 9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여천 낙포리의 경우는 1979~1980년까지 8회의 이주대책에 대한 진정서 발송 등과 여러 차례의 집단농성으로 집단 이주가 최초로 결정된 사례이다.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역사에서 온산 병과 이주투쟁이 차지하는 의미는 적지 않다. 왜냐하면, 온산병 투쟁은 반공해운동단체들이 주민운동을 직접 지원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이다. 1983년부터 광주민주화운동의 여파로 한국공해문제연구소(공문연)를 필두로 공해반대청년운동협의회(공청협),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공민협) 등이 조직되었다. 1983년부터 공문연은 온산을 답사하면서 그동안 무시되었던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금속에 의한 공해병 문제는 정부에서 철저하게 통제하였고, 학계의 조사도 은밀하게 제제를 가했다. 현지조사단 파견과 건강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각 종교단체와 연합을 통해 온산의 공해피해가 사회문제화됨으로써 환경운동의 확실한 전환점이 되었다(환경과공해연구회, 1991: 274).

1980년대, 특히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환경운동은 그 지역주민 환경단체 간의 농촌 중심에서 공장의 유독가스, 분진이나 소음, 공장의 폐수배출 등 생활환경의 오염에 의한 도시지역의 주민운동으로 확대되었다. 1983년 목포시 주민들에 의한 영산강 보존운동, 1985년의 동두천지역 상수원인 신천의 오염심화에 대한 주민운동, 1987년 구로공단 주변 주민운동, 1987~1988년 상봉동 연탄공장 부근 주민운동, 1988년 신정동 오쇠동의 항공기소음피해 운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차이점은 농어촌 운동이 재산피해에 의한 경제투쟁이라면, 도시는 건강피해에 대한 반대운동의 성격이 강하고, 조직에서도 농어촌이 한두 개 단체나 지역유지 중심이라면, 도시지역은 여러 사회단체들의 연합형태(라이온스, 의사회, 약사회, 각종 종교단체와 청년회 등)가 주류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상봉동 연탄공장 주변의 주민운동은 반공해운동단체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의 연계투쟁으로 검진에 의해 진폐증 규명에 성공한 사례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9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반공해운동단체들이나 과학자, 의료계, 법조계 등 전문성을 확보한 조직들의 연계활동과 지원활동이 활성화되었다.

〈표 1〉 1980년대 중반의 환경운동단체

구분	사례
지역주민 환경단체	서울시공해피해주민공동대책위원회/ 골프장건설반대주민대책회의/ 산업폐기물매립지 건설반대주민대책회의/ 서해안개발지역주민대책회의/ 고리·월성·울진·영광·고흥 등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대책위원회
환경전문 기능단체	공해추방운동연합/ 부산공해추방운동협의회/ 울산공해추방운동연합준비위원회/ 광주환경공해연구회/ 목포녹색연구회/ 공해추방과 핵발전소 건설저지를 위한 여수·여천 시민의 모임/ 한국반핵반공해평화연구소
환경연구 전문인단체	환경과공해연구회/ 공해추방운동연합 연구위원회
대중단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출처: 환경과공해연구회(1991). p.280.

이 시기에 활동하였던 대표적인 환경운동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한국공해문제연구소

1982년 5월 3일 최열의 주도하에 한국 최초의 환경운동단체인 한국 공해문제연구소가 창립되었다. 여기에는 정문화·김태현 등이 참가하고, 박우섭·이범·이필렬 등이 실무진으로 참가하였다. 이사회장에 함세웅(가톨릭), 이사에 권호경·조승혁·조화순(개신교), 김승훈·김택암(가톨릭), 김병걸·성내운·유인호(학계), 이돈명·한승헌·홍성우(법조계), 오재길·이길재·임채정(사회운동)등 1970년대 반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가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안기부 등 당국에서는 창립을 저지하는 등 갖은 형태의 탄압을 가했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반월공단 등 도시공 단과 괴산·의성 등 농촌 공해지역 실태조사를 시발로, 단행본 『내 땅이 죽어간다』(일월서각, 1983), 『삶이나 죽음이나』(형성사, 1985), 『한국의 공해지도』(일월서각, 1986)등 국내 공해서적의 고전으로 통하는 서적들을 발간하는 등 1980년대 환경운동을 주도하였다(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2006).

② 공해추방운동연합

앞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공해문제를 민간 차원에서 해결하려고한 최초의 시도는 공해문제연구소의 설립이었다. 또한 1984년 12월에는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대학생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반공해 운동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며, 1987년에는 공해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전개하고자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이에 앞서 주부 등 여성들이 중심이 된 ‘공해반대 시민운동협의회’가 결성(1986.9.13)되어 각종 공해대책 강좌 및 공해고발 전화를 개설했다. 이들 3개 단체는 공해 문제와 관련된 사안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대활동을 자주 벌였는데,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이들 3개 단체가 통합하여 공해추방·반핵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통일을 기한 ‘공해추방운동연합’을 결성(1988.9.10)하였다. 공추련은 결성 이후 공해문제를 유발하는 기업들을 사회문제화 시킴으로써 공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고, 원전 건설, 영덕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전국핵발전소추방운동본부 창설(1990.4.15)에 적극 가담하면서, 핵발전소 건설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정부가 동해안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

하려던 계획을 백지화시키는 성과를 거두는 등 괄목할 만한 활동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공추련은 조직을 정비하고, 또한 많은 지역의 민간 환경운동단체를 발족시키는 모태 역할을 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③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엄밀히 말하면 의료보건의료단체이지만 환경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데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실협)이다. 인실협은 의사 최초의 시국선언 사건으로 보도되어 관심을 끈 ‘서울·경기·전북 의사 137명 시국선언’(1987.6.8)이 계기가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의사의 사회적 책임’과 ‘국민 건강권’을 모토로 한 단체인 인의협이 그해 11월 21일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인의협의 뿌리는 6월항쟁 이전부터 싹트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 배경에는 1970~1980년대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를 통한 빈민의료봉사, 무의탁진료 등 사회참여를 통해 성장한 여러 대학 의대생들의 민주의식이 있었다. 그리고 서울 의대 내부 언더 서클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다. 1970년대 초반의 ‘사회의학연구회’와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의 ‘한국의료문제연구회’가 그것이다. 두 단체의 핵심 멤버였던 양길승, 심재식, 고한석, 황승주, 홍영진, 김기락, 양요환, 김용익 등은 청계천 빈민 건강실태조사 등의 의료 활동과 반유신운동을 병행하고 있었다(《중앙일보》, 1999.11.29).

창립 30년을 맞아 현재까지도 인의협은 의료의 사회적 책임을 일관 되게 실천하고 있다. 1988년 상봉동 연탄공장 주민 진폐증 조사, 수은 중독 문송면 군 사건 이슈화,¹⁰⁾ 1989년 조선대생 이철규 씨 의사사 부검 참여, 1999년 원진레이온 직업병 치료 병원 설립 등 환경 및 보건의료 이슈를 주도하여 왔다. 이밖에도 1988년부터 성남지역에 자체 진료소를 설치하고 1989년부터는 매년 수해지역을 찾아 10여 년 이상 진료를 해왔다. 그리고 인의협의 최근 관심은 외국인노동자·장애인·노숙자 진료소 설치, ‘북한약품 지원 사업’ 그리고 ‘의료민영화 저지 및 공공성 확대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¹¹⁾ 전문성과 현장성을 결합한 이러한 활동은 왜 인의협이 6월항쟁 이후 쇠락한 다른 민주화단체와 달리 1,2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

3. 맺음말

이제 두 가지 논의를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은 1980년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이들 단체의 활동이 왜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뿌리에 해당하는가의 대답이다. 물론 ‘문화6단

10) 충남 서산 출신인 문송면은 야간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1987년 12월 5일 영등포의 한 공장(협성계기)에 입사했다. 그는 수은 증기가 가득 찬 작업실에서 액체 수은을 온도계에 주입 하는 일을 맡았다. 하지만 그는 입사 두 달 만에 수은에 중독되어 고열과 두통, 전신 발작을 일으켰다. 공장에 항의하고 정부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그의 요구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인의협(김록호와 박희순)의 도움과 동아일보의 보도(1988.5.11)로 이 문제는 사회문제가 되었고 노동부는 1988년 6월 29일 그의 산재를 인정했다. 그리고 사흘 뒤 문송면은 만 15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그의 죽음으로 이 사회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산업재해 전문병원인 녹색병원이 세워졌고 현장에서의 산재교육을 포함한 산업안전 보건대책의 수립과 직업병 판정위원회 설립 등 법적·제도적 변화까지 만들어냈다(권경원, 2017).

11) 이에 대해서는 인의협의 홈페이지 참조(<http://www.humanmed.org/page/0103.php>).

체'를 비롯한 이들 단체가 6월항쟁 직후 시민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지향했다거나 NGO로 바로 전환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운동의 목표와 가치라는 점에서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범주에 놓여 있었다. 1980년대까지의 민주화운동이나 민중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총체적 사회변혁을 위한 국가권력의 장악에 있었다. 국가권력을 직접 목표로 삼는 운동은 그 자신이 권력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정치투쟁을 중심적 과제로 삼게 되며, 이에 따라 국가권력과 사회운동의 관계는 화해하기 어려운 적대(antagonism)를 기본 틀로 삼는다. 이 글에서 살펴본 단체 들은 여전히 활동의 목표와 중심 전략을 국가정책이 공공이익이나 공공선에 부합하도록 압력을 극대화하는 '영향력의 정치'보다는 계급이 의의 실현에 두는 '민중의 정치'와 민주적 사회변혁을 추구하였던 '급진 노선'에 두었다. 그렇지만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이들은 시민운동의 뿌리와 전사(前史)를 구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운동 방식의 차이였다. 1980년대의 운동방식은 광주민주화 운동이 상징하듯이 국가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적 진압과 저항세력의 물리적 대항으로 점철되었다. 우선, 1980년 민주화 과정이 쿠데타에 의해 봉쇄되고,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력적 비극에 의해 종결되면서 심리적 좌절과 분노가 운동의 기본 정서로 각인되었고, 강압적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공안 통치에 의해 주요 사회운동은 불법화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높은 수준의 정부 억압 때문에 불가피 하게 급진적 이념지향성, 비공개·반합법 운동조직의 난립, 폭력적 저항방식이라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그렇지만 1980년대 중반에 생겨나기 시작하였던 문화예술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등등은 비교적 온건하고 합법적인 운동방식을 선호하였다. 이들은 화염병이나 점거, 농성보다는 정부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성명서·전시회·공청회·기자회견 등을 중시하였고, 자신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실태파악과 대안제시에 역점을 두었다. 둘째는 참여주체의 변화이다. 1980년대까지 사회운동의 기본 성격은 정치적 차원에서는 권위주의에서 민간 정부로의 정치권력의 변화를 추구하였던 민주화운동이었으며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는 독점재벌을 비롯한 기득 세력의 착취와 수탈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였던 민중운동이었다. 그렇지만 사회개혁을 기치로 내건 이들 단체들은 자신들의 지지 및 활동기반을 전문직이나 중산층에서 찾았다. 이들의 활동은 '보도지침'이나 'KBS 수신료 거부운동', '개헌지지 서명운동'에서 드러나듯이 일반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 속에서 급속히 확대되어 나갔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문제제기에 답할 차례이다. 이들의 활동은 6월항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들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6월항쟁의 성공을 이끌었던 관제탑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점이다. 전국적 단위 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6월항쟁을 이끈 지도부는 물론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였다. 국본은 일제 강점기 "민족해방운동 최대의 연합전선이었던 신간회"처럼 "우리의 운동이 이루어낼 수 있는 최대역량 결집"을 반영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 167). 출범 이후 국본은 '박종철군 고문살인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 즉 6·10대회를 이끌었고, 이에 앞서 직선제 개헌을 위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본의 형성은 두 해전에 결성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1985.3.29)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민통련'은 1984년에 설립된 '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 '민주통일 국민회의'가 1985년 총선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목표로 통합한 것인데, 재야의 형성 이래 최대 연합조직이라 할 수 있다. 민통련은 부문별·지역별 23

개 재야민주운동단체의 가맹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들 가맹단체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뒤 가맹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자율성을 갖고 있었다. 연대성과 대항 기능을 갖기 때문에 한두 단체의 와해에도 불구하고 민통련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서영석, 1986: 201).

6월항쟁과 관련하여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6월항쟁의 승리 요인으로써 국본이 지닌 민주대연합의 투쟁기구라는 성격을 주목하여 왔다. 그런 점에서 국본에 참여한 단체의 다양성과 포괄성 그리고 그 전국성은 1970년대와 비교해 1980년대 사회운동의 조직적, 인적 성장의 기반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즉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등장했던 국본은 야당과 운동세력의 연대뿐만 아니라 여기에 국민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를 가능토록 만듦으로써 최대민주화 연합의 구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최장집, 1989: 295). 필자는 본 논문에서 살펴본 단체들이야말로 민통련 결성이나 국본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이자, 국본이 일부 재야인사와 민중운동을 넘어선 최대연합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들 단체들이 민주화운동의 수평적 확대뿐만 아니라 수직적 확산, 즉 중앙을 넘어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다.

종합해 이들 새로운 시민운동의 맹아들은 1987년 국민운동본부 결성의 지역적 기반으로 이어졌다.¹²⁾ 그리고 넓게는 1987년 이후 지역을 근거로 한 다양한 시민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조직적·인적 기반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참고헌

- 권경원. 2017.3. 「열다섯 살 노동자 문송면」. 참여사회연구소. <월간참여사회>.
- 김주언. 1996.1. 「대법원의 보도지침 무죄확정에 부쳐」. <월간 말>, 138~141쪽.
- 김창남. 1989. 「80년대의 문화와 문화운동」. <문학과 사회>, 통권 제8호, 1330~1345쪽.
- 내무부. 1980. 자연보호백서.
- 대한출판문화협회. 1998. 대한출판문화협회 50년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 _____. 2012.12.13. 「함께 쓰는 민주주의: 인물·열사이야기」(<http://www.kdemo.or.kr/blog/people/post/595>).
-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엮음. 1989. 국민운동본부: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평가서(1).
- 박인혜. 1985.12. 「TV 시청료 내야 하나」. <새가정>.

12) 지방조직의 건설 과정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이해찬의 회고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는 각 부문운동이 전문화되어 나타나고, 인천은 노동운동세력을 중심으로 하여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을, 충남은 농민운동을 중심으로 종교계와 학생·청년운동이 결합하여 충남 민주운동협의회 발족”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6월항쟁의 와중에서 각 시도마다 그 지역의 정치투쟁단체가 성장하는데, 이것이 국본이 각 지역에 설치될 수 있었던 인적자원과 투쟁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국민운동의 발족 이후 그 조직이 시군단위까지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차이였다(사계절 편집부, 1987: 130).

- 박채복. 2005. 「한국 여성운동의 전개와 과제」. 《한·독사회과학논총》, 15(1), 231~252쪽.
- 서영석. 1986.9. 「명동집회와 재야 33개 단체」. 《정경문화》, 경향신문사.
- 서중석. 2011. 『6월항쟁』. 돌베개.
- 안경희. 2014. 「가족법 개정사와 여성운동」. 《이화젠더법학》, 6(2), 73~128쪽.
- 유영산. 2003.9.1. 「한국의 진보적 여성운동과 여성평우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www.kdemo.or.kr/blog/dictation/post/617>).
- 윤일웅. 1987.3. 「인권운동 단체들」. 《月刊朝鮮》, 84호.
- 윤재걸. 1985. 「재야민주·민중운동단체들」. 《신동아》, 8월호, 167쪽.
- 이정은. 1999. 「한국에서의 인권 개념과 인권 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상호. 2013. 시민의 탄생과 진화. 한림대출판부.
- _____. 2007. 여름. 「6월항쟁과 시민사회운동」. 《내일을 여는 역사》, 통권 제28호, 42~52쪽.
- _____. 2017. 한국시민사회사 1961-1986. 학민사.
- 정철희. 2003. 한국시민사회의 귀적: 197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동학. 아르케.
- 정태인. 1991. 「5월투쟁의 평가와 민족민주운동의 과제」. 《월간 말》, 7월호.
- 정해구·김혜진·정상호. 2005. 87년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정현백. 2006. 「한국의 여성운동 60년」. 《여성과 역사》, 4권 1호.
- 조현연. 1997. 「6월 민주항쟁의 이념. 주체. 전략」. 학술단체협의회 여름. 6월 민주항쟁과 한국 사회10년 1. 당대.
- 최장집. 1989. 「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전개」. 『한국현대정치구조와 변화』. 까치.
- 편집부. 1992.7. 「KBS 시청료 거부운동 그 후」. 《월간 말》.
- _____. 1986.7. 「부천서 성고문 사건」, 26~33쪽. 《월간 말》.
- _____. 1986.9. 「성고문 사건 권양의 메시지와 재정신청서」. 《월간 말》, 19~24쪽.
- _____. 1986.9. 「보도지침이란 무엇인가」. 《월간 말》, 2~4쪽.
- 편집부. 1987. 「전환 - 6월투쟁과 민주화의 진로」. 사계절.
-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1987. 『출판탄압백서』.
- 환경과공해연구회. 1991. 『공해문제와 공해대책』. 한길사.
- Mainwaring, S., G. O'Donnell, & J. S. Valenzuela. eds. 1992.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민주화 30년,
6월항쟁과 촛불혁명

1-3

'87 노동자대투쟁 30주년, 노동운동의 현주소

-침체와 위기국면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찾아서-

이원보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 문제의 제기

1987년 6월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으로부터 30년이 되었다. 그 사이 정권은 일곱 번이나 바뀐 나머지 2016년 늦가을 이후 거세게 타오른 촛불항쟁을 거쳐 올해 5월 9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한 세대로 일컬어지는 이 기간의 20년은 군부독재권력과 그 합작세력이 지배했고 그에 대칭되는 민주개혁세력 또는 자유주의 정권의 시대는 겨우 10년에 불과했다. 경제적으로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의 심각한 고비를 맞았음에도 경제규모상으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치에 오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연륜 동안 그 출발점이었던 87년에 비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로서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발전했는가?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대중의 삶과 노동운동의 조건은 어떻게 개선되어 있는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자본주의 변화과정에서 퇴적되어온 노동자대중의 불만과 요구가 일시에 표출된 대중적 항쟁이었으며 노동운동 변화 발전의 역사적 분수령이었다. 노동자대투쟁이후 노동운동은 구조와 성격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보이며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노동자대중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이 남긴 한계와 과제를 스스로 극복해 갔다. 노사간 힘의 관계는 전면 역전되었고 민주노조진영이 구축되어 총자본과의 치열한 대결을 거쳐 전노협과 민주노총이 출범했으며 한국노총의 개혁이 추동되었다. 노동운동의 이념에 있어서 사회변혁 또는 개혁 지향의 방향성이 제시되었고 투쟁

전략 전술에 있어서도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 목적의식적 조직적 투쟁의 특징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급성장한 노동운동의 위상과 역량은 96/97년 노동법개정 반대 총파업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10년 가까이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의 외연을 넓히고 내용을 충실하게 채움으로써 87년 6월 민주항쟁의 연장으로로서의 역사적 책무를 이행하였고 이 사회의 핵심적인 발전축으로 자리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운동은 1997년 말 엄습한 외환위기를 계기로 혹독한 시련과 심각한 혼란을 겪은 나머지 극심한 침체 또는 위기국면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끝모르는 추락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같은 노동운동의 양상은 운동의 주요측면, 곧 조직률, 조직구조, 자주성 민주성 등 기본성격, 투쟁력,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 등을 통해 드러나 왔고 특히 이명박근혜정권의 10년 동안 위기상황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표 참조). 두 정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유연화의 확충을 통해 노골적으로 대자본의 이익증대에 앞장섰다.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권력과 자본의 잔혹한 탄압은 거의 전면적이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 거대한 기간조직들은 불법화되고 자율 교섭에 의해 형성된 단체협약은 곳곳에서 훼손되었으며 민주적 노조들은 자본의 폭력으로 파괴되고 단체협약의 해지와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가압류사태로 노동조합은 질식상태에 몰려 있다.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정부의 공격은 2013년 12월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이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에 대한 대량구속과 장기간에 걸친 실형선고를 감행함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더욱이 복수노조체제하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나 타임오프제 등은 노동조합의 분열 경쟁과 파괴, 일상활동의 제한 등은 법률 제도적 족쇄로 된지 오래다. 그 결과로 노동운동은 수세적 방어적 투쟁에 급급하고 광범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일상화한 구조조정의 위협과 격렬한 경쟁에 내몰린 정규직노동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노동자들의 삶은 전반적으로 피폐해졌다.

【 표 】 1987년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추이

연도별	노조수(개)	조합원(천명)	조직률(%)	파업건수(건)	파업 참가자(천명)	노동손실일(천일)	파업지속일수
1987	4,103	1,267	13.8	3,749	1,262	6,946	5.3
1988	6,164	1,707	17.8	1,873	293	5,400	10.0
1989	7,883	1,932	18.6	1,616	409	6,351	19.2
1990	7,698	1,886	17.2	322	133	4,487	19.1
1995	6,606	1,614	12.7	88	49	392	22.6
1998	5,560	1,401	11.5	129	46	1,452	26.1
2000	5,698	1,526	11.6	250	177	1,893	30.0
2005	5,971	1,506	10.3	287	118	848	48.6
2010	4,420	1,643	9.7	86	40	511	36.2
2015	5,794	1,939	10.2	105	77	447	21.9

주1)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은 2015년 현재 5.8%로서 1989년 12.0%의 절반 이하로 낮아짐.

주2) 조합원중 여성은 23.7%. 사업체 규모별로는 30명 미만 0.1%, 30-99명이 2.7%인데 반해 300명 이상은 62.9%

주3) 부문별 조직률은 민간기업이 9.1%, 교원 14.6%, 공무원 66.3%

주4)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20.2%, 비정규직 2.0%

주5) 한국 노동조합운동은 남성, 공공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 여성, 민간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소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KLI노동통계』, 각년도판

이제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창출의 제도화를 관철하려던 박근혜정권은 반동적인 정치행태와 ‘노동개혁’을 고집하다가 촛불항쟁의 엄혹한 탄핵을 받아 자멸했다. 그리고 ‘적폐청산’과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제창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조치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노동운동에 드리워진 제약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노동운동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엄존한다. 물론 상황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건일 뿐 그것을 주체적으로 활용하여 스스로 힘을 키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노동운동사의 오랜 가르침이다.

2. 노동운동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불과 1년도 되기 전에 전국을 뒤흔들어 권력과 자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노동운동의 위력이 이처럼 참담하게 무너진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1997년 외환위기라는 급격한 상황변화 이후에 노동운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데 있다. 곧 ‘87년 체제’의 관성에서 벗어나 ‘97년 체제’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87년 체제란 정치적 민주화, 경제성장, 노동자의 시민권 획득, 민주노조운동의 성장, 전투적 조합주의에 의한 노동자 요구의 관철, 노동운동의 사회중심 세력화 등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그에 비해 97년 체제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시장 자본주의 등장,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변화, 자본의 신경영전략 등에 의한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변화로 인해 노동운동 존립기반 자체가 뒤흔들려 버렸다. 이로부터 87년 체제에서 노동운동에 유용하게 작용했던 노사관계 틀과 운용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린 것이고 임금 노동조건 개선은 고사하고 고용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기존의 운동방식은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특히 고용양태의 변화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은 성장체제에 익숙한 노동조합으로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조건들이었다. 노동운동에 드리워진 이런 그림자들은 자본과 권력의 치밀하고도 잔혹한 억압과 배제의 전략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했다.

1998년 이래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존 자체를 위해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다. 파업건수는 늘기 시작했다. 완강성도 급격히 높아졌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민주노총은 1997년 말부터 2009년 7월까지 2,232개의 노조의 조합원 255만 6,731명이 참가한 총 23회의 총파업을 전개했다(김태현, 2012가 : 36). 민주노총의 목표는 구조조정 중단, 공기업 민영화 저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노동유연화 반대 및 고용안정,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노동법 개악저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중앙조직의 결정에 따라 수행된 나머지 현장의 사전 준비 없이 진행되었다. 결국 총파업은 노동자 대중을 참여시키지 못했고 국민여론도 동원하지 못한 채 현장의 피로도만 높이게 되었다. 한국노총도 1999년 이후 몇 차례 총파업을 전개했으나 구조조정이나 민영화추세를 막아내지는 못하였다. 노동운동에 대한 총자본의 공세는 이른바 민주개혁정부 또는 자유주의 정권이라는 김대중-노무현정부하에서도 거세게 전개되었고 노동자들은 구속과 해고, 손배 청구와 가압류를 무릅쓰고 스스로 몸을 사르는 극한적인 저항투쟁과 파업 집회 시위 등으로 격렬하게

대응했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운동은 새로운 상황변화에 맞서기 위해 조직과 이념의 혁신을 도모했다. 그 중심은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양 날개 전략’이었다. 이와 아울러 이념의 재정립과 조직확대 및 조직 운영의 쇄신을 추진했다.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노동운동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차대한 과제로 떠올랐다. 민주노조진영에서의 산별노조 전환은 전노협과 민주노총이 당면목표로 설정하고 1990년대 중반 과기노조 등 소산별노조 결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1998년 보건의료노조 출범에서 시작되어 2001년 2월 금속노조 결성이 이루어졌으며 2003년 민주노총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07년까지 8개 대산별조직 통합조직화계획을 결의한 이래 급진전되었다. 그 결과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 조합원은 2006년 현재 전체의 76.7%로 보고되었으며 정부 통계에서도 2015년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의 83.6%가 초기업노조에 속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산별노조건설운동은 산별노조 중앙으로의 단체교섭권의 이양, 예산과 인력 등 조직자원 집중·활용, 산별교섭의 실현과 사용자 단체의 구성, 산별협약의 기틀 마련, 산별 최저임금 설정, 비정규직 관련 협약체결, 사회공공성 확보 등 사회적 의제의 제기와 공론화, 산업내 임금 및 노동조건 통일 시도 등의 성과를 올렸다(민주노총, 2011가: 34-36). 한국노총도 조직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산별노조 건설을 공식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했지만 금융산업노조(2000.3)와 택시노조(2004)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조업노조의 경우 ‘제조연대회의’를 통해 통합산별노조 결성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으나 산별노조 건설의 당위성이나 요구는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초기 ‘무늬만 산별’이라는 우려를 넘어 조직규모나 중앙집중적 운영, 통일교섭, 사회공공성 의제 제기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건설은 당초의 목표에 다가가지 못하고 정세변화를 추동해 내는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금융노조를 제외하고는 산별노조로서의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고 해당산업 노동자 대부분을 포용하지 못했다. 소속 조직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도 있지만 모두 합쳐도 그 비율은 극히 낮다. 또한 조직체제와 운영방식에서 기업별 관성의 존재, 사용자단체의 불완전한 구성으로 인한 산업별 단체교섭의 한계, 단체협약 적용의 협소함과 통일적 노동조건 구축 실패, 비정규직 및 사내하청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계급적 단결의 취약성과 대표성의 부재, 대공장 기초조직들에 대한 효과적인 제어 실패, 중앙집중적 지도 집행의 미숙과 민주성·현장성의 약화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민주노총, 2012.9 : 23-34). 물론 이러한 산별노조의 한계는 자본과 권력의 공세와 탄압 그리고 제도적 법률적 제약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기업단위 단체교섭창구 단일화와 산별노조의 배제,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한 부당노동행위 등이 그 예들이다.

다음으로 노동운동이 산별노조 건설과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였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이익과 목적을 실현하고 노동운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한국사회의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을 해결함으로써 노동운동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이행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교

두보의 구축이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전략은 노동중심의 진보정당 건설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세력화의 구축이었다. 진민주노총은 1997년 겨울 대통령 선거 이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채택하고 당원가입운동 촉진과 선거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했다. 민주노동당은 매번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내고 2004년 4월 제17대 총선거에서는 지역구 2명과 정당명부투표 득표율 13.1%(2,774,061표)로 모두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킴으로써 제3당의 지위로 의회진출의 꿈을 이루었다. 그러나 2008년 2월 대통령선거 패배의 책임과 당내 노선분쟁으로 분당사태를 겪은 후 치른 제18대 총선거에서는 5명의 국회의원 배출에 그치고 통합진보당으로 재출범한 2012년 4월 제19대 총선거에서는 11.4%의 지지표를 획득하여 1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지만 선거부정 파동으로 파탄의 위기를 맞게 되고 급기야 정권의 탄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개의 진보정당이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민주노총은 정치방침마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

한편 한국노총은 1997년 대선에서 사상 최초로 야당과의 정책연합을 이룬데 이어 2002년 민주사회당(2003년 녹색사민당) 결성을 통해 독자적인 대중정당을 지향했으나 2004년 총선거에서 참패하고 정당마저 해산되고 말았다. 이후 한국노총은 과거 보수집권당 또는 야당인 민주당과의 정책연합을 시도하는 등 혼란스러운 변화를 보여왔다.

다음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설정된 사회적 세력화를 위해 노동조합은 많은 활동을 전개했다. 그 대상은 농민, 빈민, 학생, 지식인의 운동과 시민운동, 통일운동이었다. 민주노총은 1990년대 이래 민중운동 진영과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해왔고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에도 줄곧 수많은 상설공동투쟁체, 사안별 공동투쟁체, 연대기구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당면 요구를 쟁점화하고 전선운동의 확대 강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한국노총 역시 다양한 사회연대운동을 전개했다. 그 가운데는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참가한 투쟁이나 활동도 상당수 들어 있으며 특히 통일운동과 관련한 활동들은 거의 대부분 민주노총과 공동보조를 취했다. 이러한 한국노총의 사회연대 활동은 과거에 비해 그 폭이나 내용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을 아울러 해결하려는 사회변혁 지향의 공동투쟁이나 연대를 추진해왔던 전통을 지속하면서 시민운동과의 결합을 확대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노총은 시민운동과의 연대를 확충하고 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특징을 보임으로써 “중도적 시민단체영역과의 소통을 활성화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한국노총, 2007 : 52).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민주노총은 노동중심의 진보정당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입증해냈고 보수정당 중심의 정치체제에 파열구를 냈다. 또한 진보정당의 건설과 활동은 조합원의 정치적 각성을 이끌어내고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장, 무상의료,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비롯하여 노동자 대중의 요구와 의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법 제도 개선 투쟁의 계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스스로 강조한 ‘노동자 주도성’과 ‘계급연합정당’의 실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또한 노동조직과 정당간 관계의 기본원칙이라는 ‘자율적 대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과 지지’를 관철하지 못했다.

이처럼 민주노총이 야심차게 추진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중도반단의 결과로 끝나게 된 것은 민주노총 스스로 노동정치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정당의 동원부대로 역할한데서 비롯된다. 민주노총은 당원가입운동, 후원금의 세액공제사업, 공식선거 후보 발굴, 선거운동 등을 통해 당세확장에 기여했으면서도 현장과 지역을 토대로 한 노동자당원의 활동은 거의 발전시키지 못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노조원의 중앙위원, 대의원 할당제 등 당의 노동자중심성을 갖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개개인의 결정에 맡김으로써 당내 정파들에게 묻혀버리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지 못한 결과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동중심의 진보정당’에서 노동자 중심성이 사라져가고 있는데도 이를 바로 잡지 못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당원의 절반이나 되는 진보정당에서 ‘사회주의 가치 지향’과 같은 사회 변혁 목표가 상실되고 자유주의 정당과 통합하는 사태를 막지 못했고 조합원 대중을 정파 갈등 속에 방치하는 우를 범했다. 이런 사태들은 결국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정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토대와 기반을 만들어내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이념적 갈래를 넘어서 진보진영 전체를 포괄하는 진보정당을 결성하지 못한데다 정파간에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지 못했고 끝내는 진보세력의 극심한 분열상황에 정치방침마저 결정하지 못하는 혼란을 겪고 있다.

요컨대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양 날개 혁신전략을 추진했으나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노조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광범위한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포용하지 못했다. 결국 노동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진보정당의 입지는 협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마저도 소수 정파들의 아귀다툼에 휘말려든 결과 진보정당은 분열과 파탄의 늪으로 빠져들어간 것이다.

노동조합이 조직혁신의 방책으로 동원된 이념의 재정립이나 조직확대 또는 조직운영도 완결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2000년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를 만들어 1년간 활동한 결과를 ‘노동운동발전 전략보고서 요지’를 자료 형태로 사업보고서에 실었다. 이 보고서에서 민주노총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어 인간이 주인되는 평등사회’를 지향한다고 함으로써 ‘사회변혁적 노동조합주의’의 이념을 설정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대의원대회에서 공식적으로 토의되지도 않았고 채택되지도 않았다. 민주노총의 이념은 선언과 강령 그리고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본과제에 정리되어 있을 뿐이다. 한국노총 역시 21세기 운동 이념으로 ‘평등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참여와 사회 연대적 조합주의’ 또는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표방했으나 ‘참여’와 ‘사회연대’에 대한 기본개념이 불분명하고 사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조직혁신 방안의 하나로 조직확대운동을 전개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2003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기금을 결의하여 실천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입법을 위한 총파업 투쟁과 함께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노동자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조합원으로부터의 기금 모금액이나 조직화의 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김종진, 2012 : 146-147 및 김태현 2012가 22-23).

민주노총은 또 조직혁신을 위한 ‘핵심적 방안’의 하나로 임원직선제를 2007년 채택했다. 직선제란 민주노총에 대한 조합원대중의 신뢰가 무너지고 중앙과 현장의 거리가 날이 갈수록 멀어지는 상황에

서 직선제를 통해 조합원을 주체로 나서게 하고 조직을 바닥에서부터 재조직할 수 있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극에 달한 정파간의 갈등과 선거 부작용을 막자는 것도 한 이유였다. 임원직선제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고 준비부족을 이유로 2013년까지 계속 유예되다가 2016년에야 성사되어 한상균 위원장 집행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한상균 집행부는 박근혜정권의 집중적인 탄압으로 나름대로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었고 조직혁신의 핵심적 기제로서의 임원직선제의 효과는 아직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노동운동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10년은 침체를 넘어 위기국면으로 치달았다. 운동이념이나 기초, 방향,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실천과 동떨어진 관념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의 힘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인 조직률은 10%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데도 조직확대를 위한 신통한 대책은 제시되지 못했다. 매년 수많은 열사들이 목숨을 내던지고 수백 수십 건의 치열한 투쟁을 벌였지만 고립 분산된 형태의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자 권익의 신장은 기업별 노조의 교섭들과 협소한 단체협약 적용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급기야는 공장 울타리 안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마저도 소외시키고 있었다. 제도개선 역시 슬한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노동자 보호장치로서의 과제 실현을 이루어내지는 못했다.

노동운동은 침체와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조직혁신을 시도했다. 산업별노조 건설과 노동자정치세력화 그리고 이념의 재설정과 조직확대 및 운영의 개혁 등이 그것들이었다. 그러나 조직혁신은 초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발전적 성과로 연결되지 못했고 노동운동의 위기의식은 조직 안팎에 널리 확산되었다. 결국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노동자를 끌어안지 못하고 대기업 남성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구조에 안주함으로써 대표성의 위기를 자초했다. 설상가상으로 각급 노조간부들의 비리와 부정이 연이어 드러남으로써 노동운동의 가장 기초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는 도덕성마저도 심각하게 훼손되어버렸다. 여기에 자본·권력·보수 언론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비난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더욱 심하게 왜곡되어 갔다. 사회적 외면과 불신은 물론이고 현장 조합원의 불신과 무관심은 날로 증가하면서 노동운동이 딛고 설 땅은 더욱 좁아졌다. 마침내 이명박근혜 정권의 노조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공세 앞에서 노동운동은 과거의 것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 위기국면과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3. 향후 노동운동의 과제

노동운동의 위기논쟁은 꽤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위기상황은 치유되기 보다는 갈수록 더욱 심화되었다. 한때 왕자병에 걸려 허둥대고 있다는 비판이 이목을 끈 적도 있었지만 현상,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와 해석들이 있어왔다. 민주노조운동이 방향타를 잃은 채 정치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민주노총은 ‘진보’가 아니라 ‘진상’이며 이대로 가면 민주노총도 타도대상이 될 것이

고 병원에 다 있는 응급실조차 갖추지 못한 민주노총은 이미 죽었으니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극단적 지적까지 다양하다(민주노총, 2009.4 :166-217). 대체로 노동조합운동이 대표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은 대부분의 분석에서 공통된다. 실제로 대표성의 지표인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2000년에는 11.6%까지 하락하고 2010년에는 한자리수인 9.7%까지 내려앉았다. 이를 양대 노총으로 나누어 보면 대표성은 겨우 5% 안팎에 불과하다. 이처럼 조직률 하락은 26년간 계속되어 왔고 새삼스러운 문제로 볼 수는 없다. 그 사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이었던 것이다. 구조적인 한계나 노동운동의 원리에 근거한 분석도 있다. 노동운동의 중심축인 노동조합의 위기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구조적인 것으로 위기에 빠질 위험성은 항상 갖고 있다는 주장,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대중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성, 연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 노동조합이 국가와 자본의 공세에 휩쓸려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조직내부 민주주의가 붕괴됐다는 점에서 자주성, 민주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침체양상이 민주노조운동을 지탱해왔던 민주성, 자주성, 투쟁성, 연대성의 원리가 노동현장에서부터 무너짐으로써 더욱 가중되었다고 보고 있다. 민주성은 각종 정파들 사이의 갈등과 패권주의의 이전투구 속에 실종되었고 이로부터 현장 조합원의 불신과 냉소는 갈수록 심화 확대되었다. 투쟁성은 위력적 총파업투쟁으로서의 성격보다는 당위적 투쟁에 복무하기 위한 성격이 짙고 판에 박은 듯 되풀이되는 집회와 시위는 조합원들을 감동시키기 보다는 지치게 만들어 투쟁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의 일상적 노무관리체계 하에서 노조간부들과 대의원들은 담합적 관계 속에 편입됨으로써 자주성은 약화되거나 상실되었고 자주성의 상실은 자본이 용납하지 않은 연대투쟁, 정치투쟁 참가를 꺼리게 만들고 스스로를 담합적 기업테두리 속으로 가두게 함으로써 운동성을 상실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고 연대성은 정규직 노조원들이 고용안정의 안전판으로 활용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제하는데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정규직 내에서도 자기 이해를 앞세워 상생을 위한 배치전환이나 일감나누기 마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김태현, 2012 : 18-19).

한국노총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상황변화 앞에서 총체적인 위기로 비슷한 진단을 하고 있다. 곧 노동조합운동은 노조간부의 부정부패 비리로 인한 자주성 및 도덕성의 위기, 조합민주주의 관료주의화 민주적 집중의 한계로 인한 민주성의 위기, 노조조직률 하락과 낮은 단체협약적용률에 의한 대표성의 위기, 남성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과 노동자간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연대성의 위기, 현장조직 동원력 및 총파업 위력의 약화로 인한 운동성의 위기, 이념 대안 전략의 부재로 나타난 정체성의 위기, 인적 자원의 이탈과 부족에 의한 재생산의 위기 등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다(한국노총, 2006 : 60-71).

물론 최근 들어 노동조합운동의 조직과 투쟁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조합원수의 양적 증가나 조직률의 유지 또는 상승, 초기업단위노조의 비중 증가, 신규 조직화의 진전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단체교섭의 진전, 희망버스와 같은 시민 사회운동세력의 지원, 노동쟁의의 증가와 투쟁의 완강성의 증가, 양대노총간의 연대 지속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전체적인 운동정세를 추동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 총자본의 공세는 날이 갈수록 거세

지는 추세다. 그렇다면 이제 노동운동이 위기극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각기 입장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고 일부는 실천되는 경우도 있다. 변화된 상황을 제대로 보고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활동기조와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변혁적 이념 정립과 현장 조직력 복원이 급선무라는 얘기도 있다. 지도력의 확립, 조직간 소통과 위상 역할의 재정립, 운영방식 사업관행의 개혁, 선거제도 및 승자독식구조의 극복도 제시되어 왔다. 민주노조운동을 넘어 사회연대노조운동으로 가야하고 끼리끼리 제 이익챙기기로 변질된 정파운동을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그런 한편에 기존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조직운동은 더 이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상황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운동체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현실적으로 희망버스운동과 같이 일반시민들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을 도모하는 예를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모든 운동이 비슷하지만 위기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일은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는 일인듯 하다. 운동 이념이기도 하고 운동방향, 전략목표라 할 수도 있지만 노동운동은 어떤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민주노총은 노동해방,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내용의 안을 논의한 적이 있고 한국노총은 사회개혁적 조합주의를 제시한바 있다. 기존의 경제적 조합주의, 정치적 조합주의, 사회적 조합주의가 한계를 드러냈으므로 사회운동 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회운동 조합주의는 여러나라 노동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고 있는 이념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경제적 개선을 넘어서 전체적인 사회 정치 경제적 조건 개선에 목적을 두며 둘째 운동의 주체는 노동자계층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계층, 조직, 집단과 연대하여 투쟁하며 셋째 여성 비정규노동자, 소수인종 등 취약계층 전체의 조직화를 우선하며 넷째 조합원의 직접 참여에 의한 조합내 민주주의를 운영의 규범으로 삼으며 다섯째 다양한 '투쟁과 교섭'의 운동방식을 추구하며 다섯째 자본의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국제적 연대주의를 강조한다(윤진호, 2007 : 51-55). 이 이념은 노동조합의 운동성과 현장성, 아래로부터의 역동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운동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명료한 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에 대한 깊은 경계의식으로 인해 조직화된 노동운동에 대해 지나친 거부감을 보인다는 단점을 지닌다고 한다(민주노총, 2011 : 20). 아무튼 주 객관적 조건이 급변한 상황에서 운동 방향의 새로운 정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조직문제에 관한 기업별노조의 극복이 여전히 핵심 문제로 드러나 있고 그 대안으로 산별노조 건설에 논의가 모아지는 것은 당연한 순서인 듯하다. 그것은 계급적 노동운동의 발전을 대명제로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정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개혁투쟁과 정책 제도개선,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산별노조 건설을 향한 범 조직적 결의가 굳게 정립되어야 하고 지난날의 산별노조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역사적 경험에 토대를 둔 구체적인 전환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회의 최대 모순이라 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곧 다수이면서 사회적 약자인 곧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노동운동이 가까운 시간 안에 확실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밖에 투쟁노선의 재정비와 조직운영의 혁신, 노동자의 정치세력

화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논의들이 있고 실천적인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한다.

어떤 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의 주체인 노동자 대중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일 것이며 이를 위한 광범한 노동대중의 현장토론과 실천활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자본으로부터 가해지는 경쟁과 실리주의 공세 속에서 위로부터의 간부중심 결정, 내리꽂기식 투쟁, 관료주의적 운영과 패권주의적 분파운동 작풍 등이 운동의 위기를 부추기는 내부원인으로 본다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노동운동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위기의 책임을 묻는 준엄한 질책도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노동이 희망'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는 듯하다. 그것은 노동운동은 성공과 패배, 도약과 침체를 거듭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역사발전의 법칙을 확신하는데서 나온 것이다. 스스로 주어진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부단히 자기혁신을 떠나감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치열하게 모색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라는 것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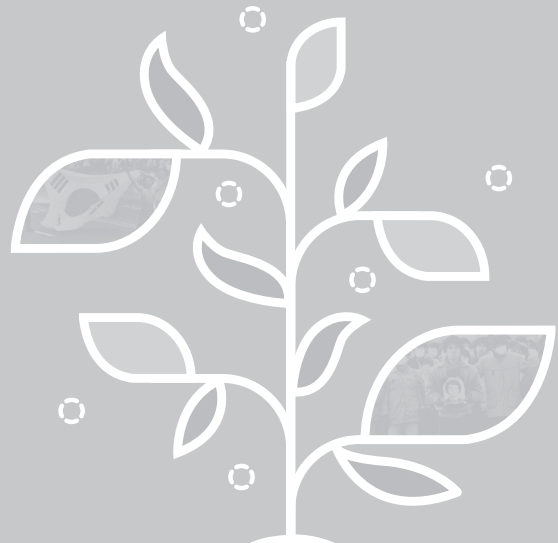
- 김종진(2012). 「민주노총 전략조직화사업은 무엇을 남겼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11/12월호
- 김태현(2012가). 「96-97 노동법 개정 총파업투쟁 그 의미와 과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96-97 노동법 개정 총파업투쟁! 현재적 의미와 과제』
- 김태현(2012나). 「87년 노동자대투쟁 25주년과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 87년 노동자대투쟁기념 심포지엄 종합토론회 자료집』
- 노중기(2005). 「위기의 민주노조운동, 무엇이 위기인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노동과 대안』 제77호(2005.4)
- 노중기(2009).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구조와 대응전략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제77호(2009. 가을 겨울호)
- 노중기(2012). 「통합진보당 사태와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 배규식(2005). 「노동조합 지배구조의 위기」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05.7.
- 윤진호(2007). 「선진국 노동조합의 조직혁신정책과 한국노동운동에의 시사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노동자대투쟁 20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 이원보(2013). 『한국노동운동사-100년의 기록』 (증보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민주노총(2011). 『산별노조시대,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 민주노총
- -----(2009.4). 『민주노총 혁신대토론회 자료모음』, 민주노총
- -----2012.9. 『산별노조운동 평가와 제2산별노조 발전전략』, 민주노총
- 조돈문(2006). 「추락하는 민주노조운동, 그 과제와 방향」,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노동과 대안』 제82호(2006.3)
- -----(2011).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의 승패와 조직력 변화」,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제17권 제1호
- -----(2011). 「비정규직노동자실태와 비정규직투쟁」,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 인식』 (봄 여름호)
- 한국노동연구원(1989~2016). 『KLI 노동통계』 .
- 한국노총(2006). 『다시 힘찬 발걸음! 한국노총의 운동이념 · 운동기조 · 발전전략』
- -----(2007). 『사업보고』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6월항쟁, 촛불혁명, 한국 민주주의 30년의 넘나듦과 나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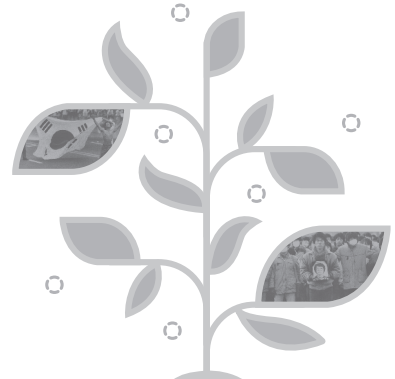
민주화 30년,
6월항쟁과
촛불혁명



제2부

6월항쟁의 역사적 좌표와 촛불혁명

-
- 2-1. 한국 근현대사 속의
6월민주항쟁:
3·1운동, 4월혁명과 비교
오제연(성균관대)
 - 2-2. 6월항쟁과 11월 촛불혁명:
반복과 차이
손호철(서강대)



민주화 30년,
6월항쟁과 촛불혁명

2-1

한국 근현대사 속의 6월 항쟁: 3.1운동·4월 혁명과 비교를 중심으로

오제연 | 성균관대 사학과

1. 머리말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파면 당했다. 대통령 파면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미 국회에서 가결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통령을 파면시킨 실제 힘은 대통령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후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기 시작한 시민들로부터 나왔다. 2016년 10월 29일 2만 명으로 시작한 촛불 집회와 시위는 매주 주기적으로 열리면서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 직전인 2016년 12월 3일 촛불 집회와 시위에는 서울에서만 170만 명, 전국 232만 명의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다. 청와대 100m 앞까지 진출한 촛불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국회 탄핵 전보다 그 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을 지켰고, 헌재의 선고 직전에는 다시 그 수가 100만 명에 육박했다. 헌재의 파면 선고 직후 2017년 3월 11일에 열린 마지막 20차 대회까지 134일간 촛불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연인원은 1천6백만 명에 달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엄청난 집회와 시위가 시종일관 질서정연하게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촛불항쟁’ 혹은 ‘촛불혁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2016~17년 촛불항쟁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현행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완수되었다.

현행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명문화한 전문(前文)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현행헌법 전문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2016~17년 촛불항쟁은 현행헌법을 탄생시킨 1987년 6월 항쟁은 물론 그 이전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1919년 3.1운동과 1960년 4월 혁명의 역사적 맥락 위에 있다. 숫자가 꼭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사건들은 약 30년 정도의 주기로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촛불항쟁은 1987년 6월 항쟁과 정확히 30년의 시차가 난다. 물론 이 30년이라는 숫자에서 어떤 과학적 원리나 법칙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직도 한국에 민주주의가 안착하지 못해 억압의 누적과 폭발이 세대가 바뀔 때마다 반복된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다. 대신 촛불항쟁 이전에 있었던 이 세 개의 거대한 저항적 집단행동을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 민주화운동이 갖는 특성과 맥락을 좀 더 거시적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전개된 3.1운동 같은 민족해방운동은 얼핏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넣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3.1운동은 일제의 억압적 무단통치로부터 조선인의 자유를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적/형식적 측면은 물론 사회경제적/실질적 측면과도 직접 연결된다. 숭한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 이래 지금까지 굳건히 이어진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제’ 원리를 확립한 결정적 계기가 바로 3.1운동이었다. 3.1운동 과정에서 여러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는데, 그 중 대한제국으로의 복귀를 주장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또 당시 여러 정부안이 등장했는데 모두 민주공화제를 지향했다. 그 결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의 원리로 탄생할 수 있었다(이준식, 2010: 49~50).

고전적 인권인 자유권뿐만 아니라 노동3권을 포함해 복지국가의 기본권인 사회적 기본권도 대거 포괄하면서 통제경제 내지 계획경제에 가까운 구상을 담은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민주주의라는 이상에 비교적 충실한 진보적인 헌법이었다(이준식, 2010: 68~69). 제헌헌법의 이 같은 내용 역시 3.1운동 이후 민족해방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치세력에 의해 공유되어 계승된 것이었다.

한국 민주화의 역사에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1960년 4월 혁명은 단연 첫손에 꼽히는 사건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시민의 힘으로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 4월 혁명은 한국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획득한 첫 번째 사건이었다. 4월 혁명의 경험은 이후 민주화운동의 마중물이자 원동력이 되었다. 지난 수십 년 간 한국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4월 혁명을 성공시킨 경험, 즉 피땀을 흘려 자유와 민주주의를 획득했던 승리의 경험이 놓여 있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싸워서 쟁취한 사람만이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4월 혁명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안겨준 중요한 사건이었다(오제연, 2017: 219~220).

1987년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오늘날 민주화 이행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의 기억 위에서 급속히 고양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역량은, 1987년 6월 항쟁에서 극적으로 발현하였다. 그 결과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 속에 전두환 정

권으로부터 6.29선언이라는 행복을 받아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탄생한 소위 '87년 체제'는 이후 오늘날까지 30년을 지속하면서 군부독재를 끝내고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대폭 확대되는 전기를 마련했다. 그렇다면 1987년 6월 항쟁을 1919년 3.1운동, 1960년 4월 혁명과 비교했을 때 발견되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과 맥락은 무엇일까? 민주화운동의 '배경', '양상', '주체'라는 분석 지점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배경

1) 정치적 억압과 사회경제적 모순 심화

모든 운동에는 그 배경이 존재한다. 배경의 구조적 핵심은 정치적 '억압'과 사회경제적 '모순'이다. 6월 항쟁은 물론 4월 혁명과 3.1운동은 각각 1980년대, 1950년대, 1910년대 정치적 억압이 심화되는 가운데서 발생했다. 두 차례에 걸친 쿠데타와 광주에서의 학살을 통해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간간히 소위 '유화국면'을 조성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억압적 통제 정책을 고수하였다. 1986년에는 학생운동권 등 민주화운동 세력을 공권력을 동원해 보다 철저히 탄압하고 1987년에는 '4.13호헌조치'를 통해 정치권의 개헌 논의마저 거부하는 등 억압의 강도를 높여나갔다.

1950년대 이승만 정권 역시 '발취개헌'과 '사사오입개헌'으로 종신집권의 길을 연 후, 정·부통령선거를 앞둔 1958년에 국가보안법을 날치기로 개정하고 1959년에는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등 비판세력에 대한 억압을 강화해 나갔다. '단군 이래 최대의 부정선거'로 기록된 1960년 '3.15부정선거'는 그 최종 결과물이었다.

일제는 1910년 대한제국을 병합해 식민지로 만든 후 '헌병경찰제'로 대표되는 무단적 통치체제를 도입하여 식민지 조선인들을 힘으로 억압하였다. 헌병경찰은 광범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또한 일제는 1910년 '집회 단속에 관한 건'을 제정하여 사실상 모든 정치집회를 금지하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일제의 단체를 해산시켰다. 또 '신문지법', '출판법'을 확대 적용하여 조선인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을 강제 폐간시켰다. 일제는 이처럼 식민지 조선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기본권을 완전히 부정하였다(전명혁, 2001: 73).

사회경제적 모순과 관련한 저항은 보통 경제상황이 악화될 때 발생한다. 4월 혁명 당시 미국 원조의 감소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1957년 8%에서 1960년 2%까지 떨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1979년 '부마항쟁'과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도 모두 불경기 때 발생했다. 반면 6월 항쟁은 '단군 이래의 최대 호황' 시기에 일어났다. 호경기의 집단적 저항은 특이한 면이 있으나, 당시의 경제적 호황은 보수적인 종교인이나 중산층들이 경제 수준에 상응하는 민주화를 희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6월 항쟁에 참여하거나 거리에서 지원하고 지지한 시민 중에는 회사원도 많았지만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도시빈민, 무직자 등 기층 민중이 많았다. 회사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호황의 수혜를 적게

받거나 여전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다. 지방의 경우 호경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이었다. 농민들은 농축산물 개방이 걱정이었다. 또 6월 항쟁에 참여한 상인 중에는 영세상인, 중소기업처럼 전두환 정권에 대해 반감을 가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백화점, 쇼핑몰 등 독과점업체의 진출로 영업이 위축된 데다 세금부담마저 컸다. 상인들이 시위에 호응하거나 호의적이었던 데에는 수출 호조로 정부가 통화팽창 억제정책을 쓰게 됨에 따라 내수시장이 위축된 점도 작용했다(서중석, 2011: 656~657). 호경기라 할지라도 주체에 따라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각기 달랐고, 이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불안과 불만이 쌓일 수 있었던 것이다.

3.1운동과 관련해서는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경제 관련 통계가 부정확해 실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당시 조선인들 역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가옥세, 주세, 연초세며 영업세, 인지세 등 1910년 이후 신설된 세금에 대한 저항 심리가 강했고 뽕나무 재배나 간척 사업 등 부역 동원에 대한 염증이 컸다. 조선인의 전통에 반하는 공동묘지 규칙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권보드래, 2015: 208~212). 수많은 식민지 조선인들이 3.1운동에 참여하는 데에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고통과 불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2) 결정적 죽음 및 희생

그러나 정치적 ‘억압’과 사회경제적 ‘모순’이 곧바로 집단적 저항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억압과 사회경제적 모순이 커도 이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사람들이 권력에 맞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행동을 개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3.1운동, 4월 혁명, 6월 항쟁 속에는 공교롭게도 같은 유형의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 바로 ‘특정인의 죽음’이다.

1987년 6월 항쟁은 그 해 1월에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1987년 1월 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경찰에 끌려갔다. 박종철이 아니라 도피 중이던 그의 선배를 잡기 위한 조치였다. 경찰은 박종철에게 선배의 소재를 물었지만 그는 끝까지 모른다고 버텼다. 경찰은 박종철의 입을 열기 위해 물고문을 자행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종철이 사망했다. 처음에 경찰은 이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는 경찰 발표가 그래서 나왔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황당한 말이었지만, 언론이 통제된 당시에는 이런 말로도 진실을 숨기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담당 부검의가 용기를 내어 고문치사 사실을 밝힘으로써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 전두환 정권은 이후에도 이 사건의 진상을 축소·왜곡하려 했지만 결국 모두 폭로되었다. 오히려 학생운동권 등 민주화 세력들은 이를 계기로 힘을 모아 1987년 6월 10일을 디데이로 하는 대규모 항쟁을 준비해 나갔다.

6월 10일로 예정된 ‘박종철군 고문살인 조작·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앞두고 학생들은 연일 크고 작은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하루 전날인 6월 9일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교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는 곧 혼수상태에 빠졌다. 의식을 잃은 이한열의 소식이 알려지고, 그가 시위 현장에서 피를 흘리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학생들은 물론 시

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이러한 분노 속에서 6월 10일부터 본격적인 항쟁이 전개되었다(오제연, 2017: 246~247). 이한열은 결국 7월 5일 숨을 거두었다. 학생운동이 격렬해진 1984년 이후 전두환 정권은 시위를 막기 위해 최루탄을 남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고 기어코 이한열의 희생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 기간 내내 엄청난 양의 최루탄을 사용했다. 이는 중산층까지도 정권에 등을 돌리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한열을 죽음으로 몰아간 최루탄은 약 30년 전인 1960년 3월 15일에도 부정선거에 항의하던 마산상고 입학예정생 김주열의 목숨을 앗아간 바 있었다. 남원 출신인 김주열은 1960년 마산상고에 진학하기 위해 막 마산에 온 상황이었다. 그런데 김주열은 1960년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는 '1차 마산항쟁'에 참여했다가 실종됐다. 그러다 약 한 달 뒤인 4월 11일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다. 그런데 발견된 시신의 모습이 몹시 끔찍했다. 시위 진압 당시 경찰은 벽도 뚫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미사일처럼 생긴 폭동 진압용 최루탄을 시위대를 향해 직사했다. 바로 그 최루탄이 시위대에 있던 김주열의 눈을 뚫고 들어갔던 것이다. 3월 15일 시위 현장에서 김주열의 시신을 확인한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마산 앞바다에 던졌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한 달 채 걸리지 않았다.

김주열의 시신 발견은 또래 학생들의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다. 자식을 둔 부모들도 함께 분노했다. 여기에는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 남원에서 마산으로 달려온 김주열의 어머니가 약 한 달 동안 온 마산 시내를 미친 듯 찾아 헤맨 것이 큰 영향을 줬다. 김주열 실종 기간 동안 마산 시내에는 김주열과 그의 어머니 소식이 짝 퍼졌다. 자식을 둔 부모들은 애타게 자식을 찾는 김주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무척 안타까워했다. 김주열의 어머니는 한 달 내내 아들을 찾다가 결국 4월 11일에 마산을 떠났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의 시신이 떠올랐다(오제연, 2017: 226~227). 김주열의 시신이 도립병원에 안치되자 순식간에 학생과 부모들이 몰려들었다. 학생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고문경관 찾아내라"고 절규하며 시위를 시작했고, 그 뒤를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며 뒤따랐다. 특히 어머니들은 "죽은 내 자식을 내놓아라", "나도 죽여달라"고 외치며 분노와 울음을 한꺼번에 터트렸다. 다음날 시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학생들의 시위를 뒤따르면서 "자식을 지키자"라고 외쳤다. 여학생들이 시위에 많이 참여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처참한 김주열의 시신 발견과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계속된 '2차 마산항쟁'은 드디어 서울의 대학생들을 움직였다(서중석, 2011: 72~73). '피의 화요일' 4월 19일의 대규모 시위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3.1운동은 고종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 1919년 1월 고종이 사망했다. 그런데 곧바로 고종이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독살 당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고종의 독살설은 그 자체로 식민지 조선인들을 자극했다. 여기에 죽은 고종이 장례절차와 관련해서 홀시 당한다는 공감감이 더해졌다. 죽은 고종에 대한 애도의 심정은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반감과 결합했다(권보드래, 2015: 199~202). 고종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한제국기 이래 지속된 '황제 환상'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많은 식민지 조선인들은 고종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독살설에 분노했다. 실제로 3.1운동 당시 서울에서의 시위는 덕수궁 대안문 앞이나 탑골공원 같은 고종과 관계된 장소에서 주로 전개되었다.

죽음만이 결정적 계기는 아니다. 가시적인 폭력과 희생도 사람들의 분노를 고조시켜 집단행동에 나

서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4월 혁명의 경우 4월 18일 시위에 나선 고려대 학생들을 정치깡패들이 습격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그 다음날 대학생들이 전면적으로 거리에 나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이 정치깡패들에 의해 잔혹하게 폭행당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또한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때 고려대 학생 한 명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그 내용이 신문에까지 실리면서 학생과 시민들의 분노는 최고조에 달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음날 4월 19일 시위는 대규모로 또 격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3.1운동 때에는 여학생들의 희생이 부각되었다. 3.1운동 당시 낮선 풍경은 여학생이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는 모습이였다. 그런데 여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다 검거되어 구치소로 이감되는 모습이 조선인들의 가슴 속에 증오와 분노의 격렬한 감정을 일으켰다. 게다가 경찰 수사관들이 수감된 여학생들에게 온갖 야만적인 행위를 저지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증오와 분노는 더욱 커졌다(김상태, 2001: 86, 91; 김정인, 2009: 153~155). 유관순의 일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방 직후 널리 확산될 수 있었다.

3) 지배 도구의 전유

끝으로 한국 민주화운동의 배경 중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권력이 보다 강력한 지배를 위해 고안 또는 의도한 정책/제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운동 과정에서 권력의 의도와 정반대로 저항주체들에 의해 저항의 도구로 전유되었다는 사실이다. 뒤에서 자세하게 보겠지만 1987년 6월 항쟁은 그 어떠한 민주화운동보다도 전국적으로 또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었다. 다수의 대학생들이 이러한 전국적, 동시다발적 저항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는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 직후인 1980년 7월 30일에 단행한 교육개혁조치 덕분이었다.

‘7.30교육개혁조치’가 대학교육에 미친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는 대학인구의 급속한 팽창이었다. 1960년대 이래 지배권력이 고등교육 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정책 중 하나가 학생 정원의 억제였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이 갖는 저항적 기능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양적 통제방식이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베이비붐 세대의 진학과 높은 고등교육 욕구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경제성장에 따라 고급인력의 공급도 더 필요했다. 무엇보다 취약한 정권의 기반을 교육을 통한 기회의 균등 실현으로 메꿀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은 권력을 잡자마자 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학생 수는 1980년 60만 명 수준에서 1985년에는 1백30만 명 수준으로 5년 사이에 210%가 넘는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성혜령, 1990: 99).

대신 크게 증가한 대학생들을 통제하는 장치로 ‘졸업정원제’를 도입했다. 졸업정원제는 입학 단계에서 정원의 130%를 선발하게 한 뒤 학업 성적을 토대로 졸업 전에 30% 정도를 일률적으로 강제 탈락시키는 제도였다. 여기에는 대학생이 양적으로 증가해도 강제 탈락이 가져오는 불이익에 대한 강박 관념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집단행동은 억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권력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최종철, 1989: 409~410).

전두환 정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이전 장려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다. 지방으로의 대학 이전 장려 정책은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분교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지방대학 육성책’은 과밀화한 서울 인구의 분산 같은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추진되었으나, 그 속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의 비중을 약화시키면 학생들의 시위도 약화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서중석, 2011: 603~604). 1980년을 전후로 만들어진 주요 대학의 분교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1980), 고려대학교 조치원캠퍼스(1980),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1980),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1978),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1978),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1985),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1979),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1977),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1979),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1979), 한양대학교 안성캠퍼스(1978),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1988) 등이었다(우마코시 토루, 2001: 285).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역설적으로 학생운동의 양적, 지역적 기반을 크게 확대시키고, 각 지역 별로 조직적인 저항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6월 항쟁에서는 그 이전보다 전국적으로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시위가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정된 경찰력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동시다발적 시위를 막아내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전국적, 동시다발적 시위는 전두환 정권이 6월 항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전두환 정권의 학생운동 통제정책이 역설적으로 6월 항쟁에서 강력한 저항의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1960년 4월 혁명에서는 학도호국단의 존재와 역할이 흥미롭다. 이승만 정권은 1949년 학원을 군대식으로 통제하기 위해 기존의 학생회를 해체하고 새롭게 학도호국단을 만들었다. 모든 학생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학도호국단에 강제로 가입해야 했다. 학도호국단은 1950년대 내내 학내에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한편 각종 관제행사와 관제데모에 학생들을 동원했다. 그런데 1950년대 각 학교의 상황을 보면 학내에서 학원비리와 관련한 분규가 발생했을 때 전교생이 학도호국단의 지휘 하에 일사분란하게 동맹휴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학도호국단을 통해 형성된 당시 학생들의 집단성과 규율성이 정권의 의도와 달리 학원 분규에서 저항의 수단으로 전유된 것이다. 중고등학교 동맹휴학과 같은 1950년대 학생 저항 사례에서 더욱 주목해야 하는 점은 학도호국단을 통한 집단적인 힘의 결집과 분출이 당시 학생들에게 익숙한 ‘경험’이었다는 사실이다.

4월 혁명 초기에 대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시위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관제데모의 경험이 큰 역할을 했다. 4월 혁명의 시작을 알린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학생시위 초반, 교통경찰이 학생들의 시위 대열을 보고 이를 막기는커녕 시위에 방해될 모든 차량의 운행을 중지시켜주는 친절을 베풀었던 것도, 갑작스러운 학생들의 시위를 늘상 있었던 관제데모로 착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4월 혁명 당시 대부분 고등학생 시위는 학도호국단 조직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대학생들은 고등학생들에 비해 관제데모에 덜 동원되었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차이에 불과했다. 학도호국단이라는 틀에서 대학생들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4월 혁명 당시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도호국단 간부들을 중심으로 항쟁에 결집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대학생들도 학도호국단의 훈련을 바탕으로 일사분란하게 시위에 나섰다. 학도호국단은 그만큼 익숙한 경험이었고 그 경험이 의도치 않게 4월 혁명에 학생들이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었다(오제연 2014: 36~40).

1919년 3.1운동에서는 ‘만세’ 구호의 활용이 주목된다. 3.1운동은 기본적으로 ‘만세’를 부르며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때의 시위를 흔히 ‘만세시위’라고 한다. 만세 앞에 ‘대한독립’ 혹은 ‘조선독립’을 넣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냥 ‘만세’만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조선인들이 3.1운동 때 저항의 상징으로 외쳤던 ‘만세’는 사실 메이지시기 일본에서 천황의 대중적인 권위를 높이기 위한 의례로 발명된 군중 환호였다. 1894년 한반도에 출병하여 청나라를 꺾고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일본군은 농민군 탄압을 경축하는 자리에서 조선인들에게 ‘만세’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후 ‘만세’는 독립협회 운동을 거쳐 애국계몽운동 과정에서 일반화되었다. 대한제국기에는 ‘대한제국 만세’, ‘대황제폐하 만세’와 ‘황태자전하 천세’ 등의 용례로 사용되었다. 반면 ‘대한(조선)독립 만세’라는 구호는 3.1운동 당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권보드래, 2015: 205~207).

일본 천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만세’ 구호는 아이러니하게도 3.1운동에 이르러 식민지 조선에서 민족의 일체감을 양성해 일본에 대한 저항을 표상하는 민중의 발성장치가 되었다. ‘만세’는 강요된 것이자 근대적 지식인에 의해 계몽적으로 확산된 정치문화였지만, 3.1운동 과정에서 민중문화에 흡수되어 저항의 수단으로써 전국에 울려 퍼져 나갔다(조경달, 2009: 243). 이상과 같이 한국 민주화운동에서는 권력이 만들어낸 지배의 도구가 그 의도와 상관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항의 도구로 전유되어 큰 위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한국 민주화운동은 지배와 저항이 갖는 이러한 변증법적 관계를 바탕으로 전진해 나갔던 것이다.

3. 양상

1) 전국적인 동시다발 시위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권력의 억압과 사회경제적 모순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이 대규모 시위의 형태로 여러 차례 전개된 바 있다. 3.1운동, 4월 혁명, 6월 항쟁이외에도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10월 인민항쟁’, ‘6.3항쟁’,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건은 모두 크고 격렬한 시위를 수반했다. 그러나 지역적 시위 양상을 보면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6.10만세운동은 서울을 중심으로 시위가 전개되었고, 광주학생운동 때는 서울에서도 동맹휴학과 시위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광주와 목포, 나주, 함평 등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났다. 1964~1965년 6.3항쟁의 경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발생했지만 서울의 시위에 비해 지방 시위는 미약한 편이었다.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중항쟁은 그 역사적 중요성과는 별개로 부산, 마산, 광주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된 항쟁이었다. 1946년 10월 인민항쟁 당시 시위가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었지만 동시다발적이라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반면 3.1운동, 4월 혁명, 6월 항쟁은 시위가 전국적 규모로 또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민주화운동들과 구분된다. 1987년 6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6월 항쟁의 경우 6.29 선언이 나올 때까지 약 20일 동안 전국 곳곳에서 매일 평균 100회 이상의 시위가 동시다발로 벌어졌

다. 특히 6월 18일 ‘최루탄추방대회’와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은 한꺼번에 1백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갈수록 참가 지역이 확산되어 대도시, 중소도시 뿐 아니라 농촌 지역의 군 단위에서도 시위가 일어났다. 6월 26일 하루에만 37~38개 시·군에서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는데, 6월 10일 시위가 22개 시에서 동시에 벌어진 것과 비교했을 때 항쟁 참여 지역이 훨씬 넓어진 셈이다. 6월 항쟁에 참가한 연 인원은 400~500만 명으로 추산된다(박준성, 2016: 186~187; 서중석, 2011: 529).

6월 항쟁의 전국화 과정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했다. 6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6.10대회와 명동성당농성투쟁 등 서울에서의 항쟁이 중심이었다. 6월 15일 정도부터는 부산, 대전, 진주 등에서 격렬한 시위가 전개되어 전두환 정권의 공권력을 크게 위협했다. 그러다 6월 20일부터는 격렬한 대규모 시위가 광주, 전주, 순천, 익산 등 호남 지방으로 옮겨졌다(서중석, 2011: 375~376, 478~479). 6월 항쟁에서 전국적 투쟁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독재에 대한 비판의식 강화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지역 내 민주주의 역량이 증대했기 때문이었다. 6월 항쟁에서는 과거에 시위가 잘 일어나지 않았던 지역에서 시위가 꽤 큰 규모로, 그것도 자주 일어났다. 그러한 지역은 거의 예외 없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분교를 설치한 지역이거나, 1980년대에 대학이 신설되었거나, 가톨릭 농민회 같은 강력한 농민조직이 만들어진 곳이었다(서중석, 2011: 602).

6월 항쟁의 전국적 동시다발 시위는 경찰 병력을 분산시켰다. 분산된 경찰 병력으로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거센 시위의 물결을 막아낼 수 없었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5.18광주민중항쟁 때처럼 군을 동원해 6월 항쟁을 진압하고자 했다. 하지만 광주와 그 부근 지역으로 한정되었던 5.18과 달리 전국적인 범위에서 동시다발로 전개되던 6월 항쟁을 진압하는 것은 군을 동원하더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이미 5.18 당시 엄청난 유혈 학살을 저지른 전두환 정권으로서는 그 보다 몇 배는 더 큰 규모로 전국 곳곳에서 전개되는 6월 항쟁을 또다시 군을 동원해 진압하는 것에 커다란 부담을 느꼈다. 경찰력으로 지탱하기 힘들고, 군 투입도 어렵다고 판단한 전두환 정권은 결국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박준성, 2016: 187~188).

시위의 전국성과 동시다발성이라는 측면에서 3.1운동은 6월 항쟁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3.1운동은 서울을 비롯한 평양·진남포·안주(평안남도), 의주·선천(평안북도), 원산(함경남도) 등 7개 도시에서 시작되었다. 첫 주의 시위는 주로 북부 지방의 도청 소재지나 주요 도시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철도와 간선 도로를 따라 인근 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시위가 점차 확산되었다. 3월 중순에 이르러 시위가 전국화했다. 전국으로 확산된 3.1운동은 4월 말까지 약 두 달 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3월 1일 7개 도시의 시위는 33인 민족대표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와 천도교 지도자들에 의해 준비된 것이었다. 양자 모두 북부지방에 교인이 편중되어 있었고, 기독교가 도시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고 천도교는 도시에 대교구를 설치했던 까닭에 3.1운동이 북부지방 도시에서 먼저 촉발되었던 것이다. 도시민이 촉발한 3.1운동은 농민을 비롯한 민중이 적극 호응하면서 전국적 항쟁으로 발전했다(김정인, 2009: 152~153). 1919년 3월 1일 이후 4월 말까지 약 두 달 동안 전국 232개 부·군(府·郡) 지역 중 223개 지역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을 정도로 거의 모든 읍면에서 3.1운동이 전개되었다(배성준, 2009: 291). 특히 각 지역의 장날 장터가 만세시위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 3.1운동의 시위 회수나 참가 인원수, 피해 수는 기록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따

르면 1919년 3~5월 동안 50인 이상의 시위가 1,542회 전개되었고, 시위 인원은 2백 만 명이 넘었으며, 사망 7,509명, 부상 15,761명, 피검 46,948명에 이르렀다. 일본 측 자료에도 3~4월 동안 848회의 시위가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이정은, 2015: 24). 즉, 3.1운동 당시 하루 평균 약 150회 내외의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셈이다.

4월 혁명은 3.1운동이나 6월 항쟁과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선 4월 혁명에서도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미 3.15부정선거 이전부터 2월 28일 대구에서 일어난 고등학생 시위를 기점으로 3월 8일과 10일 대전, 3월 14일 서울에서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연이어 전개되었다. 3월 15일 부정선거 이후에는 당일 마산에서 벌어진 1차 마산항쟁과, 김주열 시신 발견 이후 벌어진 2차 마산항쟁, 그리고 4월 18일 서울의 고려대생 시위를 거쳐 4월 19일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대규모 시위와 유혈 사태가 일어났다. 그 후 마산 등 몇몇 도시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지다 4월 25일 서울의 교수단 시위를 계기로 대규모 시위가 재개되어 4월 26일에는 서울, 대전, 대구 등지에서 크고 격렬한 시위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이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3.1운동과 6월 항쟁처럼 4월 혁명도 전국적인 시위 양상을 보였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먼저 서울에서 시작한 시위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에서 시작한 시위가 서울로 확산되는 방식을 취했다. 4월 혁명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2월 28일 대구에서의 고등학생 시위로 보는데, 이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대전을 거쳐 3월 14일 경 서울로 이어진 것이다. 또 4월 혁명의 본격적인 시작 이후에도 김주열의 시신 발견과 2차 마산항쟁의 영향을 받아 비로소 4월 18일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4월 혁명은 동시다발적인 성격을 보여주기에는 하지만 그 정도가 3.1운동이나 6월 항쟁에 비해 약한 편이다. 4월 혁명 당시 대규모 동시다발 시위는 흔히 ‘피의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4월 19일과 ‘승리의 화요일’이라 불리는 4월 26일 두 차례 일어났다. 4월 19일에는 서울과 더불어 부산, 광주, 대구, 청주에서 시위가 발생했고, 4월 26일에는 서울과 더불어 부산, 대전, 대구, 목포, 여수, 순천, 공주에서 시위가 발생했다. 이들 지역의 시위는 대부분 크고 격렬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6월 항쟁과 3.1운동 당시 매일 각각 100회 이상, 150회 내외의 시위가 일어난 것과 비교했을 때 시위의 동시다발성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끝으로 4월 혁명은 도시, 그중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당시 각 지역의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3.1운동이 주로 농촌의 읍내 장터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은 물론, 6월 항쟁이 대도시와 더불어 지역 중소도시에서 일어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2) 폭력 시위와 비폭력 시위의 배합

6월 항쟁 당시 시위를 선도했던 야당, 재야, 학생운동권은 모두 비폭력 평화시위를 견지했다. 이는 3.1운동이 일반적으로 비폭력 저항의 대표적인 사례처럼 인식되고, 4월 혁명이 학생들에 의한 질서 있는 시위로 알려진 것과 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3.1운동, 4월 혁명, 6월 항쟁의 실상을 ‘비폭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 세 사건 모두 실제로는 평화적 시위와 함께 폭력적이고 격렬한 시위가 뒤

섞여 전개되었다.

6월 항쟁의 시작인 6.10대회를 준비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는 이 대회에 다수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시위에 있어 ‘비폭력 평화주의’ 원칙을 특별히 강조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6.10대회는 물론 이후 15일까지 이어진 명동성당농성에서도 학생들은 질서와 비폭력을 강조하며 시민과의 유대에 신경을 썼다(서중석, 2011: 264, 347). 그러나 실제 투쟁에서 비폭력의 원칙은 부분적으로만 관철되었다. 6월 10일 이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시위들은 대부분 국본과 큰 관계가 없었다. 학생들의 비폭력 원칙도 경찰의 폭력 진압 앞에서 계속 유지되기 힘들었다. 일례로 6월 18일 최루탄추방대회 당시 공식적으로는 ‘비폭력’이 강조되었으나, 3~4천명의 학생들은 자체 무장을 하고 미도파백화점 앞에 배치된 전경 7백여 명과 격렬한 투석전을 벌였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시위 당시 시민들이 학생들의 ‘비폭력’ 구호에 반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6월 17일 대구에서 경찰의 최루탄 발사가 많아지고 사과탄까지 날아오자 시민들이 학생들의 “비폭력” 구호에 강력히 항의한 바 있었다(서중석, 2011: 386, 397). 광주와 목포, 순천 등에서도 고등학생과 시민들이 무장 시위를 적극 주장했으며, 부평과 수도권 공단 지역의 야간, 심야 시위를 주도한 노동자들 역시 시위 과정에서 폭력적이고 격렬한 양상을 드러냈다(김원, 2009: 170).

비폭력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폭력 시위가 병행되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6월 19일 대전에서는 경찰에 맞선 시위대 5백여 명이 방범초소를 파괴했고, 2천여 명의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지며 횃불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파출소도 습격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위자 6명이 버스 1대를 탈취한 뒤 대전역 앞 경찰기동대를 향해 돌진하여 3명의 전경이 중상을 입고 그 중 1명은 결국 사망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서중석, 2011: 423~424). 그러나 이러한 시위대의 폭력보다 더 부각된 것은 경찰의 폭력이었다. 이미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무자비한 국가폭력과 학살을 자행한 바 있었다. 이때 광주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하여 국가폭력에 맞서는 저항폭력의 정당성을 보여줬다. 이를 계기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과거 방어적 민주화운동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권력의 폭력에 대응하여 보다 전투적이고 조직화된 운동방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물론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폭력적 저항방식은 항시 논란을 야기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력적 수단과 수위가 강화된 국가폭력의 상대성에 기인한 결과였다. 1980년대 국가권력의 권위나 정당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저항폭력은 부당한 국가폭력에 항거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이동운·박준식, 2008: 41~42). 6월 항쟁의 폭력 시위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폭력 시위와 병행되었던 것이다.

6월 항쟁 중에서도 특히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에서 국가폭력의 폭압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전두환 정권은 이 집회를 직선제 개헌 수용 여부의 마지막 시험대로 생각하고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분쇄하고자 했다. 반면 국본과 학생운동권은 이 집회가 명칭 그대로 ‘국민평화대행진’이 되도록 평화적 시위에 각별히 신경썼다(서중석, 2011: 487~489). 덕분에 6.26대행진 당시의 시위는 대규모였지만 과격함이 적었고 전반적으로 폭력을 자제했다. 이날 가장 격렬하게 시위가 전개되었던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대는 차도점검투쟁, 경적 유도를 통해 시민을 끌어내는 데 힘을 기울였다. 최루탄 발사에 투석 등으로 대항하기보다 흩어졌다 다시 모여 구호를 외치는 방식을 택했다. 이날따라 유난히 과격하

고 폭력적이었던 경찰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서중석, 2011: 487~489, 532~533).

6월 항쟁의 평화 시위는 정권의 폭력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정권의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것은 박종철을 죽게 만든 '고문'과 더불어 이한열을 쓰러트린 '최루탄'이었다. 6월 항쟁 기간 동안 총 67만 발의 이상의 최루탄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은 '최루탄 정권'으로 불렸다. 최루탄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정권이라는 의미였다. 이러한 국가폭력의 폭압성 속에서 비폭력 시위 주장은 항쟁의 정당성을 강화시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폭력의 폭압성 앞에서 무조건 비폭력을 주장하는 것이 시위의 열기를 식히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6월 항쟁 당시 비폭력과 평화에 대한 과도한 호소가 국가의 실체를 중립적 조정자로 희화화했으며, 결국 국분을 비롯한 운동 지도부는 평화적 시민 항쟁이라는 명분 아래, 밑으로부터 펼쳐 일어나고 있던 대중의 의식을 가두려 했던 87년 항쟁의 '숨겨진 배신자'라는 신랄한 평가 나오기도 했다(김원, 2009: 171).

3.1운동 역시 비폭력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고 폭력적인 시위가 곳곳에서 전개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 육군성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1919년 “4월 상순에 이르러 (시위가) 창궐을 극해 군청, 면사무소, 경찰관서, 헌병주재소의 습격, 민가와 면사무소의 파괴 방화, 교량의 파괴 소각 등 온갖 폭행을 감행”하였으며, 그 결과 “거의 내란과 같은 상태가 조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만세시위가 절정에 이르는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에는 폭력을 수반한 항일 투쟁이 절반을 차지하였다. 만세시위에서 강력한 항일투쟁을 주도한 것은 농민이었다(배성준, 2009: 297~298).

3.1운동 당시 시위대의 파괴적 폭력은 주로 주재소, 면사무소, 우편소 같은 식민통치기구와 면장, 순사 같은 식민통치의 대행자에게로 향했다. 주재소와 면사무소는 식민통치의 말단집행기관으로 농민의 원망과 불만이 집중되는 곳이었다. 반면 일본인 소학교나 일본인 가옥이 파괴되었을 뿐 지주에 대한 공격은 행해지지 않았다. 이처럼 파괴적 폭력이 식민통치기구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만세시위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부정이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배성준, 2009: 304~305). 이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 시위대가 비폭력의 구호를 넘어 정당방위의 수단으로 보도블록을 깨고 화염병을 만들어 파출소와 민정당사 지구당, 지방 KBS와 MBC 건물을 습격하고 경찰차와 시위 진압에 동원된 소방차를 불태운 것과 일맥상통한다(박준성 2016: 187).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그 제1목표는 언제나 권력의 파수꾼 혹은 하수인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었다.

그러나 3.1운동이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권력을 탈취하고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조직적이고 혁명적인 무장투쟁은 아니었다. 지방에서 일어난 3.1운동은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대중동원에 성공한 일종의 대중적 사회운동이었다. 따라서 그 저항 역시 대부분 만세를 부르고 행진을 하거나 철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허영란, 2009: 318~319).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만세시위를, “이미 독립이 이루어졌다” 또는 “독립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인식 속에서 마치 ‘축제’처럼 전개하였다. 그래서 3.1운동 당시 평화적 시위로 일관했던 것이 65% 정도였다.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는 일제당국이 만세 고창 수준의 시위를 용인하는 경우도 있었다(조경달, 2009: 243~246). 전반적으로 도시의 만세시위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시위대 중 일부가 전차발전소에 돌을 던지거나 헌병주재소

를 공격하기도 했지만, 도시에서 폭력 투쟁이 계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었다(김정인, 2009: 153~155). 반면 농촌 시위는 보다 폭력적인 양상을 띠었다. 이는 보통 일제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에 대한 자구책이었지만, 처음부터 폭력 시위를 계획한 경우도 있었다(김정인, 2009: 155~157). 이는 통문, 격문, 전신, 봉화, 산호 같이 농민봉기에서 사용되던 전통적인 수단이, 여전히 농촌에서 3.1운동 전파와 결집의 수단으로 주요하게 활용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배성준, 2009: 309). 3.1운동 당시 농촌에서 벌어진 만세시위에는 과거 민란, 농민봉기의 전통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4월 혁명에서는 ‘낮 시위’와 구별되는 ‘밤 시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낮 시위와 밤 시위의 구별은 1960년 3월 15일 1차 마산항쟁 때부터 분명하게 나타났다. 3월 15일 부정선거 당일 낮에는 주로 민주당원들과 학생들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다. 4월 11일 2차 마산항쟁의 낮 시위도 비교적 질서 있게 진행되었다. 시위대는 매우 격양돼 있었지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밤이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1차와 2차 할 것 없이 마산의 밤 시위는 매우 과격한 양상을 보였다. 시위대는 관공서, 그중에서도 파출소 같은 곳을 보이는 대로 때려 부셨고 심지어 고의는 아니었다고 하나 불을 지른 경우도 있었다. 밤 시위에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다. 그 중에는 교복 입은 학생들도 있었지만 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소년들도 많았다. 젊은 청년들도 역시 많았다. 이들은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챙겨 나와 그것들을 이용해서 경찰과 싸웠다. 어떤 기록에는 시위대가 경찰의 총까지 탈취해서 싸우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듯, 낮 시위와 밤 시위는 분위기와 양상이 사뭇 달랐다. 그리고 훨씬 격렬했던 밤 시위가 4월 혁명을 격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4월 혁명의 하이라이트인 4월 19일 ‘피의 화요일’의 대규모 시위에서도 학생들의 질서 있는 시위와 구별되는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날 시위대 중 격양된 무리들은 정부기관이나 어용 신문사, 반공회관 등에 불을 질렀다. 낮에도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 그 열기는 밤에 더 뜨거워졌다. 1980년 5·18 당시 광주처럼, 1960년 4월 19일 서울에서도 시위대가 파출소에서 무기를 꺼내 무장한 사례까지 있었다. 이들은 계엄령 선포 후 출동한 군과 대치했는데, 다행히도 계엄군이 유혈진압 대신 설득을 선택하면서 4월 20일 새벽 무장 시위대는 큰 충돌 없이 자진 해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위대 중 200명가량은 해산 후에도 주변 지역을 휘젓고 다니면서 공공기관이나 자동차 등을 때려 부셨다. 같은 날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부산과 광주에서도 과격 시위 양상이 나타났다.

이승만이 국민들에 의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4월 26일도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하루였다.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쌓였던 울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흥분한 군중들은 동대문경찰서 등을 습격했고, 이에 경찰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발포가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다. 서울뿐 아니라 대전이나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폭동에 가까운 상황들이 발생했다. 군중 가운데 일부는 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집단 원정을 떠나기도 했다. 4월 26일은 ‘승리의 화요일’이었지만 하루 내내 굉장히 격양된 상황을 겪어야만 했다.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억누르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준 권력에 대한 분노를 강하게 표출했다. 그래서 이승만의 하야 성명이 나오자마자 권력과 관련된 기관이나 대상을 때려 부수고 불을 질렀던 것이다(오제연, 2017: 228~239). 이렇듯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폭력과 비폭력의 문제는 항상 긴장관계를 갖고 배합되어 있었는데, 폭력이 행사될 경우 그 대상은 언제나 권력과 관련한 기관이었다. 따라서 단순히 시위 양상이 폭력이나 비폭력이나

를 따지기에 앞서, 그것이 억압적 권력에 맞서 전개된 한국 민주화운동에 얼마나 조용하였고 실제로 어떤 효과나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고려하여, 정당성 문제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4. 주체

1) ‘최대 연합’으로의 결집

1987년 6월 항쟁이 직선제 개헌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모든 세력이 공통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결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최대한 끌어냈기 때문이다(이영제, 2010: 148). 6월 항쟁 당시 민주화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를 내걸고 최대 다수가 연합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민주화 세력의 결집이다. 민주화 세력으로는 야당, 재야, 학생운동권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세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상은 조금씩 다른 면이 있었다. 학생운동권의 경우 내부에서도 NL과 CA 같은 정파에 따라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었다.

1960년 4월 혁명 이후 반독재 민주화운동에서 학생운동의 역할은 매우 컸다. 그래서 1960~80년대를 ‘학생운동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1960년대 ‘6.3항쟁’과 ‘3선개헌반대투쟁’을 거친 후 1970년대부터는 협소화된 제도정치의 틀을 넘나들며 민주화운동을 수행하는 재야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반면 야당은 독재정권에 대한 타협적 태도로 인해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1980년대도 마찬가지였다. 학생운동은 광주 비극을 기억하며 보다 급진화 하였고, 1984년 유화국면 이후 부활한 학생회 조직을 이용해 대중적인 저변을 확대하였다. 재야 역시 19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을 결성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개신교, 가톨릭 등 종교계도 이전보다 더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야당은 1980년대 전반기까지 정부여당의 ‘2중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85년 2월 12일 총선에서, 정치규제에서 막 풀린 과거 야당 세력들을 중심으로 급조된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제1야당으로 급부상한 ‘신한민주당’은 김영삼, 김대중 양김의 실질적 영향력 속에 ‘직선제 개헌’을 전면에 내걸고 국회 안팎에서 적극적인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다. 전두환 정권은 신한민주당에 대한 강온 양면 전술을 통해 민주화 세력의 결집을 차단하고자 했다. 하지만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호헌조치는 야당과 재야, 그리고 학생운동권 등 민주화 세력이 결집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우선 야당은 선명한 민주화 세력들을 중심으로 ‘통일민주당’으로 재편되어 보다 강력한 직선제 개헌 투쟁에 나섰다. 그 다음 야당과 재야는 1987년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를 탄생시켰다. 국본이 출현함에 따라 이미 만들어진 충북, 부산, 전북, 전남, 대구·경북 등의 도 단위 연합체가 명칭을 재조정했다. 그리고 이후 국본 충남본부, 국본 경남본부, 국본 강원본부가 만들어졌다. 경남 울산지부, 전북 익산지구 등 하부단위 지방지부가 결성된 곳도 있었다. 다른 지역은 대개 그 지

역 실정에 맞게 연합체나 협의체 등을 구성해 6월 항쟁에서 국본의 결정이나 지침을 따랐다. 학생운동 세력은 공식적으로는 국본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국본의 지역조직에 학생회연합조직이 가입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양자가 긴밀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서중석, 2011: 262~263).

국본이 제시한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개헌’ 슬로건은 모든 민주화운동 세력이 6월 항쟁에 한 목소리로 동참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매개체였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개헌’은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주체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교집합, 즉 ‘최소강령’이었다. 특히 1986년 일련의 선도적 투쟁으로 대중과 멀어졌던 학생운동권이 1987년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대협)’를 중심으로 소위 ‘대중노선’으로 입장을 선화한 것이 최소강령을 통한 ‘최대 민주화 연합’ 결집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87년 당시 학생운동의 주류였던 NL계열은 학회와 합법적 학술·문화제를 활성화하고, 초보적인 문화선동대를 조직하였으며, 학생회 출범식을 투쟁 선포식이 아닌 대동제와 축제 형식으로 조직하였다. 국본 역시 이러한 민주화운동의 상황을 고려해 요구 수준과 투쟁 방식을 크게 하향 조정했다(김원, 2009: 160). 6월 항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항쟁 참여자들이 공유한 공통의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해 결집한 참여자들의 통합성에 있었다(정해구·김혜진·정상호, 2004: 18).

민주화 세력의 결집과 함께 주목해야 하는 것이 6월 항쟁에 광범한 중산층이 동참하고 또 지지를 보냈다는 사실이다. 중산층이 처음부터 항쟁에 결합한 것은 아니었다. 6월 항쟁에서 ‘중산층’은 조직화되지 않은 주권자로서 ‘국민들’이었고, 운동세력과 대비되는 ‘개인들’ 또는 ‘시민들’이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학생운동권, 재야, 야당의 소극적 지지자였으나 점차 적극적 지지자로, 그리고 참여자로 변해갔다(이영제, 2010: 148~151). 중산층의 광범위한 참여와 지지가 가능했던 것 역시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개헌’이라는 슬로건이 갖는 공감대와 통합성에 기인했다.

외적으로 국제적인 냉전과 남북분단이 상존하고, 내적으로 강력한 억압력을 가진 반공국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민주화운동은 오히려 운동의 고립과 파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6월 항쟁 당시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한국 민주화운동이 소수 엘리트에 의한 권력 장악이라는 혁명적 방식이 아니라, 다수 대중의 동참 하에 권력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이에 항의하는 대중운동 방식을 추구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정해구, 2010: 37~38). 직선제 개헌 쟁취라는 6월 항쟁의 성과는 이러한 노선이 당시 정세에서 큰 효과를 발휘했음을 증명한다.

1919년 3.1운동 때는 투쟁을 주도할 연합적 조직 틀이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흔히 ‘민족대표 33인’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있었다. 주로 개신교와 천도교 등 종교계 기반을 가지고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사회지도층으로 명망이 있던 이들 ‘민족대표’는, 그러나 3.1운동의 준비만을 책임지고 운동의 시작과 동시에 일선에서 탈락했다. 오히려 그들은 조선의 민중들을 ‘어리석고 천박하다’ 여기며 민중들에 의해 시위가 격화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소위 민족대표들이 3.1운동을 주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단,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3월 1일의 첫 시위가 개신교와 천도교의 기반이 강했던 한반도 북부지방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각 종교별 조직망을 이용해 만세시위가 준비되고 실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족대표들이 3.1운동의 시작부터 탈락했을 때, 그들을 대신한 것은 근대 학문과 지식의 세례를 받은 지식인과 청년 학생들이었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거나 서울로 유학 왔던 지식인과 청년 학생들은 각종 선언서와 유인물, 그리고 시위 경험을 전국적으로 전파하는데 기여했다. 이들이 참여하는 각지의 시위 주도 조직은 대개 비밀결사의 형태를 띠었다. 비밀결사는 주로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 종래의 교분을 활용하여 결성되었다. 시위가 일상화되면서 도시락을 싸들고 원거리 시위에 참가하는 ‘만세꾼’이라는 전문 시위 참여자들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다. 그밖에 식민지 치하에서 권력으로부터 소외와 박탈감에 시달리던 유림들이 지역 유지로서 3.1운동에 참여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식민 권력 최말단에 있던 이장(구장)이나 지방관리까지 시위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훈장이 시위를 주동하기도 했다. 누구든 조직하고 참여하는 대중적 자발성, 그것이 3.1운동의 전국화, 일상화를 가능케 한 힘이었다(김정인, 2009: 158~163).

3.1운동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집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만세’, ‘대한(조선)독립 만세’의 슬로건이 큰 역할을 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개헌’ 슬로건이 최소강령으로서 사람들을 최대한 결집시킬 수 있었다면, 1919년 3.1운동의 ‘만세’, ‘대한(조선)독립 만세’의 슬로건은 그것이 갖는 다의성 때문에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다. 3.1운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만세’, ‘대한(조선)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그 실제 의미는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는 이미 독립이 된 줄 알고 만세를 외쳤고, 어떤 이는 독립만 외치면 곧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만세를 외쳤다. ‘독립’의 의미도 서로 달랐다. 어떤 이는 1910년 이전에 존재했던 ‘대한제국’의 복귀를 생각하며 독립을 외쳤고, 어떤 이는 제국이나 왕국이 아닌 공화정과 같은 새로운 정치체제를 꿈꾸며 독립을 외쳤다. 심지어 나라의 독립과 상관없이 현재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 해결되리라는 유토피아적 희망과 욕구 속에서 독립을 외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낯설기조차 했던 ‘만세’라는 단순한 구호를 외치면서 사람들은 3.1운동에 급속히 결집할 수 있었다. 서먹해 하던 이들에게도 ‘만세’란 몇 번 부르면 입에 붙는 구호였다. 감염의 효과는 신속하고도 광범위했다. 사람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세를 불렀다(권보드래, 2015: 205~207).

1960년 4월 혁명의 경우 ‘국본’이나 ‘서대협’ 같은 연합조직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각 학교 별로 ‘학도호국단’이 존재했다. 이 학도호국단은 명백히 관제조직이었지만, 막상 4월 혁명 때에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별 학도호국단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학도호국단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하향식 조직이다 보니, 1950년대 내내 지속된 관제데모 과정에서 각 학교 학도호국단 간부들 사이에 일정한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4월 혁명의 효시라 할 수 있는 2.28대구학생시위 당시 시위 전날 경북고, 대구고, 경북사대부고의 학도호국단 간부 10명이 회합을 갖고, 일요일 등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 3월 14일 밤에 서울에서 전개된 고등학생 시위도 서울 시내 야간고등학교의 학생호국단 간부들이 주도한 것이었다. 4월 19일 대규모 시위 때도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대학 간 사전 협의가 비공식적으로 있었다 한다.

4월 혁명의 슬로건은 3.1운동이나 6월 항쟁과 같이 단일하지 않았다. 3.15부정선거 직전 고등학생들이 벌인 시위에서는 주로 ‘학원의 자유’가 요구되었다. 3.15부정선거 직후 1,2차 마산항쟁 때는 ‘부

정선거 다시 하라'와 '책임자 처벌'이 주로 외쳐졌다. 4월 19일 대규모 시위 때도 시위대는 앞서 언급한 구호들을 주로 외쳤지만, 동시에 '이승만 하야' 구호도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피의 화요일'을 경험한 후 4월 25일을 전후로 마산과 서울에서 '이승만 하야'가 구호가 전면으로 등장했다. 4월 26일 '승리의 화요일'에는 한목소리로 '이승만 하야'를 외쳤다. 이렇듯 4월 혁명의 슬로건은 사태의 급박한 진전 상황에 맞추어 그 수위가 높아져가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4월 혁명이 애초 급진적 요구를 갖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더불어, 혁명적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사태 진전에 조용하는 슬로건의 변화가 사람들을 최대도로 끌어 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준다.

2) 결집된 주체(시민/민족)의 균열

1987년 6월 항쟁은 흔히 '시민항쟁'으로 평가받는다. 즉 6월 항쟁은 87년 이후 시민운동의 주체가 되는 근대적인 '시민'들의 탄생과정이었으며 실질적 '시민사회'의 탄생과정이었다는 것이다. 6월 항쟁을 거쳐 탄생한 시민/시민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반 아래 직선제 개헌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계급을 초월하여 결집한 계급 연합의 성격을 가졌다. 한국 사회에서 근대적 의미의 시민이 언제 탄생했는가는 논쟁적인 문제다. 19세기 말 근대로의 이행기에 이미 시민의 맹아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고, 4월 혁명을 통해 시민이 탄생했다는 주장도 있다(서진영, 2016: 13~18). 하지만 시민의 탄생 시점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6월 항쟁을 시민항쟁으로 규정하기에는, 그 속에 단순히 시민항쟁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급진운동으로서의 성격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사실이다(조희연, 2002: 88~89).

이는 6월 항쟁 참여자들을 '시민'과 같이 계급을 초월하여 결집한 단일한 주체로 규정하는 통념에 대한 비판을 가능케 했다. 1987년 민주화 과정의 주체로는 한편으로 학생, 종교계, 재야, 야당 그리고 '넥타이 부대'라고 불린 중산층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1960년대 이후 시민 사회 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권리조차 박탈당했던 민중 그리고 노동자 계급이 존재했다. 6.29선언으로 직선제 개헌 약속을 받아들인 뒤 이 투쟁을 이끌었던 일단의 시민들은 일상으로 복귀했다. 반면 그동안 병영적 노동 통제와 비인간적 차별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1987년 7·8·9월 동안 거리와 작업장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불리는 두 사건은 연속적이지 않았다. 6월 항쟁에서도 노동 기본권과 민중 생존권이라는 항목이 거리에서 함께 외쳐졌지만, 그 목소리는 호헌 철폐와 직선제 개헌이라는 큰 목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한마디로 '시민'이라고 불리는 주체는 실제로는 통합적인 주체도, 용어도 아니었던 것이다(김원, 2009: 150~151).

6월 항쟁에서 발견되는 결집된 주체의 균열은 3.1운동이나 4월 혁명에서도 모두 발견되는 현상이다. 3.1운동에 대한 성격 규정에서도 두 가지 견해가 맞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3.1운동은 신분제 잔재의 한계를 뛰어 넘는 거족적인 항일투쟁으로서 근대 한국 민족 형성의 결정적인 계기로 평가받는다. 3.1운동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결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3.1운동에서 민족(주의)의 형성을 보는 견해는 만세시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간과하기 쉽다. 만세시위에 참가한 농민은 대부분 공동체적 연대에 머물렀으며 일부가 지역적 연대로 나아갔을 뿐이다. 참가자 모두 '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그 의미는 다층적인 것이었다. 식민통치기구가 공격의 주된 대상이었지만 이는 식민통치가 공동체의 삶을 직접 위협했기 때문이었다. 3.1운동 당시 농민의 주체 형성은 농촌공동체를 기반으로 식민통치자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본다면 만세시위에서 농민 주체의 형성이란 파편화된 민중 주체의 형성이지 민족 주체의 형성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배성준, 2009: 312~313).

4월 혁명의 경우 그동안 학생들이 주도한 혁명으로만 인식되었다. 4월 혁명의 주인공은 명백히 학생, 그 중에서도 대학생이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혁명의 주체로 등장한 것은 4월 혁명이 클라이막스로 향해 달려가는 4월 18일이 되어서였다. 그동안 시위는 주로 고등학생들이 주도했다. 결정적으로 4월 혁명은 학생들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승만 정권에 큰 타격을 가한 격렬한 시위들은 대부분 학생이 아닌 구두담이, 날뽕팔이, 신문배달부 등 도시하층민에 의해 일어났다. 단지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언어’로 남길 수 없어 역사 속에서 제대로 기억되지 못했을 뿐이다.

3.1운동, 4월 혁명, 6월 항쟁에서 발견되는 ‘결집된 주체의 균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단 성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 민주화운동은 ‘지배 대 저항’ 혹은 ‘민주 대 반민주’라는 이분법에 의해 강하게 규정되었다. 항쟁 당시는 물론, 사후적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이분법은 투쟁의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하며 역량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분법의 당위 문제를 떠나 ‘억압적·반민주적 권력에 대한 저항·민주화 투쟁’이라는 구도는 엄연한 역사적 실체와 성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배와 저항’, ‘민주 대 반민주’의 이분법 속에서 저항주체의 결집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속에 역시 실재하고 있었던 여러 균열지점들을 간과했던 것도 사실이다.

6월 항쟁을 시민항쟁으로만 볼 경우, 호헌 철폐나 직선제 개헌 뒤에 가려진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한 6.29선언 이후 중산층의 항쟁 이탈 및 무관심은 6월 항쟁이 정치적/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1운동의 경우 민족적 결집이 곧바로 흔들리며 타협적 세력들은 1920년대 자치운동과 같은 민족개량주의로 빠져 민족 역량을 분열시킨 반면, 3.1운동으로 각성된 민중의 진출은 새로운 사회주의 사조와 결합하여 본격적인 계급운동으로 발전했다. 4월 혁명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하야 직후 대학생 등 엘리트들이 도시하층민의 격렬한 저항을 ‘혼란’으로 규정·비판하며 소위 ‘수습활동’에 앞장섰다. 이는 구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혁명적 방법으로 혁명의 목표를 달성’하려 한 보수 세력에게 힘을 실어줬다. 여전히 자유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개헌하여 결국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 일련의 과정은 환언하면 4월 혁명의 실질적 후퇴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민주화운동의 균열지점들은 3.1운동, 4월 혁명, 6월 항쟁 당시 ‘최대 연합’으로의 주체 결집이 갖는 역사적 한계와 더불어, ‘지배 대 저항’, ‘민주 대 반민주’의 이분법이 갖는 인식론적 문제점을 함께 보여준다.

5. 맺음말

한국 민주화운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난 역사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성찰이 3.1운동, 4월 혁명, 6월 항쟁을 청산적이거나 허무주의적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곤

란할 것이다. 3.1운동 때 많은 한국인들은 거리/광장에 나와 함께 ‘대한(조선)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 구체적 의미가 모호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식민 통치에 대한 분노를 함께 표출하는 행위였다. 이러한 공통의 경험 속에서 사람들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일체감, 동질감을 확인했다. 만세를 외치는 시위행렬 가운데서 민중은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스스로를 동일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족이라는 집단적 주체와의 동일시 경험은 민중의 가슴과 뇌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1920년대에 보이는 전국 각 지역사회의 활성화 에너지는 그러한 흔적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3.1운동은 민족 주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민중이 그 모습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낸 사건이었다(허영란, 2009: 336~338). 식민지기 민족과 민중이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별개의 것도 아니었다.

4월 혁명이 이승만 정권을 끝내 무너트릴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학생들의 선도적이고 조직적인 참여가 우선적인 요인이었다. 그러나 학생의 힘만으로 혁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도시하층민의 시위결합과 이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전개한 급진적인 시위형태는 결국 시위대와 독재정권 사이의 대립을 화해불가능한 적대적 대립으로 만들었다. 학생, 지식인들의 설득력 있는 호소력이 결합된 조직된 시위와 이들이 만들어낸 시위공간에 부정형적으로 참여한 도시하층민의 자발적이고 급진적인 시위는 서로 불과 기름의 관계처럼 작용하면서 시위를 혁명적 성격으로 발전시켰다(이승원, 2009: 201). 서로 다른 기반 위에 있던 학생과 도시하층민이 실제 4월 혁명의 과정에서는 상호보완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도 이와 같은 3.1운동과 4월 혁명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6월 항쟁에서 시민과 노동자 등 민중이 명확히 구분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설사 양자가 구분되었다 하더라도 6월 항쟁의 광장과 거리에서 이들은 함께 싸우고 있었다. 당시에는 일부 급진적이고 선진적인 운동지도층을 제외한 대다수 일반 대중들이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을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6.29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이 약속되었을 때 모두가 그것을 승리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최소한 6월 항쟁의 국면에서 시민과 민중의 지나친 구분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같은 시민이라 할 지라도 중산층과 노동자 등 민중은 그 기반과 환경, 요구하는 바가 달랐다. 이는 6월 항쟁 직후 이어진 7·8·9월 노동자 대투쟁 당시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노동자 대투쟁은 6월 항쟁의 결과 새롭게 창출된 민주화 공간 속에서 벌어진 별개의 예기치 않은 사건이었다(정해구·김혜진·정상호, 2004: 119~121, 199~200). 따라서 노동자 대투쟁의 균열상이 6월 항쟁의 주체 결집 그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단지 6월 항쟁 당시 ‘최대 민주화 연합’으로의 주체 결집이 갖는 일시적 특성과 근본적 한계를 보여줄 뿐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처음부터 민중영역과 이러한 긴장관계 및 균열지점을 갖고, 또 이를 극복하며 나아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1987년 6월 항쟁의 경험과 기억이다. 현행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3.1운동과 4월 혁명은 숭한 균열지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후 지속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 속에서 한국 민주화의 소중한 역사적 경험과 기억으로 자리매김했다. 6월 항쟁의 경험과 기억 역시 정치적/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뤄내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구성되어야 한다. 다양한 주체들이 결집해 한목소리로 ‘탄핵’을 외쳤지만 사실은 그 속에 각기 다른 생각, 욕구, 이해(利害)가 잠재되어 있는 오늘날 촛불항쟁의 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1919년 3.1운동과 1960년

4월 혁명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을 비교 검토하는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 권보드래. 2015. 「'만세'의 유토피아-3.1운동에 있어서 복국(復國)과 신세계」. 《한국학연구》, 제38집.
- 김상태 편역. 2001. 『윤치호 일기 1916~1943: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 시기』. 역사비평사.
- 김원. 2009. 『87년 6월 항쟁』. 책세상.
- 김정인. 2009. 「기억의 탄생: 민중 시위 문화의 근대적 기원」. 《역사와 현실》, 제74호.
- 박준성. 2016. 「1987년 6월항쟁은 무엇이었나?」. 《내일을 여는 역사》, 제63호.
- 배성준. 2009. 「3.1운동의 농민봉기적 양상」. 박헌호·류준필 편.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서중석. 2011. 『6월 항쟁』. 돌베개
- 서진영. 2016. 「한국 정치에서 시민의 기원: 4.19 혁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학위논문.
- 성혜령. 1990. 「제5공화국의 교육통제와 교육기구의 역할」. 이종태 편. 『분단시대의 학교교육』 2. 푸른나무.
- 오제연. 2014. 「1960~1971년 대학 학생운동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오제연. 2017. 「민주화의 숨은 주역을 찾아서」. 박태균 외. 『쟁점 한국사-현대편』. 창비.
- 이동윤·박준식. 2008. 「민주화과정에서 저항폭력의 정당성-5.18 광주 시민군의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1호.
- 이승원. 2009. 「'하위주체'와 4월 혁명: '하위주체'의 참여형태를 통해 본 민주화에 대한 반성」. 《기억과 전망》, 제20호.
- 이영제. 2010. 「6월항쟁과 민주주의 이행」. 한국정치연구회 편. 『다시보는 한국 민주화운동: 기원, 과정, 그리고 제도』. 선인.
- 이정은. 2015. 「3.1운동 연구 100년-인식 재확대를 위하여」. 《유관순 연구》, 제20호.
- 이준식. 2010. 「민족해방운동의 유산과 민주화운동」. 안병욱 편.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논리』. 선인.
- 전명혁. 2001. 「식민지 시대 민족해방운동의 근대적 성격과 민주주의」. 조희연 편.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 집.
- 정해구. 2010. 「한국민주주의의 전개와 그 특징」. 한국정치연구회 편. 『다시보는 한국 민주화운동』. 선인.
- 정해구·김혜진·정상호. 2004.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조경달·허영란·윤희. 2009. 『민중과 유토피아』. 역사비평사.
- 조희연. 2002. 「87년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 《기억과 전망》, 제1호.
- 최종철. 1989. 「교육제도의 개편과 국가의 사회통제-7.30교육개혁조치를 중심으로」. 『분단시대의 학교교육』. 푸른나무.
- 허영란. 2009. 「3.1운동의 지역성과 집단적 주체의 형성: 경기도 안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헌호·류준필 편.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우마코시 토루(馬越 徹). 한용진 윤희. 2001. 『한국 근대대학의 성립과 전개-대학 모델의 전파 연구』. 교육과학사



민주화 30년,
6월항쟁과 촛불혁명

2-2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 반복과 차이¹⁾

손호철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1. 들어가며

올해로 역사적인 6월항쟁이 30주년을 맞는다. 오늘 이 토론회를 비롯하여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수많은 자유들(“빨갱이 타도”를 외치는 태극기부대의 집회의 자유까지를 포함하여)은 바로 이 6월항쟁에 빚지고 있다. 사실 우리의 현대사는 6월항쟁을 기준으로 해서 ‘민주화이전 시기’와 ‘민주화이후 시기’로 나누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역사적인 6월항쟁 30주년을 맞아 우리는 역사적인 또 한 번의 항쟁을 경험하고 있다. 그것은 최초의 현직대통령의 탄핵과 박정희체제의 ‘뒤늦은 종말’을 가져온 ‘11월시민혁명’ 내지 ‘11월촛불

1) 나는 이 글의 청탁을 받고 취지에 공감해 쓰고 싶었지만 끝까지 망설였다. 그것은 김영란법 때문이다. 최근에 알게 됐는데, 김영란법은 교수들에게 모든 외부강의, 기고, 학회 발표, 토론 등 외부학술활동을 사전보고하거나 사후 이틀 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고 있다(김영란법 시행 6개월 동안 법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의 74%가 이 같은 외부강의 등 신고불이행과 늦장 신고였다). 물론 고액강의 등 특혜는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종합소득신고 때 국세청에 다 보고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를 정부가 모니터링하거나 필요하면 규정 이상의 고액강의 등만 보고하게 하면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외부학술활동을 보고하게 한 것은 학자들의 모든 지적 활동을 국가가 보고받고 통제하려는 반학문적이고, 반헌법적인 ‘1984년’의 현실화이다(사실 이 규정이 가진 장점은 국정원이 이 같은 정보수집을 할 필요가 없어서 국정원 예산을 줄여도 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쓸 경우 ‘1984년’식 악법에 내 자신이 순응해 이 발표를 보고하거나, 아니면 내 양심에 따라 보고를 거부하고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하기 때문에 글을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고민 끝에 6월항쟁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양심적 범법자’가 되는 대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법을 반인권적 악법으로 고발하기로 결심하고(이미 고발했다) 이 글을 쓰기로 수락했다.

혁명'이다(나는 이번 항쟁에 대해 초기에는 '광화문항쟁'이라고 불렀지만 '11월시민혁명'이 올바른 용어라고 생각한다. 우선 광화문이 중심지이지만 87년 6월항쟁처럼 전국적 항쟁이라는 점에서 '11월항쟁'이 더 적합한 표현이며 시민들이 단순한 박근혜퇴진을 넘어 헬조선 탈피 등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항쟁보다는 '시민혁명'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²⁾. 주목할 것은 박근혜 게이트와 '11월촛불혁명'이 일어난 시점이다. 이 혁명이 기이하게도 1987년 6월항쟁 30년을 앞두고 일어났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바라보는 사회과학자로서 나의 심정은 기쁘면서도 슬프다. 우리의 시민이, 사회운동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아니 더욱 발전하고 성장했다는 점에서 기쁘다. 그러나 동시에 6월항쟁이 30년이나 지나서도 유신시대나 있을법한 블랙리스트가 우리를 옥죄어왔고 그동안 정치권은, 언론은,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몇 달간 거리로 뛰어나와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다. 이 글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11월촛불혁명과 6월항쟁을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6월항쟁과 11월시민혁명

6월 항쟁과 11월시민혁명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두 위대한 투쟁을 1) 원인 내지 배경, 2) 주체, 3) 목표, 4) 투쟁방식, 5) 결과를 중심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가. 배경(원인)

87년 6월항쟁은 왜 일어났는가? 이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이다. 박정희는 72년 종신집권을 위해 유신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통해 그전까지의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관변단체가 선출하도록 만들었다. 박정희가 암살당한 뒤에도 전두환은 80년 봄 학생들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피의 학살로 진압하고 이 같은 반민주적 제도를 계승했다. 87년 전두환의 임기만료가 다가오면서 야당과 민주시민들은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인 대통령선출권을 요구하며 정부와 충돌했다. 한마디로, 87년 6월항쟁은 야당과 민주시민들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요구를 전두환정권과 군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유례없는 촛불혁명, 즉 '11월시민혁명'은 왜 일어난 것인가? 표면적으로 그 원인은 최순실

2) 투쟁이 11월을 넘어 12월로 이어져 '2016년시민혁명'이 더 적합할 수 있으나 2017년에도 이어졌다는 점에서 항쟁이 본격화된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11월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너무 길어서 그렇지, 정확한 이름은 '2016-17년촛불혁명'일 것이다). 이번 항쟁에 대해 11월시민혁명이 아니라 광화문항쟁이라고 부른 나의 초기의 글은 "광화문항쟁,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프레시안] 2016년 11월 16일자. 이후 11월시민혁명으로 보고 분석한 책은 손호철, [촛불혁명과 2017년체제], 2017로 이 글의 11월촛불혁명 부분은 이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의 국정농단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계이트이다. 그러나 이는 피상적 분석에 불과하고 87년 6월항쟁과 달리 그 이유는 보다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분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회적 시간을 ‘단기지속’, ‘중기지속’, ‘장기지속’으로 나누고 이것을 각각 ‘사건사’, ‘복합국면사’, ‘구조사’로 이론화한 한 역사학자의 분석이다(Braudel, 1971: 11-42).

딱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촛불혁명에도 비슷한 세 층위가 작동하고 있다(손호철, 2017: 22-23). 물론 가장 표층인 ‘사건사’적인 면에는 박근혜계이트가 있다. 그러나 박근혜계이트역시 단순히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측근비리로 치부할 수 없다. 박근혜는 ‘박정희신화’ 덕으로 대통령에 올랐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로부터 재벌과의 유착, 공작정치, 공권력의 사유화 등이 보여주듯이 철저하게 박정희의 유신적 통치에 기반해 있다. 따라서 박정희체제가 자리잡고 있다.

중간수준에는 단순히 박근혜를 넘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불완전한 정치적 민주화’(87년 헌정체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는 박근혜계이트정도는 아니지만 김영삼, 김대중 등도 김현철 계이트, 김홍업·홍걸계이트 등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 표가 보여주듯이 87년 6월항쟁 이후 우리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권위있는 프리덤하우스 평가에 의하면 4등급에서 1.5등급으로 진전했으나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 왔고 특히 이명박, 박근혜정부 들어 후퇴해 왔다.

표 1.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1)	노무현(2), 이명박근혜	박근혜
	1980	1987	1988-2003	2004-2013	2014-16
정치적 자유	5	4	2	1	2
시민 권리	6	4	2	2	2
평균	5.5	4	2	1.5	2

손호철, 2017: 41

이 점에서 표층적 원인(박정희체제), 중간수준의 원인(제왕적 대통령제와 불완전한 민주화)에 관한 한, 11월시민혁명은 6월항쟁과 관련이 있다. 즉 ‘6월항쟁의 미완성’에 따른 박정희체제의 유제의 지속, 그리고 불완전한 정치적 민주화가 결국 11월촛불혁명으로 폭발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심층에는 단순한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넘어서 97년 IMF경제위기 이후 전면화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체제(97년체제)에 의해 생겨난 헬조선, 흡수저 세습제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존재 그 자체가 특혜 그 자체로 박근혜계이트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조롱처럼 "돈 많은 부모 만난 것도 실력"인, 아니 "돈 많은 부모 만나는 것이 최고의 실력"인 헬조선에 대한 분노이다. 사실 얼마 전 있었던 세계지도자들의 모임인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인 국제기구 옥스팜의 총재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적인 양극화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촛불시위는 (정치적 사건이야기 보다는)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경제적 사건"이라고 논평했다(〈중앙일보〉, 2017년 2월1일자).

표 2. 한국의 양극화추세

	군사독재	민주화 (노태우, YS 시기)	민주화 + 신자유주의 세계화(1) (DJ, 노무현 시기)	민주화 + 신자유주의 세계화(2) (이명박) (박근혜)
	(80-86년 평균)	87 93 97 평균	98 99 07 평균	평균 평균 (13-14년)
도시근로자	.310	.306 .281 .291 .291	.316 .320 .324 .315	.316 .308
전 가구 (국제기준)		.298	.358 .344 .346	.341 .330

손호철, 2017: 54

이해를 돕기 위해, 투쟁의 배경내지 원인이라는 면에서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을 비교한 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 원인 비교

	6월항쟁	11월촛불혁명
원인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표층-박근혜게이트 (박정희체제) 중간-제왕적 대통령제와 불안정한 정치민주화(87년 헌정체제) 심층-헬조선에 대한 분노(97년 신자유주의 체제)

나. 전개과정

그러면 6월항쟁과 11월시민혁명은 각각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특히 누가 주체였으며, 규모는 어떠했고, 투쟁방식과 목표는 어떠했는가?

1) 주체와 규모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의 참가규모의 비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우선 이번 촛불과 달리 6월항쟁의 경우 참가인원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게다가 당시의 산출방식과 이번의 산출방식이 같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자료를 중심으로 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번 촛불혁명의 경우 12월 3일 제 6차 촛불에 최고인원인 232만 명이 참가했으며 작년 10월 19일 제 1차 촛불로부터 올해 3월까지 21차 촛불집회까지 다섯 달 동안 연인원 1684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반면에 30년 전의 항쟁은 그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 최대참가규모에 대해 이를 주도한 지도부는 6월 26일 민주헌법쟁취 대행진에 130만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주요저서를 쓴 역사학자는 이 같은 숫자가 과장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서중석, 529-530쪽). [현대근현대사사전등은 이날 전국 33개 도시와 4개 군읍지역에서 1백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쓰고 있고 언론들 역시 이번 촛불혁명을 과거의 운동과 비교하며 그 이전까지의 최대참가집회는 6월26일의 100

만 명인 것으로 상정하고 이 숫자와 이번 촛불참여인원을 비교했다.

그러면 6월항쟁의 연참여인원은 어떠한가? 이에 대한 믿을만한 자료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한 시사사전은 6월항쟁이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시위에서 이한열열사의 비극적 죽음을 기화로 촉발되어 6월 10일 호헌철폐 국민대회, 6월 26일 민주헌법쟁취대행진으로 거쳐 군부의 항복선언인 6.29선언까지 20여 일 동안 500여만 명이 참여했다고 쓰고 있다([시사상식사전]). 즉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은 최대참가인원에서 각각 100만 명과 232만 명, 연참가인원에서 각각 500만 명과 1684만 명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나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의 참가인원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1987년과 2016-17년의 인구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987년 우리의 인구는 4160만 명 이었지만 2016년 말 우리인구는 5140만 명으로 약 25% 늘어났다. 즉 1987년의 인구는 현재의 80%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87년 참여규모를 현재와 비교하려면 25%정도 높게 평가해주어야 한다. 결국 이 같은 인구의 차이를 고려해 참가규모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총참가인원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참가인원/인구의 비율을 계산해 이를 비교해야 한다. 이를 비교하면 최대집회의 경우 6월항쟁은 인구의 2.5%가, 11월촛불혁명은 4.3%가 참가했고, 연인원으로는 6월항쟁이 인구의 12%가, 11월 촛불혁명은 32%가 참가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이들 시위참가자들, 시위주도자들은 누구였는가? 우선 지도부를 보자면 6월항쟁은 정치사회의 제도야당들과 시민사회의 민중운동단체 등이 합작해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를 구성해 운동을 주도했다. 여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민통련 등 민중운동단체들이지만 종교계와 지역운동단체 등과 민주협, 통일민주당 등 정치권이 참여했다. 11월시민혁명과 비교하기 위해 참가단체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국본 발기인이 종교계 683명, 재야단체 343명, 지역 352명, 정치인 213명 등 2191명이었다(학단협, 1997: 128).

이번 촛불혁명의 경우 민주노총 등 전통적인 ‘민중운동단체’들과 세월호 4.16연대, 참여연대 등 (뉴라이트계열의 냉전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무려 23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을 구성해 퇴진투쟁을 주도했다. 이 같이 87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지난 30년간 우리의 시민사회가 그만큼 많이 성장하고 조직화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시민사회의 성장을 반영해,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폭 확대된 것 이외에 이번 투쟁이 갖는 중요한 특징은 그 지도부에 정치권을 배제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6월항쟁은 야당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11월 촛불의 경우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경우 처음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자유주의적 야당들의 경우 일부는 거리를 두는 등 그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 일반참가자들은 누구인가? 참가주체라는 면에서 중요한 특징은 87년의 경우 학생운동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번 촛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학생들이 다수 참여했고, 중고등학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이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우리는 학생운동이 한국현대사에서 사회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해 왔고 이를 일제하 광주학생운동 등 ‘역사적 전통’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해방정국에서 학생운동이 전혀 중심적 역할을

못한 것을 생각하면 잘못된 이해이다. 한국현대사에서 학생운동이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은 한국전쟁 등으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계급운동 등이 사라졌기 때문이지 역사적 전통 때문이 아니다. 또 계급운동, 시민운동들이 성장하면서 학생운동은 ‘주변적 운동’으로 밀려난 것이다).

둘째, 이번 촛불의 주체는 학생도 조직화된 세력도 아니고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 ‘시민’ (퇴진행동의 한 지도자의 포현을 빌리면 “자유롭지만 위태로운”³⁾ 개인으로서의 시민)들이었다. 물론 퇴진행동 소속단체들의 많은 조직원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나 절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조직화되지 않은 시민들이었다. 그렇다고 87년의 경우 시민들이 주요한 주체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학생들만이 아니라 벡타이부대 등 일반시민들도 항쟁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에 대해 중산층이 주도한 것인가, 아니면 ‘민중’이 주도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하다(학단협, 1997: 107-182). 그러나 민중은 단순히 노동자, 농민, 빈민 같은 기층민중만이 아니라 중산층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이분법이다. 그리고 서울 도심의 경우 근무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점심시간 등에 벡타이부대가 다수 참여했지만 공단지역과 퇴근시간이후에는 노동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셋째, 87년에 대해 이런 촛불의 경우 연령층, 직업군, 성별 모든 면에서 참여의 폭이 넓어졌다. 여성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됐으며 청소년과 노인들의 참여도 크게 늘어났다.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의 참가자 조사(이지호, 2017과 이현우 등, 2017)에 따르면 전체참여자중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었고 주부도 근 20%를 차지했다. 연령도 60대 이상이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87년의 시민과 2017년의 시민을 비교한다면 지금의 촛불시민들이 ‘집단지성’으로 무장되고 훨씬 발전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87년의 경우 군사독재에 저항해 시위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용기’는 87년이 더 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6월항쟁의 경우 6월 26일 하루만 해도 368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6월항쟁과 11월시민혁명 주체, 규모 비교

	6월항쟁 (1987년)	11월시민혁명 (2016-17년)
인구	4160만 명	5140만 명
지속시간	20여일	5개월 (실제 촛불집회일 20여일)
최대참가인원	100만 명(?) (2.5%)	232만 명 (4.3%)
참가연인원	500여만 명 (12%)	1684만 명 (32%)
주도단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국본)-야당참여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퇴진행동)-야당불참
중심세력	학생, 시민(벡타이부대, 노동자 등)	일반시민(범위 확대) (여성, 노인, 종교생 등)
정치권	야당 적극참여	진보정당-적극 참여, 보수야당-양면적

3)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위태로운.

2) 목표와 투쟁방식

그러면 6월항쟁과 11월시민혁명은 투쟁목표와 투쟁방식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가) 목표

6월항쟁의 목표는 단순하다. 즉 대통령직선제의 쟁취였다. 나아가 이 같은 민주헌법을 통통해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물론 국본 출범선언문은 단순한 직선제쟁취를 넘어서 “집시법, 언기법, 형법과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 노동법 등 모든 악법의 민주적 개정과 무효화 범국민운동을 실천한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대중집회, 유인물, 구호 등에 활용되지 못했다(서중석, 2011: 640). 당시 많이 사용했던 “민주헌법 쟁취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서중석, 2011: 285)는 구호가 6월항쟁의 목표를 가장 잘 집약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촛불투쟁도 어찌 보면 그 목표가 단순하다. 그것은 촛불투쟁을 주도한 조직의 명칭이 잘 보여 주듯이 박근혜의 퇴진이다. 그러나 이번 투쟁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바란 것은 단순한 박근혜의 물리적 퇴진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우리사회의 변화라고 보아야 한다. 사실 퇴진행동역시 박근혜의 물리적 퇴진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누적된 적폐의 청산을 투쟁목표로 내걸었고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사망사건 특검, 성과퇴출제 폐지, 국정교과서 퇴출, 사드배치 중단, 언론독립을 청산해야할 6대적폐로 지목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투쟁했다(손호철, 2017: 71).

나아가 이번 촛불은 사회혁명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질서의 변혁은 아니더라도 헬조선을 벗어나려는 투쟁이기도 했다. “내안의 박근혜와 내 옆의 최순실에 분노하고 사람을 돈이나 자신들의 소유물로 보지 않고, 사람을 돈과 이익으로 환산하지 않고, 독립된 존재로 보는 세상”, “어쩔 수 없이 경쟁 속에서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는 진주 집회에서의 10대청소년의 발언이나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식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주장 등이(손호철, 2017: 97)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바로 이 같은 특성 때문에 6월항쟁과 달리 이번 촛불은 촛불혁명이라고 봐야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아래 논의 참조).

나) 투쟁방식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은 시민들이, 대중이, 민중이 ‘제도정치’ 내에서의 투쟁방식(‘최소주의적 방식’)을 넘어서 거리로 달려 나와 소위 ‘최대주의적 투쟁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차이가 있다. 11월촛불혁명은 철저하게 비폭력적 투쟁방식을 고수한 반면 6월항쟁은 그렇지 않았다.

6월항쟁에서 시민들은 나름대로 방어적 ‘대항폭력’을 행사했다. 투석전은 일상적이었고, 파출소점거, 경찰버스 방화, 경찰서 방화, 보도용 차량 방화, 방송국 화염병 투척 등으로 파출소장이 중화상을 입는가 하면(서중석, 2011:371) 버스로 경찰을 공격해 전경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

다(서중석, 2011: 424). 6월 26일 하루 동안에만 경찰소 2개소, 파출소 29개소, 민정당 지구당사 4개소가 파괴내지 방화되어 3467명 연행됐다([한국근현대사 사진]). 특히 주목할 것은 학생들이 시민으로부터 유리되지 않기 위해 비폭력을 외쳤지만 오히려 시민들이 비폭력 거부하고 대항폭력을 선택했다는 사실이다(서중석, 2011: 616).

그러나 이번 촛불의 경우 일부 시위참여자들이 돌출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오히려 시민들이 이들을 강하게 규율했고 철저하게 비폭력을 고수했다. 두 투쟁의 이 같은 투쟁방식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집권세력의 대응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6월항쟁의 경우 전두환정부가 항쟁에 대해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폭력적 방식으로 이를 진압하려 하면서 시민들도 이에 대항해 최소한의 자구적인 대항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번 촛불의 경우 경찰과 정부가 촛불투쟁에 대해 평화적으로 대응하면서 촛불투쟁역시 과격한 폭력적 방식을 피할 수 있었다.

투쟁목표와 투쟁방식이라는 면에서 위에서 비교한 6월항쟁과 11월시민혁명의 특징, 나아가 또 다른 주요 항쟁들인 5.18민중항쟁과 4.19학생혁명의 특징을 요약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한국주요항쟁 투쟁목표, 방식 비교

투쟁방식 목표	최소주의 (제도정치내의 투쟁)	최대주의 1 (평화적 거리투쟁)	최대주의 2 (대항폭력적 거리투쟁)	최대주의3 (대항폭력적 무장투쟁)
최소주의 (제한적인 정치적 목표)			(경찰-폭력) 6월항쟁 (직선제+ 민주정부수립)	(군-폭력) 5.18민중항쟁 (계엄철폐+ 민주정부수립)
중간수준 (최소주의+ 일정한 사회개혁)		(경찰-비폭력) 11월시민혁명 (퇴진+적폐청산+ 탈핵조선)	(경찰-폭력) 4.19학생혁명 (이승만퇴진+ 민주정부수립+ 진보변혁)	
최대주의 (근본적인 사회변혁)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등 사회혁명

항쟁의 경과라는 면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번 촛불혁명과정에서 터져 나온 ‘보수시민’들의 탄핵반대시위 문제이다. 물론 6월항쟁 당시에도 87년 4월 전두환이 발표한 4.13호헌선언(직선제 개헌요구에도 불구하고 간선제를 고수하겠다는 선언)에 대해 전경련, 한국노총 등 여러 단체들이 지지선언을 했다. 그러나 6월항쟁 당시 직선제개헌투쟁에 대항해 직선제개헌에 찬성하는 ‘보수시민’들의 시위는 없었다.

그만큼 지난 30년 동안 뉴라이트의 등장 등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분화됐다는 이야기, 특히 냉전적 보수세력이 조직화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념과는 무관한 부패범죄의 문제를 자신들이 살기 위해 “보수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한 좌파빨갱이들의 음모”로 몰고 간 수구엘리트들의 망국적인 선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 결과

이제 마지막으로 항쟁의 성과내지 결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성과라는 면에서 6월항쟁과 11월 촛불혁명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이와 관련, 주목할 것은 역사적인 이번 촛불혁명의 지휘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박근혜퇴진에 일등공신의 역할을 한 퇴진행동 핵심관계자의 평가이다. 구체적으로 퇴진행동의 공동대변인역할을 했던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번 촛불혁명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4.19혁명은 핏빛혁명이자 미완의 시위”였고 “5.18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 승리였지만” “200명이 학살당하고...7년간 패배”였으며, “6월항쟁은 노태우대통령이 당선됐으니 죽 써서 개 준 꼴”이라면 이번 혁명은 “비폭력으로 탄핵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역사상 유례 없는 완성된 혁명”이라는 것이다([뉴시스], 2017.5.21.). 이 같은 평가는 박근혜퇴진을 이끌어낸 핵심 실무자의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자로서 나의 평가는 이와 조금 다르다.

이 평가는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의 비교라는 이 글의 주제를 넘어서 4.19학생혁명과 5.18민중항쟁의 비교로까지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안처장의 문제제기를 따라가 이 넷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우선 안처장의 4.19와 이번 촛불을 혁명으로 보고 있고 5.18과 6월항쟁을 혁명이 아니라 항쟁내지 민주화운동으로 보고 있다. 이 점에서는 나도 의견을 같이 한다. 문제는 항쟁과 혁명의 차이이다. 즉 단순한 항쟁과 구별되는 혁명의 고유한 특징이 무엇이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이다. 즉 “짧은 시간에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행위”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부른다(Skocpol, 1979).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혁명은 정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사회혁명은 단순한 정치혁명을 넘어서 사회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혁명은 항쟁을 좀 더 ‘폼 나게 보이고’ 더 많은 의미가 갖게 만들기 위한 레토릭이나 미사여구가 아니다.

이 같은 기준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직선제 개헌과 민주정부수립을 요구했던 6월항쟁이나 유신철폐와 민주화를 요구했던 5.18민중항쟁을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다. 특히 5.18은 4.19를 넘어서 무장투쟁이라는 훨씬 극단적인 투쟁방식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4.19와 달리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반면 4.19는 단순히 이승만의 퇴진을 넘어서 (이승만 퇴진 이후) 한국전쟁 학살자 명예회복, 남북 평화통일운동, 민주노조운동 등 빠르게 급진화되어 우리 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혁명’으로 성격지을 수 있다(사월혁명연구소편, 1990). 물론 이 같은 투쟁은 5.16쿠데타에 의해 좌초함으로써 4.19는 ‘미완의 혁명’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이번 촛불을 단순히 퇴진행동의 명칭처럼 단순히 박근혜퇴진 투쟁으로 보고 박근혜퇴진으로 그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즉 “완성된” 것으로 본다면 이번 투쟁은 6월항쟁, 5.18항쟁처럼 단순한 ‘항쟁’(11월촛불항쟁)이지 ‘혁명’이라고 볼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촛불의 원인에는 박정희정부로 상징되는 우리의 ‘고장난 대의민주주의’, 나아가 헬조선에 대한 대중

의 분노가 자리 잡고 있고 위에서 지적했듯이 여러 참가자들은 공개발언을 통해 이들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이 점에 주목하여 개인적으로 이번 촛불을 촛불항쟁이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부른 것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퇴진행동 스스로 이번 투쟁의 목표중의 하나를 적폐청산으로 보고 사드배치 철회 등 6대 적폐 청산을 주요과제로 내걸고 투쟁했다. 이는 퇴진행동도 이번 촛불의 목표가 단순히 박근혜 개인의 탄핵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번 촛불이 한국역사상 최초로 “완성된 혁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실 촛불의 목표를 단순히 박근혜퇴진으로 좁게 보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완성된 것, 성공한 것이라고 본다면, 6월항쟁 역시 그 일차적인 목표인 직선제개헌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완성된 것, 성공한 것이다.

이번 촛불을, 나아가 지나간 주요 항쟁들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최소한 세 수준에서는 분석해야 한다. 하나는 직선제 개헌, 박근혜퇴진과 같이 좁은 ‘1차 목표’들이다. 두 번째는 민주정부수립, 적폐청산 같이, 이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2차 목표’들이다. 세 번째는 진보적인 사회변혁, 탈헬조선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사회변화라는 ‘근본적 목표’이다. 바로 이 세 번째 목표가 ‘항쟁’과 ‘혁명’을 구별하는 분기점일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볼 때 5.18은 1차적 목표에서부터 패배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민주화와 한국전쟁 이후 사라진 진보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된다. 6월항쟁은 첫 번째 수준(1차 목표)에서는 성공했지만 양김의 분열로 군부통치종식과 민주정부수립이라는 두 번째 목표(2차 목표)에서는 실패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한계도 많았다. 4.19학생혁명은 단순한 이승만타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그 점에서 ‘혁명’이었다. 그리고 이승만타도라는 1차 목표,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2차 목표는 성공하지만 마지막 목표인 진보적 변혁은 5.16에 의해 실패하고 미완의 혁명으로 남게 된다.

그러면 이번 촛불은 어떠한가? 우선 박근혜탄핵이란 1차 목표는 달성됐다. 그리고 2차 목표와 관련해 6월항쟁과 달리 정권교체와 ‘자유주의’ 정부(이명박, 박근혜정부를 ‘독재정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비되는 ‘민주정부’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고 ‘보수정부’와 대비되는 ‘자유주의정부’이다) 수립에는 성공했지만, 적폐청산과 대의민주주의의 발본적인 개혁은 아직 미지수이다. 물론 문재인정부가 기대이상으로 잘하고 있고 취임하자마자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는 등 적폐청산에 나섰다. 그러나 보수세력의 반발, 국제정치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사드배치 등 6대적폐 청산은 장담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이번 촛불을 단순한 촛불항쟁이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는 헬조선의 탈피는 더더욱 미지수이다. 사실 새 정권이 신자유주의를 계속하는 한 헬조선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박근혜계이트로 수그러들었던 박정희신화는 다시 살아나고 ‘제 2의 박근혜’가, 한국판 트럼프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손호철, 2017: 121).

이 점에서 11월시민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성의 현재진행형의 혁명’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번 촛불을 단순히 박근혜탄핵 투쟁으로 보는 경우, ‘혁명’이 아니라 ‘완성된 항쟁’, ‘성공한 항쟁’(11월촛불항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6월항쟁과 11월촛불혁명 결과 비교

	'항쟁'		'혁명'	
	5.18민중항쟁	6월항쟁	4.19학생혁명	11월촛불혁명
1차 목표	X(계엄철폐)	O(직선제개헌)	O(이승만 퇴진)	O(박근혜 퇴진)
2차 목표	X(민주정부수립)	X(군부통치종식, 민주정부수립)	O(민주정부수립)	O(민주정부수립) ?(적폐청산)
근본목표			X(진보적 변혁) -미완의 혁명	?(탈헬조선) -현재진행형
장기적 결과	민주화, 진보의 부활	민주화(OX)	민주화	

3. 나오며

마르크스의 글 중에 자주 인용되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헤겔은 어디에선가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은 두 번 반복한다고 썼는데 다음과 같은 것을 덧붙이는 것을 잊어버렸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반복한다”(Marx, 1979: 103). 그의 표현대로 박정희가 비극이었다면 박근혜는 희극이다. 나아가 박정희를 무너트린 부마항쟁은 양김의 분열속에서 12.12쿠데타와 5.18학살을 통해 비극으로 끝이 났다. 또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이어받은 제 5공화국과 군사독재는 6월항쟁에 의해 끝장났지만 그 결과는 또 다시 양김의 분열 속에서 노태우의 승리라는 비극으로 끝이 났다.

마르크스의 정식이 맞다면 박근혜를 무너트린 11월촛불혁명은 희극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촛불혁명은 희극으로 끝나서도, 4.19학생혁명, 부마항쟁, 6월항쟁과 같이 비극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11월시민혁명을 성공한 혁명으로 만들어야 한다. 11월시민혁명은 다행스럽게도 일단 6월항쟁과 달리 ‘민주정부’ 수립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4.19학생혁명도 ‘민주정부’ 수립까지는 성공했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이번 촛불혁명도 마찬가지다. 이번 촛불혁명의 진정한 성패는 지금부터에 달려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아직 촛불을, 최소한 가슴속의 촛불은 끌 수가 없다. 촛불이여 영원하라!



- 김원. 2009. [87년 6월항쟁]. 책세상
- 사월혁명연구소편. 1990.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1]. 한길사

- 서중석. 2011. [6월항쟁]. 돌베개
- 손호철. 2017. [촛불혁명과 2017년체제: 박정희, 87년, 97년 체제를 넘어서]. 서강대 출판부
- 이지호. 2017. “‘박근혜촛불’, 누가 왜 참여했나?”. 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 심포지움 발표논문
- 이현우외. 2017. [촛불과 시민]. 책담(근간)
-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학술단체협의회. 1997.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1]. 당대
- 한국사사전편찬회. 2005. [한국근현대사사전]. 가람기획
- Braudel, Fernando. 1972. "History and Social Science: the longue duree". in P. Burke et al. eds. Economy and Society in Modern Europe. Routledge
- Marx, Karl. 1979.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Collected Works Vol. 11. International Publishers
- Skocpol, Theda. 1979.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Cmbridge Univ. Press